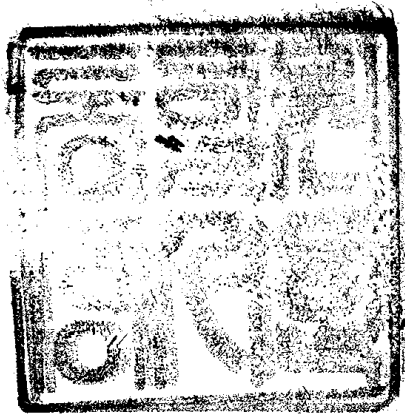


2-1-140291
2103
統分 92-12-62

北韓·統一問題 學術研究 論文集



統 一 院

이 論文集은 統一院이 推進하는 「統一問題 學術研究 支援」事業에 의해 提出된 論文들을 收錄한 것입니다.

收錄된 論文에서의 主張은 統一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닙니다.

目 次

- ◇ 北韓體制的 政治·經濟的 強弱點 分析
具本學(韓國國防研究院 前任研究員) 3

- ◇ 北韓政權의 對南戰略에서 나타나는 民族的 動機와 김일성의 「民族主義」: 分析, 批判, 對應理論
安正秀(慶熙大 教授) 89

- ◇ 韓半島 周邊 4強의 利害와 政策展望
徐鎮英(高麗大 教授) 165

北韓體制的 政治・經濟的 強弱點 分析

具 本 學(韓國國防研究院 前任研究員)

目 次

| | |
|---------------------------------------|----|
| I . 序 論 | 7 |
| 1. 問題의提起 | 7 |
| 2. 研究의 目的 | 8 |
| 3. 資料의 問題點 | 10 |
| II . 北韓 政治·經濟體制의 發展過程 | 12 |
| 1. 北韓政權의 樹立, 1945-1950 | 12 |
| 2. 社會主義 體制 構築, 1953-1960 | 17 |
| 3. 政治·經濟的 試鍊과 軍事力 建設, 1961-1970 | 20 |
| 4. 國際情勢 變化와 北韓의 對應, 1971-1980 | 24 |
| 5. 김정일 後繼體制와 經濟開放化, 1981-1992 | 28 |
| III . 北韓體制의 政治·經濟的 特性 | 34 |
| 1. 全體主義 1인獨裁體制 | 34 |
| 2.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 36 |
| 3.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 국가 | 39 |
| 4. 集團主義에 기초한 統制的 組織社會 | 43 |
| 5.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 | 45 |
| 6. 閉鎖的 自給경제체제 : 자력갱생 | 48 |
| IV . 北韓 政治·經濟體制의 強點 | 53 |
| 1. 政治的 측면 | 53 |
| 2. 經濟的 측면 | 60 |
| V . 北韓 體制의 政治·經濟的 弱點 | 64 |
| 1. 政治的 측면 | 64 |
| 2. 經濟的 측면 | 68 |

| | |
|-----------------------|----|
| VI. 結 論 | 75 |
| 1. 北韓體制의 變化 가능성 | 75 |
| 2. 北韓의 對南政策 展望 | 78 |
| 3. 우리의 對北政策 方向 | 80 |
| <附 錄> | 82 |
| <參考文獻> | 85 |

I . 序 論

1. 問題의 提起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 및 동구 공산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는 冷戰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으며,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동독, 루마니아 등 동구 사회주의 諸國 들은 經濟管理體制의 分權化, 生産力 所有關係의 多元化, 民主主義的 意思決定體制의 도입,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어 지난 1992년 1월에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연방이 해체되고 개혁을 추구하는 獨立國家聯合(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이 탄생되었다. 또한 中國도 1972년 닉슨 미대통령의 방문 이후 서구와의 교류를 꾸준히 지속시켜 왔으며, 1979년 덩소평이 집권한 이후 부터는 西歐의 기술·자본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소련, 동구 및 중국에서의 변화는 2차대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알타체제」에 종식을 고하고 脫冷戰의 「新國際秩序」라는 유동적인 상황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의 신생국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세력을 확장하던 “思想體系 그리고 政治運動으로서의 社會主義는 확실히 위기를 맞고 있다”¹⁾고 하겠다.

북한도 이러한 공산주의 諸國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최초의 북한의 반응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南北對話의 추진 및 非共產國家들과의 교류를 증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근본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김일성이 北韓의 歷史的 經驗에 기초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대외

1) Ralph Miliband, "Socialism in Question," Monthly Review, vol. XXXII, no. 10(March 1991), p. 26.

정책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對外貿易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1984년 1월에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이어 9월에는 외국자본의 대북유치를 위한 「합영법」을 공포하여 대외경제교류 증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변화는 8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 되어, 1991년 9월 17일에는 南北韓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나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우리식 대로 살아나가자!」 또는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체제의 고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소련 및 동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개혁으로 나갈 것인가? 중국에서와 같이 사회주의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성을 유지한채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갈 것인가? 본 연구는 단편적이거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한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北韓體制의 政治·經濟的 強·弱點을 분석하여 우리의 올바른 對北政策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제국의 붕괴, 중공의 개방,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으로 우리사회에서는 統一에 대한 樂觀論이 대두되었으며, 學界에서도 한국에 의한 북한 吸收統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초 북한의 「核問題」가 대두되면서 南北經協이 일

시중단되는 등 남북관계의 전반에 걸쳐 冷氣流가 형성되었으며, 南北關係의 再照明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는 크게 두부류의 시각이 있다. 첫째 부류는 北韓의 崩壞에 대해 매우 樂觀的으로 생각하는 시각이며, 북한이 社會主義 崩壞라는 時代的 潮流와 북한 내부의 政治·經濟的 矛盾으로 인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²⁾ 둘째 부류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否定的으로 판단하는 視角이다. 이들 부정적인 시각에 의하면, 북한이 비록 改革과 開放을 시도하겠지만 그들의 정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改革·開放으로 한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³⁾

또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肯定的인 視角과 否定的인 視角이 있다. 긍정적인 시각은 북한의 변화가 주체사상의 수정을 비롯한 위에서부터의 점진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北韓體制의 硬直性과 閉鎖性의 副作用, 自立經濟의 限界, 社會主義圈의 變化, 反美意識의 減少, 남북관계의 진전 등으로 인하여 漸進的 改革이 불가피하며, 唯一指導體制의 수정으로 발전될 것이라 주장한다.⁴⁾ 이에 반하여 否定的 視角은 북한이 비록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지만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북한식 사회주의 모델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 주장한다.⁵⁾

이상과 같은 논쟁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冷戰構造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에 의하여 북한을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중 어느것이 옳으나를 밝히는데

2) Aidan Foster-Carter에 의하면 한반도는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1995년에 통일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Special Report, no. M212, 1992.

3) Bon-Hak Koo,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4) 이종석, "북한 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의 조건",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편),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서울: 형상사, 1991), pp.72-111.

5) 김남식, "동구의 충격, '주체사상' 변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편), 「상계서」, pp.55-70.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가능한 한 價値中立的인 입장에서 북한을 평가하고 우리의 적절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2장에서는 北韓體制의 發展過程을 시기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여, 제3장에서 기술할 北韓體制의 政治·經濟的 特性을 도출하는데 근거를 제공하려 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정치·경제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北韓體制의 政治·經濟的 強·弱點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며, 제6장은 結論으로서 향후 北韓體制의 變化 可能性, 北韓의 對南政策方向, 그리고 우리의 對北政策 方向에 대해서 논의하려 한다.

3. 資料의 問題點

북한연구에 있어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자료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출판된 원자료들을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자료의 빈곤으로 인하여 북한연구 자체가 위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북한에서 출간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빈곤 현상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특히 經濟統計資料에 있어서는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및 서방학자들은 북한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순히 對外宣傳을 위한 것이거나 對內政治體制維持를 위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經濟 部門에서의 통계자료는 絕對的 수치가 아닌 相對的 수치를 발표한다거나 經濟指標의 비일관성, 생략 등으로 인하여 신뢰성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하는 모든 자료가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든가 과장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그 자료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⁶⁾

6) 북한 통계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논의는 정상훈, “북한 경제 연구: 일련의 방법론적 고찰”, 박문정 외(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5-32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김일성선집」, 「김일성저작선집」, 「로동신문」, 「근로자」, 「조선중앙년감」 등 북한에서 발간된 1차 자료들이며, 둘째는 국내외의 정보기관, 전문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간된 북한관계자료들이다. 비록 이들 자료들이 서로 상충되는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면밀하게 관찰하면 어느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II . 北韓 政治 · 經濟體制의 發展過程

北韓은 세계에서 가장 고유한 형태의 政治 ·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은 46년간이나 獨裁體制를 유지하여 왔고, 이제 그 권력을 김정일에게로 이양시키려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本章은 北韓의 政治 · 經濟體制가 걸어온 歷史的 經驗들을 고찰함으로써 다음章에서 논의할 북한체제의 정치 · 경제적 특성을 도출하는데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려 한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설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蘇聯軍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시대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北韓政權의 樹立, 1945—1950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日帝의 植民地에서 벗어나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는 어떻게 국가를 건설하며, 또한 어떻게 民族的 一體感을 형성하면서 社會體制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 하는 문제였다. 國家建設(state building)에 있어서는 蘇聯 占領軍의 주도에 의한 정부기구의 조직, 民族的 一體感 形成(nation building)에 있어서는 親日分子의 제거 및 自主獨立에 대한 열망고취, 社會體制建設(society building)에 있어서는 토지개혁,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사회 · 경제적 개혁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하였다.

가. 蘇聯軍에 의한 社會主義體制 樹立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이 발표될 때 蘇聯軍은 이미 북한에 진주하여 있었

다. 이로서 한반도를 38도선에서 분단하여 남쪽은 美軍이, 북쪽은 蘇聯軍이 日本軍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聯合軍側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 1)가 발표되기도 전에 蘇聯軍에 의한 북한의 통치는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다. 蘇聯 점령군은 1945년 8월 26일의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해 나갔다.¹⁾

蘇聯 점령군은 1945년 10월 8일 중앙행정기구 수립을 위한 이북 5도의 임시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북조선5도행정국」을 설립하였다. 당시 蘇聯軍은 共產化의 초기단계에서 민족진영 인사와의 협력이 불가피함을 알고 조만식선생을 5도행정국의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실제로 「5도행정국」을 움직인 사람은 소수의 蘇聯 정치군인과 김일성을 위시하여 만주항일유격대 출신들을 포함한 蘇聯에서 입북한 재소한인들이었다. 형식상 蘇聯 점령군 당국은 民族陣營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척했으나 신탁통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불화를 노정시키기 시작했다. 蘇聯 軍政當局은 1946년 1월 4일 그동안 蘇聯의 정책노선에 반대해 왔던 조만식 선생을 감금하여 모든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民族陣營을 無力化시켰다. 이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김일성을 위원장에 임명하여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나갔다.

이와 같이 行政的 統制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蘇聯 점령군 당국은 공산당을 조직하여 북한에 대한 政治的 統制를 장악하려 하였다. 북한 지역에서 최초의 공산당 조직은 해방 이튿날인 8월 16일 북한지역의 토착공산주의자였던 현준혁에 의해 결성된 평안남도 공산당 지역위원회였다. 곧이어 북한 전역에서 朝鮮共產黨 分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준혁은 1945년 9월 28일 「로마네펬코 사령부」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피살됨으로써 토착공산주의 세력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었고, 10월 13일 蘇聯 점령군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조선공산당북조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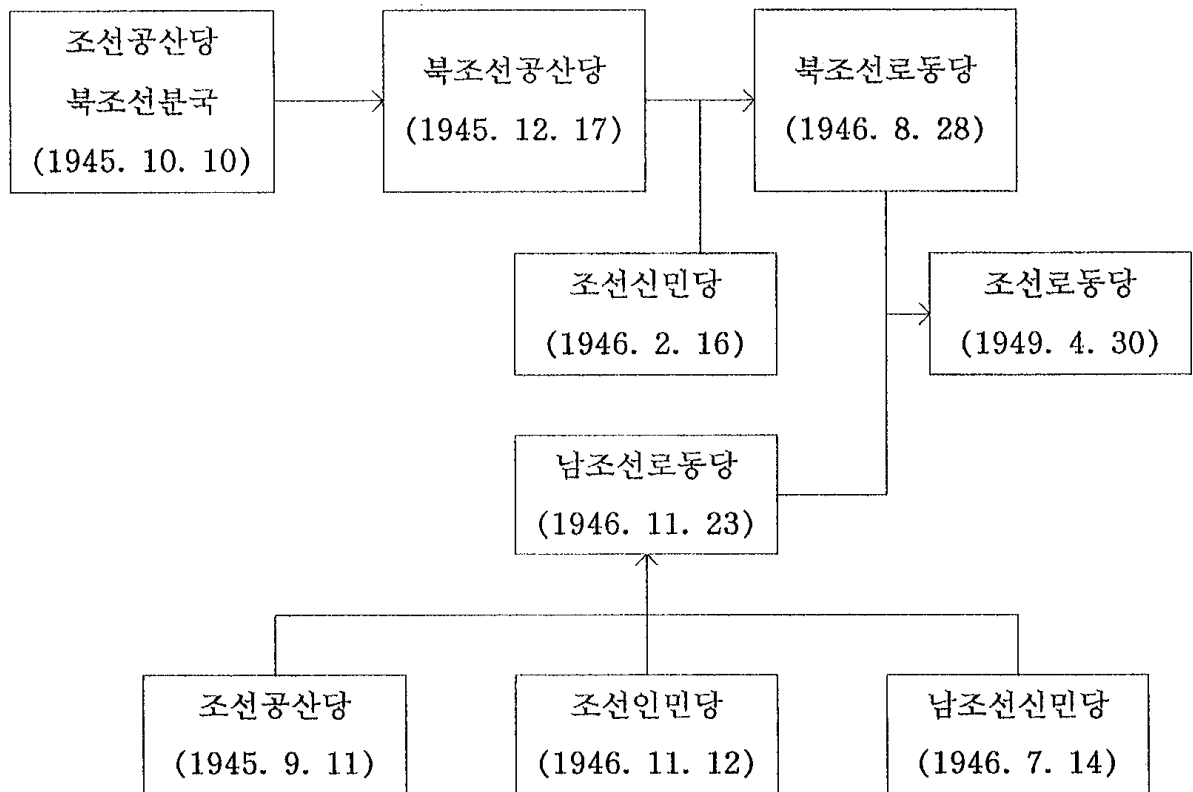
1)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은 주로 로마네펬코(Andrei A. Romanenko) 소장과 그의 밑에서 민간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이그나티에프(Alexandre M. Ignatiev)대령의 지도와 감독아래 이루어졌다. 점령군 사령관 치스차코프(I. M. Chistiakov)대장과 그의 참모장 펜코프스키(V. A. Penkovsky)중장이 점령업무 전반을 지휘했고, 행정장교 레베데프(N. G. Lebdev)는 점령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9-72.

국」을 설립하는데 성공하였다.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은 제3차 확대회의를 소집하여 김일성을 당책임비서로 선출하였고 당명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이는 남한에서 박헌영이 주도하는 「조선공산당」과의 공식적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蘇聯은 북한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소비에트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1946년 8월 28일 「북조선 공산당」은 김두봉과 연안파에 의해 1946년 2월 16일 결성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창당하였고, 이후 1949년 6월 30일 남한에서의 공산활동 금지에 따라 월북한 「남조선로동당」과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을 창당함으로써 북한에서의 共產黨 組織 結成을 完成하였다.

조선로동당 形成 過程



나. 김일성의登場과 社會主義 下部構造 建設

김일성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북한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으나, 대체로 만주에서의 中國共產黨 東滿 特別委員會 휘하의 「동북항일연

군」 제1로군 제2군 제3사장 (후일 6사장)으로 있다가, 일본군의 토벌작전에 밀려 1941년경 蘇聯의 연해주로 도피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오케안스키아」 부근의 密營에서 對日 偵察活動을 수행하였다는데 전해가 일치하고 있다.²⁾ 해방후 북한에 돌아온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환영대회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蘇聯軍에 의해서 『민족의 영웅』으로 소개되었다.

蘇聯에 의해서 선택된 김일성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첫째, 라이벌 세력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었고 둘째, 북한에 사회주의 체도를 신속히 실시하는 일이었고 셋째, 피폐한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은 黨權을 장악하는 일부터 착수하였고, 1945년 12월 17일에서 18일까지 개최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 책임비서에 선출됨으로써 명실공히 북한의 최고 실권자로 등장하였다.

1946년 2월 김일성은 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黨權과 行政權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었고, 北韓의 共產化를 위한 下部構造의 構築作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인과 일제에 협조한 매국노들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하고 소작제도를 폐지한다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토지개혁은 과거 土地所有에 있어서의 不均等を 廢止함으로써 財産 所有狀態를 均等化시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데에 기초가 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日帝의 殘滓를 제거하고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적대세력을 미리 제거하여 김일성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토지개혁에 이어 1946년 8월 10일에는 주요산업의 국유화 선언이었다. 김일성은 주요산업의 국유화는 民族經濟의 급속한 發展과 民主的이고 自主的인 獨立國家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하였다. 주요산업의 국유화조치로 인하여 일본인 또는 친일분자들이 소유한 공장, 기업소, 문화기관, 수송수단, 철도 등은 임시인민위원회로 그 소유권이 넘어갔고, 약 1,034개의 공장과 기업소(전체의 약 90%)가 국유화되었다.

2)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312-313;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5권(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6), pp. 54-64.

김일성은 토지개혁과 산업시설의 국유화 외에 현물납세제도의 채택, 농지세의 3:7제 도입, 1일 8시간 노동 및 주 6일 근무제, 노동조합에 대한 규칙제정, 남녀 평등권의 도입, 화폐개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여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러한 社會主義的 改革을 통하여 김일성은 첫째, 반대세력의 재정적 능력을 박탈하였고 둘째, 과거 전통적 지배엘리트 계급이었던 地主階級을 해체시킬 수 있었고 셋째, 資本家階級의 富를 박탈함으로써 北韓에서 資本主義的 요소가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넷째, 人民大衆으로 부터의 政治的 支持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사회주의적 하부구조의 구축과 더불어 김일성은 1946년 9월 5일 각 시·군·도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1947년 2월 17일에는 시·군·도 인민위원회 대위원회의를 소집하여 237명으로 구성된 인민회의를 창설하였다. 이어 1948년 8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실시된 선거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었으며, 김일성은 내각의 수상이 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여 한반도에서 두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대외에 선언하였다. 이후 1949년 6월 24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의 주석이 됨으로써 黨, 政, 軍 전반에 걸쳐 실권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다.

김일성은 黨·政·軍을 장악한 후 곧바로 北韓에서의 社會主義 經濟體制 확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1947년 2월 14일 「평화적건설」을 위한 1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고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주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을 시작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1개년계획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나자 김일성은 1949년 2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평화적건설 계획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1947년의 계획은 목표보다 2.5% 초과 달성되었고, 1948년에는 2.9%, 그리고 1949년에는 2.8%를 초과 달성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1949년의 노동생산성은 1946년에 비하여 2.5배 증대되었고, 총공업생산은 3.4배 증대되었다.

비록 해방후 北韓의 經濟成長이 팔목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蘇聯으로 부터의 援助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1949년 부터 1950년 사이 蘇聯은 2억1천2백만 루블에 달하는 援助를 제공하였으며, 1946년 부터 1949년 사이

에 산업전반에 걸쳐 蘇聯기술자들이 생산현장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경제건설을 지원하였다.³⁾

산업생산력, 1946-1949

| 부 문 | | 증가율(1946/1949)% |
|-----|-------|-----------------|
| 전 | 력 | 151 |
| 석 | 탄 | 315 |
| 선 | 철 | 5,400 |
| 강 | 철 | 2,900 |
| 기 | 계 류 | 2,000 |
| 화 | 학 비 료 | 258 |
| 시 | 멘 트 | 523 |
| 목 | 재 | 298 |
| 종 | 이 | 416 |
| 섬 | 유 | 477 |
| 식 | 용 유 | 570 |

자료 :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DPRK, 1945-1960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0), p. 7.

2. 社會主義 體制 構築, 1953-1960

가. 1인 獨裁體制 및 社會主義 經濟基盤 構築

3년간에 걸친 6.25전쟁은 김일성에게는 엄청난 挑戰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機會를 제공하였다. 6.25전쟁이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나가자 김일성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도전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中共軍의 개입으로 평양을 탈환한 김일성은 1950년 12월 21일 평안북도 강계 별오리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

3) Glenn D. Paige,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66), pp. 31-32.

의를 소집하였고, 敗戰의 책임을 물어 빨치산 출신의 김일, 최광, 임춘추, 소련파의 김열, 연안파의 무정, 김한중, 국내파의 허성택, 박광희 등을 제거하였다. 1951년 전투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게되자 김일성은 1951년 11월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黨 運營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소련파의 우두머리였던 허가이를 집중 성토하였다.⁴⁾

김일성은 1952년부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南勞黨계열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南勞黨계는 종파주의자, 자유주의자 등으로 비판되었고, 1953년 3월에 가서는 이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가 시작되었다. 전쟁이 종식된 후 대부분의 南勞黨계 지도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김일성은 자기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안정된 정권을 배경으로 김일성은 강력하게 경제건설을 추진하여 나갔으며, 그 첫번째 시도가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개발 3개년계획(1954-1956)이었다.

1953년 8월 5일 김일성은 전후복구를 위한 광공업, 철강, 기계, 조선, 발전, 화학 등에 중점을 둔 경제건설 3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⁵⁾ 3개년계획 기간중 생산재 생산은 정부예산의 73.1%를 투입하였으며, 그중 49.6%는 공업부문에, 9.2%는 농업에 그리고 13.1%는 수송과 통신에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3개년계획은 工業의 優先的 發展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석탄생산은 1953년 70만톤에서 1956년에는 390만 8천톤으로 증가하였고, 전력생산은 10억 1700만 kwh에서 51억 2000만 kwh로, 화학비료는 4천톤에서 19만톤으로 증가하였다. 農業部門의 성장 역시 괄목할 만하여, 쌀 경작면적은 6만 1천정보 더 늘었으며, 옥수수 경작면적은 35만 7천정보 더 늘었다. 3개년 계획을 통하여 북한은 전쟁의 폐허에서 3년만에 전쟁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였다.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자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社會主義 建設의 基礎를 確立하게 되었다. 이어 김일성은 社會主義體制의 構造的 發展을 위한 협동농장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협동농장운동은 이미 1954년 11월의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었고, 그 결과 1956년 말에 가서는 工業部門의 98%,

4) 허가이는 1952년 12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숙청되었고 1953년 8월 자살하였다.

5) 김일성, “모든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년 8월 5일, 「김일성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p. 1-56.

農業部門에서는 73.9%가 협동농장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김일성의 權力 鞏固化와 大衆動員運動

1956년 8월 30일 蘇聯 및 동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소련파와 연안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그들을 종파주의자 또는 수정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부분의 소련파와 연안파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蘇聯과 중국의 仲裁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11월에 실시된 시·군·도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김일성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만을 입후보하게 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김일성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만을 입후보하게 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자기세력을 일방적으로 기용하여 572명의 대의원중 재당선된 의원은 단지 57명에 불과하였다. 이어 1958년 3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열린 노동당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反對勢力들을 종파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대대적인 제거작업을 시작하여 1958년 부터 1959년 사이에 약 90명 정도를 肅清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주체를 내세워 反對勢力에 대한 정치적 숙청을 합리화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解放前 共產主義 活動을 하였던 자들중 빨치산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숙청당하였다.

협동농장화 진행과정, 1953—1958

| 년 도 | 농 장 수 | 농 가(%) | 경작지(%) |
|------|--------|--------|--------|
| 1953 | 806 | 1.2 | 0.6 |
| 1954 | 10,098 | 21.8 | 30.9 |
| 1955 | 12,132 | 49.0 | 48.6 |
| 1956 | 15,825 | 80.9 | 77.9 |
| 1957 | 16,032 | 95.6 | 93.7 |
| 1958 | 3,843 | 100.0 | 100.0 |

Sourced : Central Statistical Bureau, State Planning Commission, Statistical Returns of National Economy of the DPRK (1946—1960)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0), p. 59.

權力鞏固化에 성공한 김일성은 1957년 부터 실시된 제1차 5개년계획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며, 1961년 말에 끝나기로 계획되었던 것을 1960년 초에 완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목표들은 초과 달성되었으며, 지속적인 重工業 優先政策은 북한의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1958년에는 農業部門에서 협동농장 건설을 완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53년 단지 0.6%의 경작지와 1.2%의 농민들만이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56년에는 1만 5천 825개의 협동농장이 건설되어 77.9%의 경작지와 80.9%의 농가가 소속되었고, 1958년 8월에는 100%가 협동농장에 소속되게 되었다.

북한의 협동농장제도는 蘇聯의 集團農場 방식을 따랐지만 농업발전 전략은 中國의 전략을 모방하였다. 1958년 6월 11일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시키기 위한 「천리마운동」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천리마운동은 전후복구기간중의 「돌격대운동」과 비슷한 형태의 일종의 勞力動員運動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천리마운동은 주민들을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시키기 위한 것으로 수정되었고,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는 大衆動員運動으로 발전하였다. 김일성은 천리마운동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당의 총로선이었으며 혁명적 대중운동의 표현이라고 말한바 있다.

3. 政治·經濟的 試鍊과 軍事力建設, 1961—1970

1960년대에 들어서자 김일성의 권력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50년대 말까지 김일성은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등의 반대세력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당내에는 오직 자신의 빨치산세력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김일성이 1955년에 내세운 주체사상은 확고한 자리를 잡게되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군사에서의 자위는 北韓體制 維持의 근간이 되는 基本原理로 등장하였다. 國內적으로 김일성이 확고한 위치를 구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國際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김일성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격하운동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蘇聯과 中國의 葛藤은 김일성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

다. 1950년대 말부터 蘇聯으로 부터의 援助는 격감하였으며 中國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파탄으로 북한을 도와 줄 능력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北韓을 社會主義 工業國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욕적인 7개년계획(1961-1967)을 발표하였다.

가. 주체경제의 試鍊 : 7개년계획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연속적인 속칭으로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樂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7개년계획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택되었다. 김일성에 의하면, 7개년계획은 전반적인 기술 및 문화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근거한 인민의 생활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⁶⁾ 7개년계획의 초기 3년동안에는 경공업, 농업, 수산업발전에 投資를 집중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우선 목표를 두며, 후기 4년동안에는 重工業 특히 채취공업, 연료, 발전시설, 화학공업, 기계공업, 제철, 수송 등에 投資를 集中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7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김일성은 黨과 政府의 組織을 改編하였다. 제4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의 수는 85명으로 늘어났으며, 75명의 제3차 중앙위원회 위원중 단지 28명만이 再選되었고, 57명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오직 김일성의 빨치산계열 만이 黨과 政府의 要職에 등용되어 김일성은 확고한 1인 獨裁體制 구축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당시 김일성의 목표는 北韓을 하루빨리 자립적, 자주적 경제를 가진 사회주의 체제로 近代化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일성은 북한의 사회체제를 완전한 大衆動員體制로 전환하였다. 인민들은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강요당하였다. 천리마운동은 이런 대중의 勞力動員 運動으로 시도되었다. 천리마운동과 더불어 김일성은 최단시일내에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民族經濟의 建設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두가지 매우 중요한 방법을 도입하였다. 곧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이 두 방법은 북한에서

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61년 9월 11일,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p. 36-120.

주체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를 통하여 인민들로 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8일 김일성이 청산리(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에서의 현장지도에서 유래하였다. 김일성은 청산리방법을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기관 또는 하위기관을 도와주고, 당간부가 하급 생산조직까지 내려가서 노동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어 1961년 12월 김일성은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하고 공장에서의 혁명적인 새로운 관리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의 목적은 産業部門에서 大衆動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즉 인민들로 하여금 社會主義 建設을 위해 최대한으로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고위수준은 하위수준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고 공장관리인은 원자재 공급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관리인들이 생산활동, 장비의 관리, 노동자들의 기술수준 향상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게되는 방법⁷⁾이라고 하였다.

나. 政治·經濟·國防에서의 주체確立

1950년대 말 스탈린 격하운동과 더불어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政策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對蘇關係를 불편하게 하였다. 또한 蘇聯은 북한으로 하여금 集團指導體制를 채택하고 對內指向的인 주체經濟政策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김일성이 蘇聯으로 부터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를 부여하였다. 1960년대 초에 들어서자 蘇聯과 中國의 관계에는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북한은 두 共產主義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연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한다.⁸⁾

7) 김일성,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1월 9일, 「김일성저적선집」,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p. 421-437.

8) 김일성은 “소련은 진보적 인민들의 희망이며, 국제평화, 자주 및 사회주의의 보루이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이미 성공을 거두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여 당시 소련과 중공사이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꼴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적선집」, 제3권, pp. 110-111.

한편 1962년 부터 북한은 중국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1963년 1월 「로동신문」 사설은 修正主義를 비판하면서 북한은 혁명과 노동계급의 편에 설것이라고 하였다.⁹⁾ 1963년 10월 28일자 「로동신문」은 수정주의와 蘇聯의 내정간섭에 대하여 격렬히, 그리고 더욱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비난하였다.¹⁰⁾ 김일성의 불편한 對蘇關係는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가 권좌에서 물러나자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고, 1965년 2월 蘇聯코시긴 수상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중립을 지키던 북한은 경제에 있어서의 주체를 더욱 강조하였다. 1961년과 1962년을 통하여 북한은 자급자족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7개년계획의 궁극적 목표가 경제적 자립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였다.¹¹⁾ 또한 경제적 자립이 정치적 자주의 근본이 되며, 외국에 경제를 의존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²⁾

한편 蘇聯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軍事力 建設에서도 다른 방도를 모색하게 하였다. 1962년 12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열린 노동당 제4차 중앙위원회 5차회의에서 북한은 국방의 현대화를 위하여 경제건설을 지연시킬 것임을 암시하였다. 즉, 「한손에 무기를 다른 한손에는 낫과 machete를」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軍事力 建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록 북한이 경제·국방 병진정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로 요약되는 국방에서의 「4개 현대화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1963년 말에 들어서자 7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연간 생산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특히 철과 섬유 생산은 1962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964년에 들어서 경제는 완전히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통계자료는 더이상 발표되지 않았다.

경제건설의 부진은 黨內에서 심각한 政策對立을 불러일으켰고, 군사력 증강 우선

9) "Let Us Safeguard the Unity of the Socialist Camp and Strengthen the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The People's Korea (February 6, 1963).

10)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11) 김일성, 「제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보고」, pp. 36-120.

12) 「로동신문」, 1963년 4월 11일자.

정책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경제건설의 우선을 주장하는 온건파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1966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5차 당대회는 연기되었고 대신에 제2차 당대표자회의가 열렸다. 1966년 10월 5일 부터 12일 까지 열린 당 대표자 회의에서 내각수상 김일은 軍事力 建設의 부담으로 인하여 7개년계획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경제 건설 부진에 대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7개년계획의 연기를 발표함과 동시에 김일성은 로동당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새로이 10명으로 구성된 비서국이 창설되었고 김일성이 총비서직을 담당하였다. 또한 정치국 내에 6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두었으며, 김일성이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였다. 새로이 구성된 상무위원회에서는 경제관료들이 대거 탈락되고 군출신들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온건파가 몰락하고 강경파들이 득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에는 온건파에 대한 추가적인 숙청이 있었다. 박금철, 이효순 등 당비서국과 정치국의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이 제거되었고, 임춘추, 김도만, 허석순 등 군사력증강에 반대했던 세력들도 제거되었다. 그러나 강경파의 득세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었다. 김일성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1950년 6.25전쟁을 도발한 후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련파와 연안파의 지도급 인사들을 제거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경제건설의 부진을 이유로 강경파들에 대한 제거 작업에 착수하여 김창봉, 허봉학, 최광 등을 숙청하였다. 이러한 연이은 숙청으로 인하여 黨內에서는 김일성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오직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만이 남게되었다.

1970년 11월 2일 제5차 당대회가 개최되었고 김일성은 7개년계획이 계획기간보다 3년을 초과하여 달성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경제성장은 둔화되었으며,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성장을 저하현상은 매우 심각하여 향후의 장기적 침체를 초래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 國際情勢의 變化와 北韓의 對應

1960년대는 김일성으로서는 國內的, 國際的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김일성은 이웃한 두 共產主義 超強大國인 蘇聯, 中國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으며, 國內的으로 經濟

成長의 不振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北韓에서의 社會主義 工業國家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나 주체경제의 어려움도 동시에 인정하였다. 한편, 60년대말에 있었던 두차례에 걸친 빨치산계에 대한 숙청, 특히 강경파에 대한 숙청은 70년대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가. 신엘리트그룹의 登場 : 技術官僚

1960년대 말에 있었던 빨치산 출신들에 대한 숙청은 곧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그들의 공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였다. 강경파에 대한 숙청은 곧 軍事力 建設 우선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었으며, 經濟 建設에 중점을 두는 조정이 뒤따랐다. 이것은 바로 實用主義를 앞세운 專門 技術官僚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0년 11월 13일 제5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85명의 정위원과 50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제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는 117명의 정위원과 55명의 후보위원으로 확대되었다. 117명의 정위원 가운데 단지 31명만이 再選되었으며, 86명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되었다.¹³⁾ 비서국의 구성에 있어서는 단지 3명(최용건, 김일, 김영주)만이 유임되었으며 나머지는 교체되었다. 빨치산 출신 군인들, 김광협, 석산, 허봉학등은 黨 官僚 出身으로 교체되었다. 그들은 김동규, 한익수, 김종린, 현무광, 양형섭이었다. 빨치산 출신으로는 단지 오진우만이 강경파를 비난한 대가로 비서국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黨 정치국에서도 11명중 4명(김일성, 최용건, 김일, 최현)만이 재임명되었고 현무광, 정준택, 양형섭, 김만금 등 黨 官僚 出身들이 登用되었다.

이렇듯 제5차 당대회는 과거 빨치산출신들이 몰락한 반면 새로운 黨·技術官僚들이 기용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技術官僚들 대부분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일부는 蘇聯 또는 동구에서 留學한 경험이 있는 行政과 管理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었다. 이는 70년대에 경제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었다.

13) 제5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명단은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pp. 329-331.

나. 美·中關係改善과 「7.4 共同聲明」

70년대 초에 들어서자 北韓은 매우 유동적인 國際情勢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1971년 7월 15일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 발표는 北韓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北韓은 3주 동안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8월 6일 캄보디아의 「시하누크」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美·中關係改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美·中關係改善의 國內的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北韓은 美帝國主義者들이 共產主義에 항복하였다고 선전하였으나, 美·中關係改善의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세변화를 반영하듯이 南·北間에는 1971년 9월 부터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으며, 1972년 7월 4일에는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었다. 南北共同聲明은 統一에 대하여 3가지 원칙을 선언하였다. 첫째는 外勢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統一을 성취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平和的인 방법으로 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사상, 이념, 체제를 초월하여 民族間의 大團結을 이룩하자라는 것이었다. 이후 南北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1973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었다.

비록 남북조절위원회와 그리고 적십자사에 의한 南北對話는 별다른 성과없이 1973년에 끝나고 말았으나 國際情勢의 變化가 南北關係 그리고 北韓의 政策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대내적으로는 김일성의 1인 唯一支配體制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타났고, 대외적으로는 南北對話의 추진 및 對外交流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타났다.

김일성은 197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의 채택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을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의 개인숭배도 더욱 강화되어,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 「경애하는 지도자」, 「인류최대의 지도자」 등으로 찬양되었으며, 나아가 그의 家系까지 神聖化되기 시작했다.

對外的 측면에서 볼때, 美·蘇대당뜨와 美·中關係改善은 북한의 대외정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1971년부터 西方과의 交流를 조금씩 추진하기 시작하여 1972년 1월에는 日本 自民黨의 「구노」議員을 단장으로 하는 訪問團의 평양

방문이 있었고, 1973년 1월 23일에는 조일무역협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앞서 김일성은 비록 西方 문화의 침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았지만 1971년 9월 25일 「아사히」신문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日本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희망한 적이 있었다.¹⁴⁾

또한 北韓은 國際機構에의 참여를 통하여 國際舞臺에서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국제의원연맹(IPU)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西歐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과의 외교관계 수립에도 성공하였다. 北韓은 정권 수립이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다. 軍事的 對決에서 經濟的 競爭으로

6개년계획은 이상과 같은 매우 流動的인 國際情勢속에서 추진되어 나갔다. 북한은 1970년 11월의 제5차 당대회에서 새로이 6개년계획(1971-1976)을 채택하고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¹⁵⁾ 6개년 계획기간동안 工業生産은 2.2배 증가되도록 계획되어 졌으며, 그중 生産財는 2.3배, 消費財는 2.1배 증가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금속공업, 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重工業의 우선적인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부터의 재정적·기술적 원조는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代案은 大衆動員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1973년 8월 15일 김일성은 6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3대혁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하였으며, 1973년 2월 정치국에서 채택된 3대소조혁명운동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근로자들의 思想武裝을 더욱 튼튼히하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위한 大衆動員體制를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75년 9월 23일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6개년계획의 완수를 선언하였다. 중앙통계국은 6개년계획이 1년4개월 앞당겨 완수되었다고 하고, 1975년 8월말 工業生産

14) 김일성,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 74-111.

15) 김일성, “6개년 계획에 대하여”, 「로동신문」, 1970년 11월 10일자.

은 1970년에 비해 2.2배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전력생산량은 1970년에 비해 1.7배 증가하였고, 석탄은 1.8배, 제철공업은 1.7배, 철생산은 1.5배, 화학비료는 2배, 시멘트는 1.7배, 비닐론은 3.6배, 기계류는 2.4배 등으로 증대되었다고 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북한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북한의 對外貿易 증가로 나타났다.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은 주로 공산국가들간에 이루어졌으나, 7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은 西方의 先進 技術 導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60년대 말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은 주로 蘇聯과 中國과의 거래로 형성되었으며, 蘇聯이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1970년 단지 22.2%에 지나지 않던 북한의 對非共産圈 交易은 1973년 33.2%로 증가하였고 1976년에는 42.5%로 성장하였다.(부록 참조)

반면 북한의 對非共産圈 交易增大는 북한의 貿易收支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5년 북한의 무역적자는 4억 6,640만불에 달했으며, 대외부채는 17억불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석유위기로 인하여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류의 가격이 폭락한 때문이었으며, 西歐 先進技術導入으로 인하여 외채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5. 김정일 後繼體制와 經濟開放化, 1981—1992

가. 김정일 權力承繼體制의 構築

1970년대 초부터 김일성은 後繼體制에 대하여 구상하기 시작했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死後 그들이 어떻게 비판받았는가를 지켜 보았던 김일성으로서는 위대한 두 共産主義 指導者들이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해답은 김정일을 後繼者로 지목하는 것이었다.

70년대 말에 이르자 북한의 권력층은 빨치산 출신의 舊革命世代와 行政·管理 專門家들로 구성된 新進 技術官僚(technocrat)들의 이중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김일성등 혁명1세대의 주역들이 늙어감에 따라 權力承繼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1971년 7월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은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꾸어 해

방후 세대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수 있게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後繼體制 준비를 위한 對內與件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1972년 12월 22일 당 중앙위원회 제5기 6차 전원회의가 끝난뒤 개최된 非公開會議에서 최용건과 김일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후계자 문제로 蘇聯과 中國에서 권력암투가 발생하였음을 예로 들고, 후계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김일성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젊고 패기가 있으며 식견과 예술부문을 통한 당의 업적이 크며 인물이 김일성에 비해 손색이 없는” 김정일을 후계로 옹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1973년 9월 4일-19일)를 비공리에 개최하고 김정일을 黨權의 핵심인 당의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 비서로 등용하여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시켰다.

북한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1)김일성의 위대한 혁명업적은 대를 이어 승계되어야 하며, (2)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새로운 세대에서 나와야 하며, (3)다음 지도자는 김일성에 끝없는 충성심을 가져야 하며, (4)김일성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사상, 이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운자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은 김정일이라고 하였으며, 1980년에는 김정일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추대하였다.

1980년 10월에는 제6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조직개편이 있었다. 중앙위원회는 172명에서 248명(145명의 정위원과 103명의 후보위원)으로 확대되었다. 145명의 정위원중 78명이 새로이 등용되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서기국은 김일성과 김종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이 기용되었고 그들은 모두 김정일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그들은 김영남, 김환, 연형묵, 윤기복, 홍시학, 황장엽, 박수동이였다.¹⁶⁾ 정치국위원들도 과반수 이상이 50대로 구성되어 세대교체의 흔적이 역력하였다. 김정일은 정치국 정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 등의 요직에 기용되어 북한권력구조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p. 332.

80년대 초에 들어서자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항일유격활동을 하던 혁명1세대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최현과 오백룡이 1982년 4월에 사망하였고, 김일은 1984년 3월에, 그리고 김만금은 1984년 11월에 사망하였다. 혁명 1세대의 퇴조와 더불어 김정일 後繼體制의 構築作業은 더욱 강화되었다. 1983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6차 당대회 7기 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새로이 10명의 비서들이 임명되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중린은 유임되었고, 연형묵과 황장엽은 승진되었으며, 현무광, 허정숙, 안성덕, 최희종이 새로이 등용되었다.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지속되어 1984년 1월 25일에는 강성산이 이종욱을 대신하여 총리에 기용되었다. 김정일의 黨·政分野에서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고, 특히 김일성이 人民大衆들로부터의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현장지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¹⁷⁾

나. 經濟開放化 推進

80년대에 들어 북한의 경제는 생산부진, 기술수준의 낙후, 소비재의 부족, 외채누적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부진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이미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을 수정한 『80년대 10대 전망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80년대 10대 전망목표』는 기존의 제2차 7개년계획 목표를 약간 상향조정하여 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1974년에 발표된 70년대 10대 전망 목표와 비교해 볼때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부록 참조)

中國의 開放政策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북한의 지도자들은 서서히 중국의 개방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2년 김일성은 「사천」지방을 방문한 후 “중국을 따라 배우자”¹⁸⁾고 역설하였으며, 1983년에는 「심천」지방을 방문하여 중국의 경제 개방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김정일도 1983년 6월 日·中합작 기업인 상해의 「보산」제철소를 방문하였고, 북한 다른 지도자들도 중국방문 러쉬를 이루었다.¹⁹⁾

17) 김정일은 1982년에는 9번, 1983년에는 11번, 1984년에는 17번의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18) 「로동신문」, 1982년 9월 22일자.

19) 1984년 2월 7일 부터 13일간 김영남이, 1984년 8월 5일 부터 9일간 강성산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특구를 시찰하였다.

중국의 개방정책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돌아온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의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開放政策을 추진한 것은 대외무역을 살펴 볼때 명확히 들어난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對共產圈 交易은 총무역의 70% 이상을 점하였으나 70년대 중반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55% 내외를 기록하게 되었다. 반대로 先進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교역은 70년대 초 20% 미만에서 80년대 초 25%를 상회하게 되었으나, 80년대 중반 부터는 북한의 對外信用度 문제로 인하여 하락하게 되었다.(부록 참조)

對外貿易에 대한 강조와 함께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공포하여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다. 이는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1984년 10월 8일에는 합영법의 첫번째 결실로서 북한의 「제일수출입상사」와 프랑스의 「공빠농-버나드」건설회사와의 합작으로 평양에 46층 높이의 호텔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1985년 2월 18일에는 북한의 「낙원무역상사」와 日本의 「조일상사」가 합작으로 설립한 낙원백화점이 개장되었다. 1986년 8월 8일에는 조총련과의 합작으로 「국제총합영회사」를 설립하였고 「조선합영은행」을 개설하였으며, 기타 식당, 호텔, 자동차정비공장, 섬유공장, 피복공장, 양어장 등이 설립되었다.

북한은 합영법의 실시로 西方의 資本 및 技術의 對北流入을 유도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외화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87년 9월에는 105층 높이의 「류경호텔」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영국, 서독, 일본 등지에서의 관광단 모집에 관심을 기울였다. 관광산업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1986년 5월에 「관광총국」을 설치하였으며, 1987년 9월에 평양에 북한 최초의 골프코스를 개장하였고, 1989년 9월에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개장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이 외화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다. 南北高位級會談과 南北交流의 增大

북한은 1988년 경부터 남한과의 공존체제를 모색하면서 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채택, 남북교역증대 등 南北關係 전반을 재조정하여 왔다.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에서…”라고 하였고, 이어 1989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해야 합니다”²⁰⁾라고 하여 南北韓間의 잠정적인 共存體制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991년 5월 27일 북한은 외교부의 성명을 통하여 유엔가입의사를 표명하였고,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南北韓의 유엔가입이 실현되었다. 이어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南北關係에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북한이 그간의 기본입장을 변경하여 「합의서」의 채택 발효에 동의한 배경은, 첫째, 대외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國際的 孤立에서 탈피하고 核査察 압력을 회피하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對美·日接近을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으며, 둘째,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南北關係의 진전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표방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만을 통일문제로 전이시켜 체제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조작의 일환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셋째, 統一戰略의 측면에서 南北共存을 통해 흡수통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동시에 「합의서」 이행 과정을 기존의 통일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南·北間의 대화 증대는 남북경제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8년 11월 최초의 南·北 직교역이 성사된 후 南·北間의 경제교류는 급속도로 진전하여 1989년 1월까지 남한측에서 직교역을 신청한 총액수는 4천만불에 달하게 되었다. 이후 임수경과 문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남북 경제교류는 일시 중단되었으나, 1990년 부터 다시 급속도로 증대되어 1990년 1991년, 1992년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각각 1만3천465불, 11만1천269불, 8만6천727불(8월까지)을 기록하였다.

20)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p. 29.

남북직교역 현황(1989-1992. 8)

(단위 : 달러)

| 년 도 | 수 입 | 수 출 | 총 계 |
|-------------|---------|--------|---------|
| 1989 | 18,655 | 69 | 18,724 |
| 1990 | 12,278 | 1,187 | 13,465 |
| 1991 | 105,722 | 5,547 | 111,269 |
| 1992(1월-8월) | 80,159 | 6,568 | 86,727 |
| 계 | 216,814 | 13,371 | 230,185 |

자료 : 「월간북한동향」, 통일원 정보분석실(1992. 10), p. 193.

Ⅲ.北韓體制的 政治·經濟的 特性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5년 해방이후 북한에 진주한 蘇聯軍은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하여 나갔다. 당시 국내에 정치기반이 없었던 김일성으로서의 소련이 사주하는대로 토지개혁, 산업의 국유화 등 소비에트화에 필요한 社會的 下部構造를 건설해 나갔으며, 1948년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설을 선언하였다. 이로서 한반도에서는 두개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도발하여 한반도의 赤化統一을 달성하려 하였으나 패배일보직전 중공군의 도움으로 기사희생하였다. 이후 협동농장의 건설완수, 대중동원방식에 의한 경제부흥 등으로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여 46년간 북한을 통치하여 왔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장기간의 통치과정 중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적 특징을 설명하려 한다.

1. 全體主義 1인 獨裁體制

46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북한은 가장 완벽한 레닌주의적 全體主義 社會로 성장하였다. 전체주의의 본질은 온 사회의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과 그들의 사상 및 행위에 대한 정권의 總體的 統制에서 찾을 수 있는데,¹⁾ 오늘의 북한사회는 바로 이러한 全體主義 社會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全體主義 政治는 통치과정에서 통치자가 오직 자기에게만 책임을 지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專制者는 선례에도 매이지 않고 법에도 묶이지 않으며 어떠한 정치조직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全體를 위한다는 주관적인 도덕적 정당성을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全體主義는 전체의 근거를 이데올로기체제로 미화한 것이 외에도 본질적으로 神政體制의 專制政治나 王朝時代의 專制體制와 같다. 그런 뜻에서 전체주의 정치체제는 20세기의 산업사회에 맞도록 꾸며놓은 전제정치라고 할 수

1)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New York : Praeger, 1965), p.16.

있다.²⁾

全體主義 獨裁政權의 공통된 특징으로 Friedrich와 Brzezinski는 (1)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 (2) 1인지배의 유일 대중정당에 의한 통치, (3)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통치, (4) 대중매체의 독점, (5) 무력의 독점, (6) 전체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 등을 들고 있다.³⁾ 이러한 모든 특징은 오늘의 북한 사회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절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통치되는 사회이다. 1972년에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식이데올로기 지배사회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김일성 한사람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조선로동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노동당의 주체사상은 국가의 指導指針으로 되어있으며, 북한에서 어떠한 다른 정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로동당의 예속조직일 뿐이다.

셋째로 黨과 黨支配下의 정부기관에 의한 반체제 인사 및 반동계급에 대한 숙청 등은 북한이 테러체제임을 입증하고 있다. 1956년의 이른바 「종파사건」 이후 북한에는 어떠한 형태의 反體制運動도 없었다는 사실은 북한 테러체제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넷째로 북한은 黨과 政府가 모든 大衆媒體를 독점하고 있다. 당과 정부기관 이외의 어떤 단체도 언론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로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종신 주석인 김일성이 「전반적인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헌법 제93조)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어떠한 무력을 사용한 叛亂이 있었던 적이 없다.

끝으로 북한은 건국 이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 中央統制를 실시하여 왔다.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은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국가의 토대로 삼고 있으며(헌법제 2조)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헌법 제18조)로 정하고, 협동단체의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국가소유)로 전환」(헌법 제21조)하기로 하고

2) 이상우, “서론 : 김일성체제의 특징”, 이상우(편) 「북한 40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서울 : 을유문화사, 1988), pp.15-16.

3) Friedrich and Brzezinski, *op cit.*, pp.21-22.

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헌법 제3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중앙통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이렇듯 북한의 현실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全體主義의 特性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는 가장 완벽한 全體主義 體制라고 할 수 있다.

2. 김일성 唯一支配體制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唯一支配體制이다. 베버(Max Weber)는 카리스마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또는 적어도 특별히 예외적인 힘이나 특질을 부여받은 개인적 인간성의 일정한 특성”⁴⁾이라고 定義한다. 한편 베버의 정의를 발전시켜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카리스마적 운동을 구분하고 있는 터커(Robert R. Tucker)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운동의 과정에서 뛰어난 자질, 예컨대 설득력, 웅변, 용감성 등을 과시하는 자라고 말하였다.⁵⁾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김일성은 1930년대부터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하였고, 1945년 9월 귀국후 소련의 강력한 후원으로 권력을 획득하였다. 그는 초기 권력 획득과정에서 統一戰線戰略을 구사하여 1948년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민족주의자와 토착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들을 차례로 숙청하였다. 50년대 김일성은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경제부흥과 발전에 힘을 기울여 공업생산을 연평균 36.6%나 증대시켰고, 60년대에 들어 군사우위에 따른 부담과 中·蘇紛爭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무사히 극복함으로써 70년대 부터는 김일성 우상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적응, 80년대 후계체제의 확립, 90년대초의 유엔가입 등은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면서 김일성은 神的인 능력을 가진

4)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edited by Talcott Parsons(New York : The Free Press, 1964), p.353.

5) Robert Tucker, Stalin and Revolutionary : 1879-1929(New York : W. W. Norton, 1973), p.968 ;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116에서 재인용.

것으로 선전되었고, 아무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하여 자신의 카리스마적 지배의 정당성을 확립하면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강력한 閉鎖體制로 만들었다.⁶⁾

한편,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주석제가 신설되면서 김일성은 수상으로부터 주석으로 승격되어 「주체사회」의 건설을 위한 1인 獨裁體制를 완성하였다. 주석의 강화된 권한은 기타 헌법에 규정된 각 기구들의 권한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당정치국 등은 거수기에 불과하게 되었고, 김일성의 뜻만이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집행되었다. 수령으로서의 김일성의 권한은 절대적이어서 그의 말과 행동은 「교시」라는 형태로 모든 정책결정의 준거들이 되었고,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김일성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되었다.⁷⁾

김일성 唯一 支配體制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적 근거로서 북한은 수령론을 발전시켰다. 수령론은 “인류역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이며, 이러한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는 언제나 그 선두에 집단의 대표자 계급의 선봉자가 있었으며,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는 그 집단의 지도자와 운명을 같이 해 왔다”는 주체이론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社會主義 革命은 착취사회의 철폐와 인간자주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인민대중들의 자주성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이며,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근로인민대중이 참가하는 전사회적 규모의 투쟁이어서 이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사회주의 혁명은 오직 노동계급이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 인도될 때 개척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북한의 수령론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령론에서 수령은 (1)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2)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3) 정확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있어서도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 있어서 수령이 해야 할 역할은 수령이외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수령만이 그것을 수행하는 책임자이고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령의 역할을 개인의 역할과는 구별된다고

6)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p.118.

7) 「상세서」, pp.121-122.

하면서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최고 체현자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유일한 대표자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⁸⁾

북한에서 이러한 수령의 絶對的 權威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1967년 5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였다. 이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당시 권력의 핵심이며 항일 빨치산계의 부주류계인 박금철, 이효순, 허석선, 이송운 등 당 정치국원 또는 비서 및 중앙당 간부들을 수정주의 분자라는 명분으로 제거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수령에 대한 권위를 절대화하기 시작하였다.

수령중심의 영도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서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체계화한 것이다. 이후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앞에서 「주체사상의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 내용은 (1)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를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에 있어야 하며, (2)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과 같이 사회·정치적 중심의 최고의 뇌수는 수령이며, (3) 인민대중은 당의 지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사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만이 불멸의 자주적인 생활력을 갖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며, (4) 개개 인간의 육체적 생명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불멸하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수령론에 기초하여 북한은 수령으로서의 김일성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김일성의 역할과 지위를 공식화하고 그에 수반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예컨대 김일성은 공화국의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가의 수반, 군최고사령관 등의 지위를 독점하였다. 이는 주석인 김일성의 국가요직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대폭 격상시킨 것으로서 권력구조를 김일성 1인에게 총집결시켜 정치적 리더쉽면에서 그의 지배를 절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가능케하기 위한 것이

8)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통일문제연구」, 제4권 2호(1992년 여름), pp.110-111.

9) 「상게서」, p.112.

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모든 제도 및 헌법체계, 黨規約까지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한의 정치체제는 黨 優位原則을 철칙으로 하면서도 黨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중심적 黨國家體制라 할 수 있다.

3. 주체사상에 기초한 唯一思想體系 國家

오늘날 북한의 모든 정책지침과 활동들은 절대적인 지도자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북한사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을 보면 1955년 「주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선을 보인후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여,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이 있었으며, 1970년에는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黨規約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었고, 1972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지도적 지침」으로 천명되었다. 따라서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이 북한의 唯一한 指導理念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 형성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김일성의 1955년 연설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주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 말로 우리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¹¹⁾

10) 유영옥, “북한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3호(1992년 가을), p.15.

1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와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 선전 선동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326

주체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극히 상식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노린 것이 반드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퇴치와 주체의 확립만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박창옥, 박영빈, 허가이 등 소련파, 그리고 박현영, 이승엽 등 남로당계 인물 등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여,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계를 견제하면서 자기의 세를 확장하려 하였다.¹²⁾

이 연설이 있은뒤 4년이 넘도록 김일성은 주체를 다시 강조하지 않다가 1960년 2월 “주체리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과 다른나라의 경험을 우리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하고, “주체문제를 내세운 다음부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으며, 지금은 모두가 자기 실정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창발성이 나오고 있다”¹³⁾고 하여 주체사상을 확대 적용할 것을 시사하였다.

그후 주체를 반영하는 정책들 특히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강조하고 언어, 문학, 예술, 교육에서 주체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Ali Archam)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에서 주체에 관하여 처음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정리하였다.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당과 우리인민이며 조선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우리자체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모든당이 “완전히 자주적이고 평등”하다고 주장하여 中·蘇紛爭에서 취한 북한의 입장을 합리화 시켰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노동당의 행동원칙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지위”라는 4가지 기본원칙에 입각한다고 천명하였다.¹⁴⁾

이 4가지 원칙중 「사상에서의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김일성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간결히 투쟁”하였고 교조주의와

12) 따라서 김일성의 연설이 “반소련”적 측면을 가졌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에 벌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자위책으로 이 연설이 나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때 타당성이 없다. 고병철,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 분석”, 최명(편),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89.

13) 김일성, 「우리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93-94.

1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년 4월 14일,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195-240.

사대주의를 반대하였다고 말하고, 북한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난날과 오늘, 우리인민의 혁명전통과 문화전통에 대한 학습을 경쟁적으로 강화”한 결과 북한사람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크게 앙양되고 창발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에서의 자립」에 대하여 김일성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세운다는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고, “자기의 로동과 국내 자원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 밑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김일성은 경제에서의 자립이 외국의 援助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전후 복구시기에 우리나라는 형제나라들로 부터 약 5억 루블에 맞먹는 경제·기술적 원조를 받았다”고 하면서, 북한이 국가들간의 경제협조를 반대하거나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며”, 경제협조와 국제분업을 구실로하여 다른 나라 경제의 자립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막으며,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자기에겐 얽어매려는 大國主義的 경향을 반대한다고 하여 소련의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¹⁵⁾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정강」을 발표하고 주체가 북한의 모든정책의 지도이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1970년 1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 사상, 우리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 단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게한 기본요인”¹⁶⁾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黨規約를 개정하여 주체사상을 黨規約 前文에 포함시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 이어서 1972년 12월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보다도 주체사상을 더 상위에 둔 유일사상체

15) 김일성, 「우리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p.349.

16) 「근로자」, 1970년 제11호, p.55.

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주체사상을 최상위에 두고서 1인 獨裁體制를 정당화해온 김일성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偶像化 作業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은 역사를 날조하고 혁명전적지, 혁명전통물을 만들어 혁명신화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革命神話는 그의 10대 소년시절까지 소급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김일성은 15세때인 1927년에 이미 만주에서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섰으며, 18세 되던 1930년에는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고 1930년대의 항일게릴라 투쟁을 선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김일성의 혁명 영도력을 선전하고 있다. 또한 8.15해방도 김일성의 작전계획에 따라 「조선혁명군」부대들이 日帝에 역사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쟁취된 것이라 왜곡하고 있다.

절대권력의 유지를 위한 김일성의 혁명전통조작은 혁명신화의 창조에 그치지 않는다. 김일성은 1930년대에 자신의 항일 게릴라투쟁을 사실화하기 위하여 혁명전적지를 조작하였다. 고목에 글씨를 새기고 토막집을 짓고 비석을 세우는 등 「혁명투쟁흔적」을 백두산을 중심으로한 만주국경일대에 수없이 만들었을 뿐만아니라, 자신의 혁명전통에 대한 사실적 증거로서 조작한 혁명전적지를 북한의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방문 견학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文人들로 하여금 김일성의 혁명투쟁을 문학작품으로 제작하게 하여 왔다. 그것이 소위 혁명전통문학이다. 예를 들면 「사단장의 전사」, 「숲은 설레인다」, 「고난의 력사」 등의 소설과 「백두산」, 「밀림의 역사」 등의 서사시 및 서정시들, 그리고 「해바라기」, 「폭풍시절」 등의 희곡을 포함하는 이를 혁명전통물들은 그 내용이 하나같이 김일성의 革命業積을 讚揚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러한 혁명전통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1인 獨裁體制를 美化하고 나아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승화시키려고 하였다.¹⁷⁾

김일성에 대한 偶像化 作業은 그 개인의 神格化에 그친 것이 아니다. 북한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김일성의 家系 전체를 미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마저 왜곡 날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家系는 「혁명가문」으로 찬양되고 있으며, 모든 학교, 행정기관,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군대에서 「김일성 혁명력사연

17)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최명(편),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123.

구설」을 설치하여 김일성과 그의 族閥에 대한 모형, 그림, 기록, 동상, 탑, 기념비를 전시하며, 친족들의 묘를 聖域化하여 모든 주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참관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종 교육기관, 병원, 지명 등에 김일성과 그의 친족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렇듯 김일성에 대한 個人 崇拜運動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영웅화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神格化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神格化는 그에 대한 과장된 역사 날조, 수많은 동상과 기념물의 건립, 그리고 그에 대한 성역화 작업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4. 集團主義에 기초한 統制的 組織社會

북한사회는 集團主義 原則에 준거한 統制的 組織社會이다. 즉 북한사회에서는 모든 주민을 조직속에 묶어두고 개인간의 상호경쟁을 조장하여 효율성 향상을 재촉한다. 따라서 북한의 조직은 자율적이고 독창적일 수 없다. 즉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조직은 상이한 계층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특정 방향으로 국민을 동원하고 정비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만든 黨의 후비대에 불과하다.¹⁸⁾

「직맹」, 「농맹」, 「여맹」, 「사로청」 그리고 각급 군대조직 등 모두가 체제유지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고, 민심의 소재파악과 정치교양사업을 전담한다. 「사회주의헌법」 제49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를 떠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와 개체의 이해는 언제나 일치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민생활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黨 및 國家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데 각종 규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북한은 전세대틀 5호씩 나누어 열성당원 1명을 배치하여 부부간의 애정문

18) 이병혁, “사회구조와 생활실태”, 최명(편), 「북한개론」, p.271.

19)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제도적 통제에 관해서는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p. 903-914 참조.

제를 포함한 가정생활 일체를 지도한다는 구실하에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초 김일성이 평북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찾아가 “유급간부 한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일체를 지도하도록 리사업을 추어주고 리당위원회에서 그들을 상대로 과업을 주고, 그 집행을 총화하면 일이 잘된다”고 말하데서 비롯되었다. 1960년 이후 「5호담당제」는 전국토의 요새화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붉은 가정 창조운동」이라는 이름아래 북한전역에 걸쳐 실시되었다.

둘째는 「인민반분조제」이다. 북한은 1974년 초부터 「5호담당제」를 확대, 강화하여 「인민반분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連帶責任 單位를 5호에서 10호로 확대하여, 주민 상호감시활동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각 인민반에서 10개 세대 단위로 1개 분조를 편성, 열성당원이 분조장이 되어서 사회안전부의 지휘하에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셋째, 북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하여 왔다. 북한은 모든 배급을 주민등록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없으면 직장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 마저 받지 못한다. 또한 북한 당국 몰래 이동하여 친척 또는 친지의 보호아래 있다가 사회안전 주재원에게 적발되면 정치적 불순분자라는 의심을 받게되고, 그를 보호해준 사람까지 책임추궁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黨의 허락없이 黨이 거주를 허락해준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넷째, 북한 주민들은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다. 북한에서 여행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며, 사회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이 없으면 여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거나 무단이탈로 인한 사사로운 여행은 불가능하며, 적발될 경우 처벌을 면치 못한다. 이러한 여행의 제한은 일반제한, 특수제한, 심리제한 등 세가지 측면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私的인 用務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짜만큼 식량배급이 중지되고 월급이 공제되므로 주민들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사사로이 여행을 할 수가 없다. 여기다가 직장에서 매일 작업책임량을 따져 성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며칠동안 직장을 떠나면 태만분자라는 낙인이 붙게되어 본인 뿐만아니라 자녀들의 장래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다섯째, 북한에서는 어떤 부문에 취업하든 黨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즉 행정위원회 산하의 노동부 또는 간부부를 통해 배급장 또는 소개장을 발부받아야

해당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북한의 간부정책(즉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신임도에 의해 결정되며,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간부의 첫번째가는 표징은 그가 당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의 능력이다. 지식만 있고 당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치 않다”고 하여 黨性이 직업을 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북한 주민들은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의 배치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배치를 받게된다. 북한 주민의 직업평가 기준은 주로 권세, 노임, 편안한 정도의 순이라 하는데 직장배치는 본인의 의사 보다는 전적으로 黨과 國家의 一方的 統制에 의해 이루어진다. 직장에 배치 받기 위해서는 조직생활과정에서의 규율준수정형, 당에 대한 태도와 열성, 앞으로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 성격, 특기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로청」의 평정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평정서가 요구된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교장의 평정서와 사로청위원회 위원장이 평가한 사회단체생활에 관한 평정서를 근거로하여 간부처에서 공산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과학 및 학교교육부의 지시를 받아 각 직장으로 배치할 대학졸업생 명단을 작성한다. 정치적 신임도가 높고 가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당에서 먼저 선발하고 그 다음 행정간부로 기용할 예정자를 정무원의 각부에서 선발하며, 그 다음으로 연구분야와 학계, 기술분야와 생산현장에 배치하게 된다.

일곱째, 북한은 각종 證明書를 발급하여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일개 노동자가 소지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가 10여종에 이르며, 그중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당원증(당원), 공민증, 직맹원증, 사로청원증(사로청), 위생통과증(출장), 직장신분증, 노동수첩, 공로메달증(수훈자), 신임장(출장), 여행증명서(여행), 적십자회원증 등이 있다.

5.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재산소유, 또는 직업선택이 자유로우

며 개인의 경제활동 목표를 효용과 이윤추구에 두고 모든 경제활동은 價格機構에 의한 자유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가격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자원 배분과 이윤동기에 의한 창의적인 기업활동은 경제발전에 매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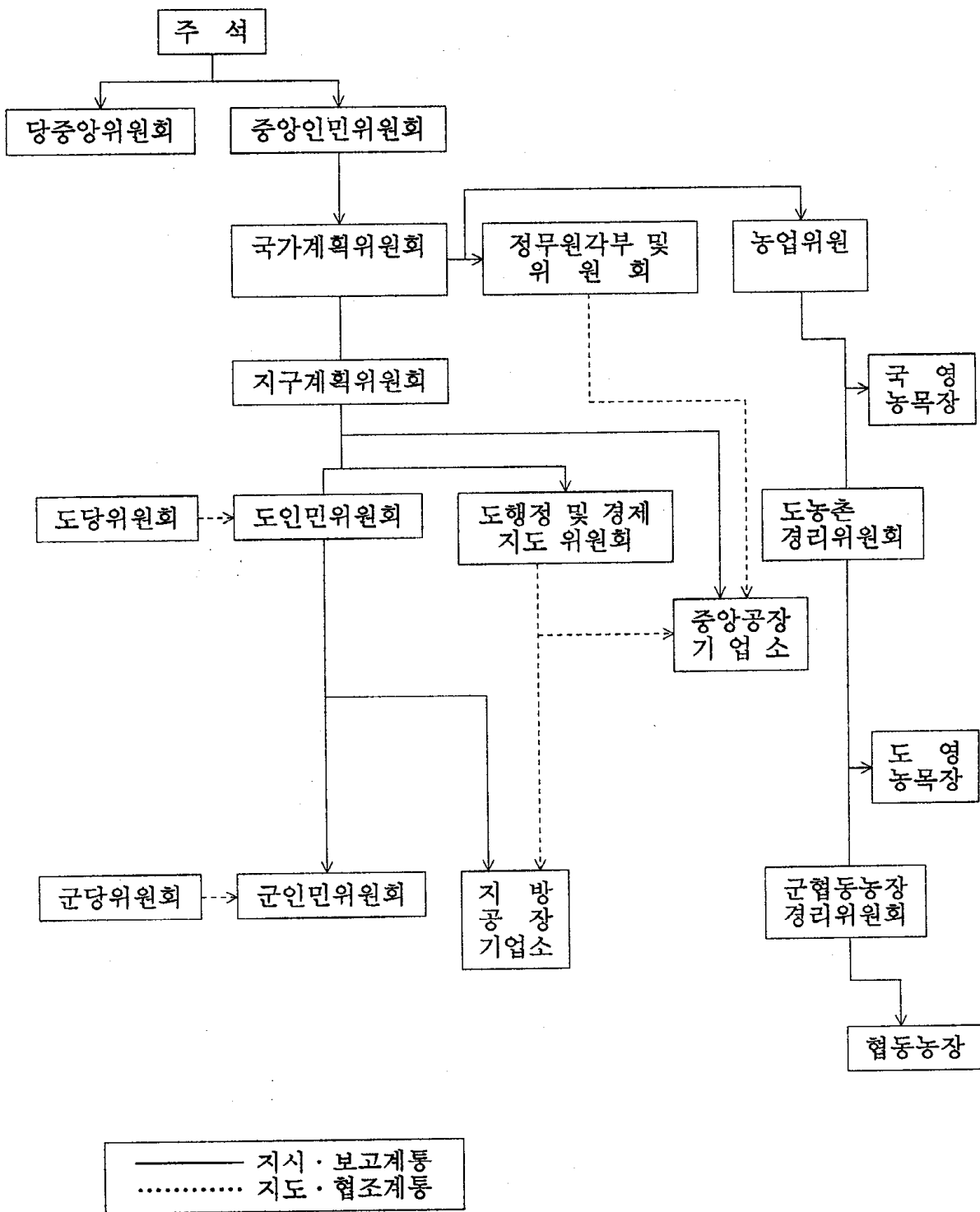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보다는 분배의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산주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가 성장할 수록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일반 대중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며 소수의 자본가들만이 富를 누리는 顛倒된 社會로 된다고 한다. 顛倒된 社會란 본래 노동자가 지배해야 할 사회를 자본가가 지배하므로 주객이 전도된 사회라는 뜻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혁명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공동사회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자원의 배분, 직업의 선택 등은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서 북한은 첫째, 모든 生産手段을 國公有化하였다. 북한은 8.15 해방 직후 중요한 산업시설이나 은행 등을 국유화한데 이어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과 중소 상공업을 「이용」「제한」「개조」라는 3단계의 구호를 내걸면서 완전히 소멸시켰고, 압력과 강제수단으로 국영 또는 협동단체에 흡수시켰다. 둘째, 6.25 이후 1957년에 이르는 기간중 농업에 대한 集團化를 강행하여 협동농장화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집권적인 계획당국의 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단위의 생산운영지표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계획당국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하여 통제받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전형적인 中央執權的 體制라 할 수 있으며, 경직적인 계획경제, 혹은 명령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즉 농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며 경제활동은 중앙집권적 계획과 지도에 의하여 통제된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엄격한 국가계획 및 통제아래 협동농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배분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계획에 의하여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북한 경제체제는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下向式 命令體系에 의해서 운

北韓의 經濟計劃 體系



영되며, 黨이나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주석의 명령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역할 밖에 수행하지 않고 있다.(그림참조)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화는 黨과 國家가 생산수단과 노동력 등을 각 경제부문에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생산과 분배를 과학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부문간의 연관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운영에서 고도의 계획화와 철저한 균형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중앙정권의 통일적 지도하에 계획의 단일성을 보장하고 고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가진 계획체계가 요구되었다. 그 결과 계획의 일원화가 확립되었다.

계획의 일원화란 북한 전역을 망라하고 있는 計劃機關과 計劃部署가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구성하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 일원화의 가장 큰 목적은 중앙정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계획의 단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각 경제부문과 각 기업소는 중앙정권당국의 의도에 따라 운영되며, 모든 경제부문간에 균형이 유지되고 모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²⁰⁾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의 지구계획위원회와 시·군국가계획부 및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를 두고 있으며, 정무원의 각종 경제위원회, 중앙기관 및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의 계획부서가 해당기관과 국가계획위원회에 이중적으로 종속하고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계획기관의 체계는 中央執權制의 원칙에 입각해 전국의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통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각 경제기관과 기업소의 계획부서는 국가계획기관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계획세포이며, 국가계획기관의 지도하에 통일적인 계획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일 계획기관의 구성 부문이다.

6. 閉鎖的 自立經濟體制：자력갱생

自立經濟란 한 국민경제가 對內的으로 投資財源을 자체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가며, 對外的으로는 國際收支의 均衡을 이룩하면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대시

20) 「북한총람」, p.585.

켜 중국적으로는 經濟的 富를 최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뜻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자급자족한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경제에서 자립이란 말이 바로 자급자족체제를 구축한다는 뜻 즉,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새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달성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의 경제적 자립이란 다분히 자급자족경제(autarky)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²¹⁾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초기에 전통적인 스탈린 이론의 「일국사회주의론」을 받아들여 閉鎖的인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하였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는 이윤추구 보다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생산성 상승 및 생산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인민의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보다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을 그 직접 목적으로 한다.²²⁾ 따라서 사회주의 무역은 이러한 직접 목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은 단지 국민경제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계획경제의 수행에 불가결한 輸入을 위해 행해지며, 輸出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輸入을 가능하게 하는 외화조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동구 및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급자족 국가경제가 國際分業과 經濟協力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을 상실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는 규약개정을 통하여 국제분업의 촉진, 또는 西方과의 무역증진을 추구하여 종래의 폐쇄적인 정책을 다소 수정했다.

반면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노선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급자족체제를 계속 강력히 고수하면서 經濟의 閉鎖性을 지속하여 왔다. 실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시기인 1953~1956년에 사회주의 형제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COMECON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蘇聯이 COMECON을 통한 共產圈의 경제통합과 국제적 분업 강화를 시도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에 대하여 1차 상품의 개발과 수출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자립적 경제정책에 입각하여 1차 상품의 가공 및 제조업 발전에

21) 이태욱, “경제 : 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이상우(편), 「북한 40년」, pp.128-129.

22)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9), p.12.

주력하였다.²³⁾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비록 閉鎖的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폐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내 시장의 규모가 적고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對內指向的 성장정책을 추진한 결과 해외부문이 국민경제에 소극적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완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있으며 정부당국의 계획에 따른 경제계획 집행에 있어서 국내자원의 수급에 차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즉 對外貿易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원자재를 자체생산하여 쓰도록 하되 생산되지 않거나 기술이 부족하여 생산할 수 없는 것들만 대외무역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뜻이다.²⁴⁾

이러한 원칙하에서 북한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은 「경제에서의 자립」노선이란 자력갱생 원칙하에 자주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일성은 자력갱생이란 “자기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 역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 입장이며, 자기나라의 건설은 자기인민의 노동과 자기나라의 부원으로 수행하려는 자립적 입장”²⁵⁾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청식으로 추진해 나간 것은 195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956년 5개년계획을 수립한 후 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中·蘇를 비롯한 공산제국들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결국 자체의 힘에 의해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1958년 3월 김일성은 「자립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자립적이며, 자주적인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로 별어서 먹고 살도록 다시말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²⁶⁾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립경제의 목적은 북한경제에서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없애고 자립적으로 현대적인 사회주의 공업국가를 건설하는데”있으며, 經濟的 自立이 없이는 政治的 獨立을 유지할

23)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6), p.71.

24) 이태욱, “경제: 자력갱생의 이점과 한계”, p.130.

25)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537.

26) 김일성, “제1차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3월 6일,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104.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면서부터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해 왔다.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 그 자체를 혁명수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자체의 힘으로 새사회를 건설하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自立的 民族經濟의 建設路線으로 이어져, 생산수단에 대한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충족시키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자력갱생의 원칙은 國際分業의 이점을 도외시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형성하게 되었다.²⁷⁾ 국내수요의 모든 물자를 자체내에서 해결하려는 閉鎖的 經濟體制의 고수는 선진 기술과 해외자본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한계를 노정시켰고 나아가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공업 우선정책을 고수함으로써 產業間의 不均衡을 더욱 심화시켰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원칙하에서 북한은 초기 단계부터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重工業의 우선적 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 달성을 위해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적인 현대공업을 건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선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을 이룩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 중공업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로서 북한은 성장과 발전의 단계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있어 광업개발, 기초시설재공업, 중간원자재공업, 최종 소비재공업의 순으로 수행하여 왔다.²⁸⁾

원래 중공업은 일차산업과 경공업의 뒷받침 위에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초기과정에서부터 무리하게 중공업우선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60년대의 제1차 7개년계획기간 중 중공업부문 기본건설투자액은 공업건설 투자총액의 80%를 차지하였고, 6개년 계획(1971~1977) 기간중에는 83%가 중

27) 이정희, 「북한요론」(서울: 문현사, 1987), p.364.

28) 「상계서」, p.365.

공업 건설에 투자되도록 하였다. 결국 중공업 우선 정책은 軍需産業 육성과 연관되어 武力 赤化統一 政策의 공인과 더불어 정권기반 구축의 방편으로 이용되었으며, 심각한 산업 불균형과 경제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계속 추구되어 왔다.

IV.北韓體制的 政治·經濟的 強點

1. 政治的 側面

政治的 側面에서 볼때 북한체제는 政治的 安定性이란 점에서 強點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은 46년간이나 북한을 통치하면서 심각한 위기없이 안정성을 유지하여 왔다. 김일성은 주민들로 부터 絶對的 權威를 인정받아 왔으며, 계속된 肅清을 통하여 반대세력이 성장할 가능성을 말살하였다. 또한 閉鎖的인 共產主義 政治社會化 過程을 통하여 외부의 思想과 思潮가 침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理念的 結束을 강화하여 왔다.

가. 김일성의 絶對的 權威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로 부터 絶對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正統性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正統性이란 정부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국민들이 복종할 것을 동의할 때 발생하는데, 해방직후 김일성에게 이러한 正統性의 근거는 매우 미약하였으나,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正統性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해방후 북한에 돌아온 김일성은 正統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다는 抗日 鬪爭經歷을 강조하는 한편, 蘇聯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원하여 권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이어 토지개혁, 산업의 국유화 및 기타 사회주의 개혁을 단행하여 日帝에 협력한 소수의 기득권 층을 민족의 반역자란 명목으로 제거하고 그 富를 다수의 대중에게 분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로 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50년대 중반 주체사상을 내세웠고,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주입시켜 권력의 正統性을 확고히 하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북한 방문자들의 여행담이 입증한다.

북한은 바로 김일성의 것이었다. 이들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북한주민들은 그들의 초인적인 지도자를 무한히 자랑스러워하여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일성, 카리스마와 우리에게 인지된 그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¹⁾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떠한 외부의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 왔으며,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데 길들여져 왔다. 따라서 김일성은 絶對王朝 國家의 君主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나아가 초월적 권위를 가진 神的인 존재로 까지 인식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偶像化 작업은 바로 김일성을 神的인 존재로 만드는 작업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김일성은 초월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 부각되어 졌다.

김일성에 대하여 초월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북한은 수령론²⁾을 전개하여 왔다. 革命과 建設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령인 김일성의 지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수령론이다. 수령의 역할을 첫째,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둘째,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며 셋째, 정확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수령 이외에는 그누구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

또한 북한은 수령의 조건으로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1)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을 창시하고 발전시켜 혁명승리의 원동력이 되며, (2)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조직하여 혁명승리의 결정적 조건을 마련해주며, (3) 혁명적 전통을 강조·계승발전시키고, (4) 당과 국가, 그리고 근로단체들을 창건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역사적 승리의 위업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무기를 마련해주며, (5)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 승리로 이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⁴⁾ 이러한 사

1) 김종익, 고병철, “기행을 마치고,” 양성철, 박한식(편저), 「북한기행」(서울:한울, 1986), pp. 220-221.

2) 북한은 수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최고지도자 수령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당의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령도하는 최고 뇌수이며, 전당과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발길로 령도하고 계신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조선문화어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3), p.544.

3)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통일문제연구」, 제4권 2호(1992년 여름), pp.110-111.

4)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최명(편), 「북한개론」, p.120.

람은 비범한 인간이며 천재적인 예지를 가져야 하는데 김일성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수령론에 더하여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도 수령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자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전체사회를 사회구성원으로 조직된 하나의 生命體로 파악한다. 그 生命體에는 중심이 있으며, 개별적 사람의 중심이 뇌수라고 한다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는 수령이라고 주장한다. 人民大衆은 黨의 지도하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결합해야만이 불멸의 생활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된다고 하는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단결의 중심,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형성하는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서의 수령, “인민대중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혈관 및 신경”으로서의 당,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주체이며, 수령과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당과 수령을 보위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⁵⁾로서의 인민대중이 하나가 되어야 혁명과 건설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주장하며, 수령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한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위에서 북한은 김일성에 대한 絶對的 權威를 강요하는 한편,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1972년에 새로이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김일성의 역할과 지위를 공식화하고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1972년의 헌법에 의하면, 「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 국방위원장, 그리고 군최고사령관의 지위를 동시에 겸임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석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격상하여 권력구조를 주석에게 집결시켜 주석인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였다.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한 작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神聖化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화하여 김일성을 敎主로하고 주체사상을

5)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p.113.

그 敎理로 하며, 「조선로동당」이라는 司祭團을 가진 宗教國家⁶⁾로 전락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은 김일성의 권위를 神聖視 함으로써 과거의 全體主義 1인 獨裁體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神政體制라고 할 수 있다.

나. 反對勢力的 成長 不可能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反對勢力이 성장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소수의 체제불만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떤 조직을 결성하여 세력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일성의 노선에 반대하는 기미가 보이면 肅淸의 대상이 되며,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차원에서의 制度的 統制裝置 등으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출할 수가 없다.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반대세력이 성장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노동당 내에서의 政治的 肅淸에 의한 잠재적 반대세력의 제거를 들 수 있다. 김일성은 해방후 자기에게 잠재적인 대항세력이 될만한 요소들을 차례로 제거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연안파와 소련파의 지도자들을 제거하여 黨·政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당시 최대의 위협세력이었던 박헌영의 南勞黨系를 肅淸함으로써 1인 독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어 1956년의 「8월 종파사건」, 그리고 1957년과 1958년에 있었던 연안파와 소련파의 잔여세력에 대한 숙청으로 1인 독재체제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는 자신의 빨치산 계열에 대한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唯一支配體制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은 政治的 肅淸을 통하여 김일성은 자기에게 대항할 만한 잠재적인 요소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는 노동당 이외의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도 현체제에 도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1946년 「조선로동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여 黨權을 장악하였고, 「조선민주당」의 조만식 선생을 제거한 후 빨치산계열의 최용건과 최현으로 하여금 당을 관리하게 하여 당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을 장악하였다. 또한 김두봉 등 연안파가 주도한 「신민당」과 합당하였고, 1949년에는 남한에서의 공산주의자 색출작업으로 월북한 당시 최대 세력이었던 남로당과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을 창당하고 黨內 權力

6) 이상우, “서론”, 「북한 40년」, pp.25-26.

鬭爭을 통하여 黨權을 장악하였다. 이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노선에 반대하는 어떠한 당도 출현한 적이 없다. 또한 노동당은 300만명 이상이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大衆政黨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黨에 의한 社會統制가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단체 또는 근로단체들이 黨의 外廓團體로 기능하면서 黨에 의한 사회통제를 도우고 있다. 즉,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직업동맹」, 「녀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문학예술가동맹」 등이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 외곽단체들은 오직 노동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노동당에 의한 一黨獨裁를 합리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단체 현황

| 단 체 명 | 가 입 대 상 | 구 성 인 원 |
|---------------------|---------------------------|---------|
| 직업총동맹(직총) | 노동자, 사무원 31~65세(여 60세) | 약 250만명 |
| 농업근로자연맹(농근맹) | 협동농장원 31세~65세(여 60세) | 약 150만명 |
|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사로청) | 14세~30세 | 약 400만명 |
| 민주녀성동맹(여맹) | 여성(31세~60세) | 약 270만명 |
| 소년단 | 7세~13세 | 약 300만명 |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사회·근로단체외에 형식적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1945년 11월 「조선민주당」으로 창당하여 1981년 제6차 당대회에서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과 「천도교청우당」(1945년 9월 14일 창당)이라는 노동당의 友黨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對外宣傳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들 두 政黨은 지금까지 노동당을 지지하면서 노동당의 일당독재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統制裝置를 마련하고 있어 不純勢力이 침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反革命勢力이 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다. 모든 생산수산을 국유화하여 반대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물

질적 토대를 박탈하였고, 전 사회를 조직화하여 反動·反革命分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주민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왔다.

다. 주체사상에 의한 理念的 結束

북한체제가 政治的 安定性을 확보할 수 있게된 또다른 이유는 북한당국의 끊임없는 共產主義 政治社會化에 있다. 북한에서의 政治社會化는 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교양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나 문화·예술 등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과 부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주 목적은 전주민을 「주체사상화」하여 김일성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있다. 전 주민을 주체사상화 한다는 것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라 한다.⁷⁾ 전주민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북한은 교육, 언론매체, 문학·예술 등을 동원하여 주체형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의 교육은 “공산주의적 혁명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왔다. 헌법 제3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그 목적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⁸⁾를 발표하고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칙을 (1) 교육에서의 당성, 노동계급성 구현, (2) 교육에서의 주체 확립, (3) 교육과 혁명의 결합,

7) 조진경, 「민족자주화 운동론(Ⅱ)」(서울:백산서당, 1988), p.259.

8)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특히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하며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pp.355-402.

(4) 교육사업의 국가적 책임성 등의 4가지로 밝히고, 이러한 원칙하에서 “전인민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 “전인민의 인텔리화”, “전인민의 공산주의화”실천에 두었다.

이와 같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만5세 부터의 유치원 교육과 고등중학교 까지의 11년간을 의무교육으로 정해 놓고 있다. 특히 정치사상교육에 관해서는 유아원에서 부터 김일성의 어린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美化하여 암기하게 하고 있으며, “김일성 따라 배우기”의 일환으로 김일성 혁명자료 읽기, 만경대 고향집 방문, 혁명전적지 및 혁명박물관 방문 등으로 김일성에 대한 찬양 및 숭모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북한은 어린시절 부터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여 다른 不純思想이나 理論이 침투할 수 없게 하고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사회화의 매체는 言論이다. 북한에서의 언론은 (1) 인민을 교육하고, (2)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며, (3) 인민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4)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언론은 주민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에 입각한 이념체계로 무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북한의 言論은 體制에 逆機能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김일성과 노동당에 절대적으로 충실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

또한 북한의 言論은 宣傳·煽動者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宣傳·煽動者로서의 북한의 언론은 전 주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며,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이념무장시키는데 기여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언론매체와의 접촉이 봉쇄되어 있고, 오직 노동당의 통제에 의한 일방적 전달에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매체는 북한주민들의 理想的 結束力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⁹⁾

북한의 文學과 藝術은 김일성과 노동당의 명령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 충실히 복무하는 중요한 政治社會化 媒體이다. 문학과 예술도 언론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¹⁰⁾이라고 정의한다. 김일성은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되며, 오직

9) 강현두, “언론과 예술”, 최명(편), 「북한개론」, pp.443-483.

1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회총화 보고”, 1970년11월 2일,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462.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북한의 文學과 藝術은 黨의 政策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편 북한의 映畵와 演劇은 혁명의 역사와 혁명전통에 관한 찬양, 노동투쟁의 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음악·미술과 더불어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대중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교육, 언론매체, 문학·예술 등은 共產主義 政治社會化를 위해 기능하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經濟的 側面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 그리고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가지는 고유한 강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自立的 民族經濟

북한의 경제원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즉, 自立的 民族經濟의 건설이 지상 목표로 되어 있다. 김일성은 自立的 民族經濟의 建設은 政治的 自主와 國防에서의 自衛를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 담보라 하면서, 이를 위해서 자력갱생원칙을 내세웠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자력갱생하여 자기나라 살림살이를 기본적으로 자기손으로 꾸려나가되 제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정의하면서, “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쌓을 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¹¹⁾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對外 經濟協力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경제적 자급자족 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지적

11)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53-54.

하고, 자력갱생을 이차적으로 하고 국제적 협력을 그 보완적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¹²⁾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과업 그리고 자력갱생의 원칙은 북한의 경제를 内部指向的인 것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외부경제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시킨채 内部經濟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원자재 및 원료, 그리고 기술부족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에 관해서만 외부경제와의 협력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품목은 내부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북한은 COMECON에 가입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國際的 分業 원칙에 의한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COMECON에 가입하는 것은 북한의 자력갱생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일성이 内部指向的 성장정책인 자력갱생을 부르짖은 다른 이유는 북한에 대한 대외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에 의존되어 있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예측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植民地 狀態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¹³⁾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内部指向的 성장정책은 内部動員의 극대화과 外部依存度의 극소화로 나타났다. 내부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북한은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군중로선」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돌격대운동」, 「속도전」 등을 전개하여 전 주민이 경제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動員體制로 변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군중로선」은 1930년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같이 생산력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초기 사회주의 건설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 결과 1954년-1956년간의 전후복구 3개년계획 기간중 工業 총생산액은 연평균 41.7% 증강되었고, 1957년-1960년간의 5개년 계획기간 중 工業 총생산은 연평균 36.6%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外部依存度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원료의 국산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원자재와 원료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는

12) 김일성은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하며, 자기의 노동과 국내자원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 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p.223.

13)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p.537.

다른나라에 經濟的으로 隸屬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원료·원자재의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일성은 한 나라가 지립경제를 이룩하려면 적어도 원료·원자재의 70%는 자급자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¹⁴⁾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북한은 석유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보다는 석탄생산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內部指向的 성장전략은 초기 사회주의 건설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초 까지 북한이 고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계획기별 공업생산 증가율

| 경제계획기 | 공업총생산액 연평균증가율(%) | 기준연도에 대한 배수 | | 소비재생산 |
|------------------------|---------------------|-------------|-------|-------|
| | | 총생산액 | 생산재생산 | |
| 전후복구3개년 계획(1953-56) | 41.7 | 2.8 | 4.1 | 2.1 |
| 5개년계획 (1957-60) | 36.6 | 3.5 | 3.6 | 3.3 |
| 7개년계획 (1961-70) | 12.8 | 3.3 | 3.7 | 2.8 |
| 6개년계획 (1971-76) | 16.3 | 2.5 | 2.6 | 2.4 |
| 2차7개년계획 (1978-84) | 12.2 | 2.2 | 2.2 | 2.1 |
| 3차7개년계획 (1987-93) | 9.6 | 1.9 | - | - |

자료 : 추재호, “북한의 산업구조”, 박문정의,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79.

나. 效率的 資源配分

14) The Building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in North Korea (Pyong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7), p.158.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따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1) 중앙에서 경제발전전략, 경제성장률, 자원의 배분 및 소득의 분배에 이르기 까지 경제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며, (2) 계획목적을 전체주의적 방법으로 수립하여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며, (3)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소비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4) 국가에서 임명된 기업관리자의 재량권의 극히 제한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하에서는 국가의 계획수립이 비교적 용이하고, 국가적 욕망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따라오게 하는 장점이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 3개년 계획기간 동안 단기간내에 북한의 경제를 전쟁전 상태로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모든 물자를 총동원하였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최소로 유지한채 생산의 극대화를 꾀하여 경이적인 속도로 복구에 성공하였다. 이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만 가능한 사실이다.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의하여 北韓에서는 모든 生産手段이 社會化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은 사회전체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통일된 지도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경제발전 추진은 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된다. 다시 말해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 하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은 全社會的인 수준에서 사전에 준비된 경제계획에 입각하여, 산업간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동원을 통하여 생산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政治的 目的과 經濟的 目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당의 노선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政治的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장점을 가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북한은 첫째,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경제에 대하여 확고한 政治的 統制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둘째, 경제전반에 걸쳐 黨의 統制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重工業 우선정책의 경제발전전략, 그리고 물질적보상에 의한 동기유발 보다는 黨性과 革命性을 중시한 勞力動員體制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초기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15) 김광수, "북한경제계획에 대한 평가", 박문정(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222.

V. 北韓體制的 政治·經濟的 弱點

1. 政治的 側面

김일성체제가 46년간이나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지만 현재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김일성의 高齡으로 인하여 통치력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점과, 그 後繼體制가 김일성의 正統性和 權威를 이어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고도의 閉鎖的 全體主義 1인 獨裁體制로 말미암아 내부로부터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東歐 共產政權의 붕괴로 인하여 그 여파가 北韓에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 權力承繼에 따른 正統性的 危機

김일성은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여 왔다.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하여 유지되어온 체제는 그 카리스마가 사라졌을 때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權力承繼者의 카리스마가 그 전임자의 카리스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때 彼統治者들은 승계자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에 의한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여 온 북한은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물려주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1973년 부터 김정일을 黨의 주요 요직에 임명하여 노동당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며, 각종 大衆動員運動 및 宣傳·煽動運動을 통하여 김정일로 하여금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물려받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김정일이 최종적으로 체계화 하였다고 선전하면서 통치이데올로기의 이론가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다. 즉, 북한은 김정일에 의한 權力世襲을 위하여 20여년간이나 준비해 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1인 독재체제의 한계에 대하여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權力承繼 作業 그 자체가 김일성의 카리스마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김정일의 權力承繼에 대한 정통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달리 순탄한 경로를 통하여 권력의 중심에 접근하였으며, 黨·政·軍 내에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없이 오로지 김일성의 권위에 의해서 비호 받아왔다는 사실은 김정일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취약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正統性的의 危機란 彼支配層이 정치체제가 지닌 권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구조의 붕괴 및 기능수행에 마비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며,¹⁾ 주로 비제도적인 권력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물려받지 못함으로써 초래될 정통성의 위기는 김정일의 정치적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北韓體制의 政治的 安定性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²⁾

나. 理想的 支持基盤의 弱化

共産主義 國家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그들의 공식적인 정치이데올로기로서, 國家와 黨을 지배하는 행동원칙으로서, 그리고 권위를 지지하는 理念體系로서 이용되어져 왔다. 다소 국가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 「자본주의자」, 「제국주의」, 「부르조아」 등과 같은 공통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1) 공산주의 이념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기능, (2)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화(Legitimization)의 기능, (3)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체계에 의한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의 기능, (4) 근대화를 지향한 사회주의 건설의 동원(Mobilization)의 기능, (5) 체제유지와 발전(Maintenance and Development)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³⁾ 이러한 관점에서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북한사회를 지배·통치하는 강력한 思想的, 理想的 手段으로 가능하면서 북한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여 왔다.

한편, 1955년에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었다고 하는 주체사상은 1970년대에 들어와

1) Leonard Binder(ed.), *Crisi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p.74-75.

2) 김정일 승계체제의 정통성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백병훈, “북한체제유지 능력의 지속과 한계”, 『북한·통일연구논문집(Ⅲ)』, 통일원(1991), pp.79-180참조.

3) [상계서], p.115.

「김일성주의」로 定式化되었고, 북한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行動樣式을 규제하는 唯一思想體制로 발전하였다. 김일성 정권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이룩하여 체제유지에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인간중심의 사상이라고 하면서도 그 실천 방도는 「자기수령의 사상대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여 김일성을 絶對的인 專制君主와 같은 통치자의 위치에 올려 놓았다. 주체사상은 이념적인 차원에서 통치수단의 한 방도가 되었으며, 권력의 독점 또는 정치적 통제 등과 같은 全體主義 社會의 特性과 결합하여 김일성에 의한 全體主義的 1인 獨裁體制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한 통치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1970년대 초의 국제정세 변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간의 관계변화에 대하여 북한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西方과의 교류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先進 資本主義 國家들로 부터 資本과 技術導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었으며, 1984년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투자를 합법화하는 「합영법」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外貨不足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開放은 비록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1984년 「합영법」을 공포한 후 「로동신문」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인민들의 투쟁을 마비시키는 마약”⁴⁾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자본주의 침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더욱 강화되어 갔으며, 1988년의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西方의 資本과 技術導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북한의 경제건설은 주체노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89년 헝가리가 東歐 共產諸國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자 「로동신문」은 이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東歐에 留學中이던 학생들을 소환하여 정치사상교양을 실시하였다.⁵⁾ 또한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끝나자 북한당국은 이를 통하여 西方의 文化와 思潮가 침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4) 「로동신문」, 1984년 9월28일, 10월 5일, 10월13일자.

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no. 1(1990), p.29.

하고 정치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의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⁶⁾와 1992년 1월 3일 발표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⁷⁾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조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고하였다. 북한은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이후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필연법칙이므로 부르조아 사상의 침투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김일성-김정일父子에게 모든 운명을 의탁한채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고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강화는 특히 청소년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새세대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준비시키지 않으면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수 없으며,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資本主義 思潮의 流入에 따른 청소년들의 理想的 解弛를 점검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理想武裝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정치사상교양의 중요성은 북한정권 수립 44주년을 기념하는 「9.9절」행사에서조차 재차 강조되어 북한정권이 자본주의 사조의 유입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워 하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는가는 잘 말해준다. 정무원 총리 연형묵은 「9.9절」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韓·中修交와 國際情勢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앞으로도 帝國主義의 社會主義 抹殺 및 反北策動에 맞서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동요없이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⁸⁾임을 역설하였다.

북한은 비록 그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資本主義 社會로 부터 技術과 資本을 導入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자본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정신을 오염시키는 『독소』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문화와 사상이 주체화 되어 있는 북한사회에 침투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본주의 사조가 북한에 침투하였을 경우 東歐에서와 같이 그들도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로동신문」, 1991년 5월 5일자.

7)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자.

8) 「내외통신(주간판)」, 1992년 9월17일자.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다”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외친다 해도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종언을 고하고 있으며, 더이상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현 국제사회의 조류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이념체계로서의 주체사상은 향후 서서히 그 생명을 잃어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北韓 政治體制의 理念的 支持基盤은 弱화될 것이다.

2. 經濟的 側面

북한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대되는 貿易赤字, 外債支拂 不能 狀態로 까지 악화된 외화사정, 원자재·원료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반적 生産不振, 重工業 우선정책으로 인한 産業間 不均衡 등으로 북한의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1년도 국민총생산은 229억불, 그리고 1인당 GNP는 1,038불로 추정되어 1인당 국민소득수준은 한국의 1/6정도이며, 경제규모는 1/12에서 지나지 않는다. 이로써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한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여러가지가 지적될 수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1) 産業構造의 不均衡 深化, (2) 産業設備의 老朽化와 技術水準의 落後, (3) 物質的 動機附與의 결여로 인한 노동자들의 勞動意慾 低下, (4) 社會間 接設備의 未備, (5) 國內 資本, 資源의 絶對的 不足 등을 들수 있다. 이에 더하여 重工業과 軍事部門에 대한 過多投資 및 對內指向的인 자립경제 건설전략은 북한의 경제를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 非效率的 經濟管理體制

소련 및 동구 공산제국의 붕괴, 그리고 중공의 경제관리체제 수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과거 스탈린식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해 오고 있다. 北韓의 경제체제는 경제계획을 중앙계획위원회인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가 노동당의 지침을 받아서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에 의해 管理·運營되며, 이 「인민경제계획」은 黨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되는 「인민경제계획」은 生産, 分配, 消費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침을 준다, 즉 농업, 어업, 광공업 등 각 부문에 대한 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상품유통계획, 무역계획, 노동계획 등 계획항목들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들을 다시 장기전망계획,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일계획 등으로 나누어 집행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계획사항들은 상부로 부터 하부조직으로 하달되며, 최하위에 있는 공장, 기업체 또는 집단농장은 상부로부터 생산목표, 자원 투입량, 투자재원, 기술 등 모든 세부사항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로 인한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첫째, 한번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⁹⁾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하려면 여러계통의 기관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목표를 변경하기 보다는 최대의 동원을 통하여 목표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經濟體制 內部에서의 矛盾을 증폭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북한의 근로자들은 과다하게 책정된 생산목표를 수정하여 下向調整하기 보다는 생산실적을 과대평가하여 허위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노력동원이 극심하였던 60년대, 그리고 「속도전」이 전개되는 기간동안 더욱 심하였다.

둘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경제의 모든 부문을 중앙에서 계획하고 또한 그 수행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기구의 계획·관리업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러한 업무의 방대성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불가능한 동시에 경제의 部門間 不均衡이 심화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북한은 부문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건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채취공업, 수송에서의 부진은 전산업부문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전력발전의 부진, 원유도입에서의 문제점, 채광설비의 노후화, 수송수단 및 도로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및 원료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완제품의 수송이 원활치 못함으로써 타분야에서의 산업시설 가동율을 저하시켜 경제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9) 이태욱, “경제:자력갱생의 이점과 한계”, 이상우(편), 「북한 40년」, pp.214-215.

나. 자금자족체제의 閉鎖性

북한의 경제체제는 다른 공산제국의 경제체제와 비교해 볼때 閉鎖性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북한은 스탈린 방식의 「일국사회주의」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자금자족 民族經濟의 建設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왔기 때문이다. 자력갱생을 기초로 자금자족 경제체제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첫째, 重工業 우선정책을 채택하게 하였다. 농업보다는 공업, 소비재 생산 보다는 생산재 생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결과 소비재 산업과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연되었다. 또한 重工業 우선정책의 결과 주민들의 소비생활과 직결된 輕工業이 낙후되어 최근 消費財 부족현상은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社會間接 部門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산업전반에 걸쳐 부문간의 유기적 관계 미흡, 부문간 불균형 등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1991년 북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어업이 전체의 28.0%, 건설을 포함한 광공업부문이 전체의 46.2%, 서비스부문이 20.9%를 차지하여, 3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1991)

(단위 : %)

| | | | |
|---------|--------|-------------|--------|
| 농 립 어 업 | 28.0 | 전 기 가 스 수 도 | 5.0 |
| 광 공 업 | 38.0 | 건 설 업 | 8.2 |
| 광 업 | 7.9 | 서 비 스 | 20.9 |
| 제 조 업 | 30.0 | (정 부) | (13.0) |
| (경 공 업) | (8.7) | (기 타) | (7.9) |
| (중 공 업) | (22.0) | 국내총생산(GNP) | 100.0 |

자료 : “1991년 북한 GNP추정결과(보도자료)”, 한국은행, 1992년 8월.

둘째, 자금자족적 경제발전 전략은 북한의 경제를 閉鎖體制로 유지하게 하였다. 정권수립 초기부터 북한은 대외경제 교류를 최저수준으로 지속시켜 왔다. 對外貿易은 경제계획에서 수급에 차질을 메꾸는 보완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고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국내시장의 성장에만 주력해 왔다. 이같은 폐쇄경제체제는 대외

경제 협력을 통한 國際分業의 이익을 누릴 수 없으며 해외자본도입, 기술이전, 해외 시장개척 등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없는 불리한 제약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對內指向的인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대외 교류 증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방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하여 1984년에는 西方 企業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합영실적을 살펴보면,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이후 1992년 9월말 까지 약 14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합영기업명, 합영당사자, 자본금, 사업내용 등이 확인된 합영실적은 약 100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다시 북한내 유치와 해외진출로 구분해 보면, 각각 70건과 30건이며, 총투자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표된 것은 없지만 약 1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투자액은 대부분 1백만달러 내외의 소액이었고, 투자비율은 50:50이 가장 많았다. 또 업종별로는 식당,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분야가 40%, 경공업분야가 25%, 농수산분야가 15%, 의료분야가 9%였다. 한편 합작대상으로는 在日 朝總聯이 가장 많아 70%이상을 차지하였고, 중국과 옛소련이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¹⁰⁾ 이처럼 북한이 조총련을 주요 합작 파트너로 삼고있는 것은 서방과의 합작은 市場經濟原理를 북한내부로 가져들어들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합영파트너를 親北 企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합영실적의 부진을 가져왔다. 특히 합작사업의 문제점으로는 (1) 주체사상 및 자력갱생원칙과의 상충, (2) 개혁·개방의지 미흡, (3) 당의 통제에 따른 기업경영의 경직성, (4) 빈약한 대외신용도 및 투자위험에 대한 부담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집착하여 있는한 經濟開放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폐쇄적 경제체제,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기계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주체사상의 기본원칙은 産業施設의 老朽化와 技術水準의 後進性을 초래하였다. 북한의 주요산업설비는 대부분 1970년대 이전에 도입된 것이어서 그 설비의 수명이 평균 20-30년이 경과되어 고장률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산업설비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外貨의 不足으로 일부 신설되는 공장설비의

10) 「내외통신(주간판)」, 1992.10. 8

상당한 부분을 자체의 기술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¹¹⁾ 이러한 기술수준의 후진성은 북한의 경제를 장기적 침체에 빠지게 한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기술수준의 후진성에서 초래되는 低生産性을 극복하기 위하여 大衆動員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북한의 大衆動員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며, 기술진보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를 추구하기 보다는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서, 동일한 기계에 대하여 보다 많은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50년대의 「돌격대운동」, 「천리마운동」, 60년대의 「속도전」, 그리고 80년대의 「100일전투」, 「200일전투」 등은 모두 노동투입을 증대시켜 생산을 증대시키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하게 되면 한계에 도달하여 더이상 효과적인 발전전략이 되지 못한다. 北韓의 大衆動員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은 6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長期的 經濟沈滯

1984년의 「합영법」채택은 북한경제의 심각성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다른 사실은 북한이 제2차 7개년계획의 완수를 발표한 후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제3차 7개년계획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1985년 2월 17일 제2차 7개년계획의 완수를 발표하면서 계획기간중 공업총생산을 연평균 12.2%씩 증가하여, 1984년에는 1978년에 비해 2.2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1986년 10월에야 제3차 7개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제2차 7개년계획은 사실상 9년에 걸쳐 완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2월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해임되었고, 정무원총리가 이근모에서 강성산으로 교체되었던 사실도 2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北韓의 工業生産 증가율을 살펴볼 때도 북한의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빠져

11)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1, 12, p.215.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전후복구 3개년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공업생산 증가율은 무려 41.7%에 달했으며,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의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36.6%, 1961년 부터 1970년 사이의 7개년계획기간 동안에는 갑자기 12.8%로 떨어졌으며, 1971년 부터 1976년 사이에는 16.3%로 조금 증가하였다가, 1978년 부터 1984년까지의 2차 7개년계획기간 동안에는 다시 12.2%로 하락하였다. 이후 1987년부터 1989년 까지의 3년 동안 經濟成長率은 연평균 3%를 기록하였고, 1989년의 성장율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1990년에는 -3.7%라는 북한정권 수립이 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1년에는 -5.2%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1990년 | 1991년 |
|-----------------|-------|-------|
| 농 립 어 업 | -10.2 | 2.3 |
| 광 공 업 | -2.9 | -11.9 |
| 전 기 가 스 수 도 | -2.2 | -4.5 |
| 건 설 | 5.9 | -3.4 |
| 서 비 스 | 0.3 | -5.1 |
| 국 내 총 생 산 (GDP) | -3.7 | -5.1 |
| 국 민 총 생 산 (GNP) | -3.7 | -5.2 |

자료 : “1991년 북한 GNP추정결과”, 한국은행, 1992. 8.

이러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지상의 낙원」인 북한에서는 식·의·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이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평양의 경공업대학 학장은 “우리의 소비재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¹²⁾고 인정한 바 있다.

북한이 최근들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80년대 후반 무리한 건설사업

12) The People's Korea, August 2, 1986.

을 추진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한 非生産的인 부문에 투자를 집중한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기계설비의 老朽化와 기술수준의 後進性, 둘째, 경제 희생위에서 추진된 軍事力建設, 셋째, 內部指向的 자급자족 경제발전전략 등에 기인한다. 여기에 더하여,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대된 貿易赤字, 그리고 外債償還 不能으로 인한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협력 거부 등은 북한의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VI.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體制는 強點과 弱點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強點의 側面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이 理想的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 政治體制의 安定性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고, 弱點의 側面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점은 經濟危機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北韓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안정성은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존재가 사라지고나면 政治的 安定性도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김일성이 존재하는 한 북한체제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死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우며, 김정일의 權力承繼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안정성을 유지해 나간다면 변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北韓體制의 變化 可能性

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중 가장 주목받을 만한 것 중의 하나는 「합영법」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北韓은 改革과 開放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蘇聯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자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더욱 유지·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

1)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1)무계급사회의 실현, (2)“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3)주체형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계 옹호·고수, (4)인민정권의 강화, (5)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로선 관철, (6)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의 관철, (7)혁명적 질서를 세우고 사회주의 범무생활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계승·발전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86년 12월 31일자.

비록 김일성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옹호·고수를 역설하였지만 8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西方과의 교류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歐 共產國家들이 한국과 修交하자 북한은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종래의 反帝國主義路線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고수 입장을 재천명하였다.²⁾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의 본질은… 군사적으로 위협 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매수하여 사상 문화적으로 와해시켜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것”³⁾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사회주의를 말살하려해도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로의 역사의 흐름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사회주의 승리와 제국주의 멸망은 역사의 필연적 법칙이라 하였다.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를 통하여 동구 공산제국의 몰락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인민대중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근본원칙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세우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 나가야 한다”⁴⁾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른 社會主義 諸國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현 국제정세를 볼때, 북한이 변화에 완전히 역행하여서는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졌으며, 북한정권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1991년 7월 25일 김일성은 「조·일우호축진의원연맹」 소속의 방문단을 맞아 “우리나라도… 지구의 움직임과 더불어 행동해 나간다. 그러나 한가지 만큼은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치이다”⁵⁾라고 하여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지만 북한의 현 체제를 고수하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1992년의 신년사에서도 김일성은 東歐 社會主義의 실패의 원인을 사회주의적 원

2) 1989년 12월 22일자 「로동신문」은 “혁명을 계속하는 길만이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길”이며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여 동구공산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3) 「로동신문」, 1989년 12월 22일자.

4) 「로동신문」, 1990년 1월 1일자.

5) 「동아일보」, 1991년 6월 25일자.

책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동구의 인민들은 고통과 불행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동구제국에서의 변화를 비판하고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처하여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서 단결”하여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⁶⁾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공식적인 태도를 관찰해 보면 북한이 주체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수정을 가하여 소련 및 동구에서와 같은 改革·開放體制로 변화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진다. 오히려 개방과 개혁이 그들의 체제에 어떤 위협을 초래할 것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교류를 강화하면서 서방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全面的인 經濟開放 보다는 中國式의 經濟特區 설치 등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개방으로 나갈 것이다. 經濟開放으로 인한 政治的 混亂 보다는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政治的 安定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에는 아직도 否定的인 側面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北韓體制의 政治·經濟的 特性을 들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全體主義 1인 獨裁體制, 經濟的으로는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閉鎖的 經濟體制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북한에 고유한 정치·경제적 속성은 주체사상이라는 기본 행동원칙에 의해 지배받아 왔으며, 새로운 사회관계의 발생과 형성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체제에 새로운 사회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개혁·개방은 거부할 것이다.

둘째는 北韓은 東歐와는 달리 西歐 民主主義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동구제국은 서구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70년대 부터 자본주의 사회와 활발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있어 왔고, 이러한 교류는 주민들로 부터 改革과 開放에 대한 요구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日帝 植民地에서 해방되자마자 蘇聯 占領軍에 의해 소비에트화 되었으며, 이후 閉鎖的 國家戰略으로 인하여 서구와의 접촉이 봉쇄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改革과 開放에 대한 요구는 동구와 비교해 볼때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6) 「로동신문」, 1992년 1월 1일자.

셋째는 北韓의 對南 革命路線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인민민주주의혁명에 의한 「남조선해방론」을 내세우면서 한반도의 赤化統一을 지상의 목표로 내세워왔다. 북한은 남한이 아직도 美帝國主義의 강점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상태에서 하루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남조선해방」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여 왔다. 이러한 「남조선해방론」은 김일성의 1인 獨裁體制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개혁·개방은 북한의 「남조선해방론」의 논리적 근거를 약화시키게 되며, 이는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체제붕괴로 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改革·開放에 대하여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넷째는 북한에서 개혁과 개방을 주도할 세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철저한 社會的 統制, 그리고 거둬진 肅清으로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거나 잠재적인 적대세력이 성장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북한에서 「아래로 부터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蘇聯 및 東歐에서의 개혁·개방의 경험은 北韓의 改革·開放에 否定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소련과 동구 공산제국에서의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졌음은 물론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쿠」가 처형되었고 동독에서는 「호네커」가 법의 심판을 받게되는 등 공산주의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현 기득권층은 체제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 北韓의 對南政策 展望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제국의 몰락과 시기를 같이하여 北韓의 對南政策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유엔가입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南·北韓의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 그간 북한은 유엔가입문제에 대하여 南·北間에 연방제가 실현된 후 하나의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방안 또는 통일전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유엔동시가입은 「두개조선」정책에 의한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라고 하여 반대입장을 펴왔다. 따라서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은 과거 북한이 주장해온 「하나의 조선」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南北共存體制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⁷⁾

그러나 북한의 통일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⁸⁾ 김일성은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연설을 통하여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들과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그리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과의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도 김일성은 종래의 赤化統一 野慾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¹⁰⁾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론」이란 統一의 본질적인 성격이 사상과 체제를 초월하는 남과 북의 民族的 團結이라는 것이며, 統一이 이룩되려면 남한사회가 북한 공산주의와 연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한사회를 공산화 한 다음에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7.4 공동성명」에 합의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을 견지하며, 남한의 국가보안법철폐와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중지 등을 비롯하여, 남한사회가 「聯共化」될 것을 강조한다.

7) 정규섭, “북한의 내부변화와 통일전략 전망”, 「국방론집」, 제18호(1992년 여름), p. 96

8) 북한은 유엔동시가입이 실현되고 난후 「로동신문」을 통하여 “우리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조선으로 조국과 민족을 통일할데 대한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가입을 기화로 하여 “두개 조선”으로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로동신문」, 1991년 8월 19일자.

9)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제578호(1990년 6월), pp.14-16.

10) 김일성은 이 담화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다...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동포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대오에 조직적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공고한 민족적 단결이 이루어 질수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민족의 대단결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이와 같이 북한의 統一戰略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완전승리로 부터 사회주의 고수, 남한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조국통일에서 부터 남한사회의 연공화를 통한 느슨한 연방제 유도¹¹⁾ 및 이에 의한 통일 실현으로 그 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가능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南北對話와 南北經協을 추진하는 한편, 남한사회의 교란을 동시에 추진하는 2중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3. 우리의 對北 政策方向

소련 및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 이후 우리는 북한의 崩壞 可能性에 어느정도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 남북유엔동시가입, 남북비핵화공동선언, 남북직교역 중대 등을 보면서 北韓體制가 開放體制로 변화될 것이라는 樂觀的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北韓은 對話와 交流의 이면에서 核開發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보듯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략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이는 對話를 앞세워 우리의 對北攻勢를 누그러뜨리며, 美·日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북한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內部浸透를 통하여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二重戰略이라 하겠다. 비록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기본적으로 對南 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렸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南北對話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 현 국제정세의 추세는 사회주의에 불리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는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또한 北韓의 經濟危機는 향후 北韓의 政策路線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이 권력의 正統性을 확보하려면 經濟危機를 가장먼저 해결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중국식이든

11)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북한이 종래의 「고려연방제」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두국가, 두제도 두정부」라는 기본방도하에 신축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연방제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식이든 현재보다는 개방된 체제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 정치·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급하게 어떠한 결실을 노리기 보다는 통일의 순간을 대비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北韓을 孤立시키지 않기 위하여 현 南北對話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南北關係의 正常化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국이었던 구소련 및 동구 공산제국의 붕괴로 인하여 정치·외교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엔동시가입이라는 대안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시된 차선책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소련 및 동구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중국과도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제무대에서 고립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의 고립은 남북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북대화의 단절 또는 60년대와 같은 對南 強硬政策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對南 強硬政策을 추구하지 않도록 대화의 창구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經濟交流 및 이산가족 방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北韓의 開放을 誘導하고 軍事的 對決構圖를 청산함으로써 平和共存體制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교류 그리고 이산가족 방문 사업은 북한을 궁극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를 통하여 北韓社會에 自由民主主義 思潮를 불어넣을 수 있으며, 인도적 견지에서 볼때도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우리의 經濟成長 및 對內 政治的 民主化를 달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견지하면서 번영된 통일한국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한과 비교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經濟的 優位, 그리고 自由民主主義 體制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政治·經濟發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附 錄〉

1. 북한의 대외무역, 1970-1991

(단위 : 백만불)

| 년 도 | 수 출 | 수 입 | 계 | 수지균형 |
|------|---------|---------|---------|----------|
| 1946 | — | — | 22.8 | — |
| 1949 | 76.3 | 106.0 | 182.3 | -29.7 |
| 1953 | 31.0 | 42.0 | 73.0 | -11.0 |
| 1956 | 65.8 | 74.5 | 140.3 | -8.7 |
| 1960 | 154.0 | 166.0 | 320.0 | -12.0 |
| 1965 | 208.3 | 232.8 | 441.1 | -24.5 |
| 1969 | 306.7 | 389.4 | 696.1 | -82.7 |
| 1970 | 342.2 | 421.3 | 763.5 | -79.1 |
| 1971 | 317.1 | 636.1 | 953.2 | -319.0 |
| 1972 | 411.7 | 755.1 | 1,166.8 | -458.6 |
| 1973 | 530.0 | 988.6 | 1,518.6 | -717.8 |
| 1974 | 717.9 | 1,435.7 | 2,153.6 | -466.4 |
| 1975 | 820.4 | 1,286.8 | 2,107.2 | -551.2 |
| 1976 | 593.0 | 1,144.2 | 1,737.2 | -198.2 |
| 1977 | 786.7 | 961.3 | 1,747.9 | -174.6 |
| 1978 | 1,234.6 | 1,109.9 | 2,344.5 | 124.7 |
| 1979 | 1,632.1 | 1,489.1 | 3,121.2 | 143.0 |
| 1980 | 1,584.2 | 1,874.4 | 3,458.6 | -290.0 |
| 1981 | 1,532.0 | 1,099.7 | 2,631.7 | -432.3 |
| 1982 | 1,506.2 | 1,314.0 | 2,910.3 | -282.3 |
| 1983 | 1,367.9 | 816.7 | 2,184.6 | -551.2 |
| 1984 | 1,313.0 | 1,194.4 | 2,507.4 | -118.6 |
| 1985 | 1,655.3 | 1,169.4 | 2,824.7 | -485.9 |
| 1986 | 1,926.2 | 1,315.7 | 3,241.9 | -610.5 |
| 1987 | 2,368.6 | 1,435.1 | 3,803.7 | -933.5 |
| 1988 | 2,920.6 | 1,764.9 | 4,685.5 | -1,155.7 |
| 1989 | 1,685.5 | 2,904.7 | 4,590.2 | -1,219.2 |
| 1990 | 1,857.1 | 2,929.7 | 4,786.6 | -1,072.6 |
| 1991 | 1,240.0 | 2,280.0 | 4,520.0 | -1,040.0 |

자료 : (1) 1946년 부터 1976년, 1981년 부터 1988년까지는 IMF, *Directions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0-1978, 1981-1990. (2) 1977년 부터 1980년 까지는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ming Reunification*, The Economics Intelligence Unit, Special Report, No. M212 (April 1992), p.22. (3) 1989년 부터 1991년 까지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China, North Korea*, 1992-1993, p.88.

2. 북한의 대소, 대중, 대일 무역, 1970-1991

(단위 : %)

| 년 도 | 소 련 | 중 국 | 일 본 |
|------|---------------|---------------|---------------|
| 1970 | 50.9 (-177.0) | 15.2 (-17.7) | 7.5 (5.7) |
| 1971 | 56.5 (-267.4) | 17.8 (-37.9) | 6.1 (-4.9) |
| 1972 | 42.0 (-179.4) | 24.7 (-73.0) | 11.9 (-69.9) |
| 1973 | 33.8 (-152.6) | 22.8 (-131.8) | 11.6 (176.7) |
| 1974 | 22.2 (-85.7) | 18.6 (-134.6) | 17.4 (178.2) |
| 1975 | 23.6 (-77.1) | 23.4 (-132.7) | 12.2 (-140.2) |
| 1976 | 24.4 (-109.1) | 23.4 (-143.2) | 9.0 (-40.7) |
| 1977 | 26.6 (-23.4) | 21.7 (-116.1) | 11.3 (-77.8) |
| 1978 | 24.6 (10.9) | 19.3 (-50.5) | 12.7 (-105.1) |
| 1979 | 26.8 (-3.9) | 22.1 (-48.5) | 15.2 (-172.5) |
| 1980 | 26.1 (-50.0) | 19.4 (-135.9) | 16.3 (-248.9) |
| 1981 | 29.4 (-78.6) | 20.5 (119.4) | 17.0 (-192.2) |
| 1982 | 33.8 (16.8) | 20.1 (-32.9) | 16.5 (-207.4) |
| 1983 | 36.1 (83.9) | 24.3 (-69.6) | 21.8 (-244.3) |
| 1984 | 36.3 (23.4) | 19.8 (-1.1) | 16.4 (-148.4) |
| 1985 | 62.5 (-300.4) | 17.3 (-37.5) | 15.4 (-113.5) |
| 1986 | 53.1 (-436.6) | 16.5 (-25.6) | 11.0 (-49.6) |
| 1989 | 55.2 (-750.4) | 12.3 (-231.8) | 10.5 (51.7) |
| 1990 | 56.7 (-620.5) | 11.4 (-261.9) | 9.7 (77.5) |
| 1991 | 31.4 (-295.0) | 13.5 (-449.0) | 11.2 (61.0) |

자료 : 1970년 부터 1988년 까지는 IMF, Directions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1-1990,
 1989년 부터 1991년 까지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China,
North Korea, 1992-1993에서 계산한 것 임.

* ()은 무역수지균형

3. 북한의 대외 부채, 1991년

(단위 : 백만불)

| 국 가 | 총 액 |
|-------|-------------|
| 소련 | 1,300-1,500 |
| 동구 제국 | 600 |
| 중국 | 650 |
| 일본 | 440-460 |
| 이탈란 | 350 |
| 호주 | 340-350 |
| 영국 | 170 |
| 스웨덴 | 170 |
| 스위스 | 145 |
| 프랑스 | 130 |
| 오스트리아 | 100-115 |
| 이태리 | 65 |
| 핀란드 | 20-70 |
| 시리아 | 15 |
| 총 계 | 4,495-4,790 |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no. 3(1992), p. 24.

4. 부문별 성장목표

| 부 문(단위) | 70년대 전망목표 | 제2차 7개년계획 | 80년대 전망목표 | 제3차 7개년계획 |
|-------------|--------------|--------------|--------------|--------------|
| 전력발전(십억kwh) | 50 | 56-60 | 100 | 100 |
| 석탄(백만톤) | 100 | 70-80 | 120 | 120 |
| 철(백만톤) | 12 | 7.4-8 | 15 | 10 |
| 비철금속(백만톤) | 1 | 1 | 1.5 | 1.7 |
| 기계류(백만톤) | 5 | 5 | - | - |
| 화학비료(백만톤) | 5 | 5 | 7 | 7.2 |
| 시멘트(백만톤) | 20 | 12-13 | 20 | 22 |
| 섬유(십억m) | - | 800 | 1,500 | 1.5 |
| 곡물(백만톤) | 10 | 10 | 15 | 15 |
| 간척지개간(천정보) | 100 | 100 | 300 | 300 |

<參考文獻>

1. 國文資料

- 김갑철, 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 문우사. 1988.
-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통일문제연구」. 제4권 2호 (1992년 여름). pp. 106-133.
-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제578호 (1990년 6월).
- 「김일성선집」, 제2판, 제6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1964.
-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1989.
-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5권,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6.
-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9.
- 「내외통신(주간판)」, 1992년 9월 17일. 1992년 10월 8일.
- 「동아일보」, 1991년 7월 25일.
- 「로동신문」, 1963년 4월 11일, 1963년 10월 28일, 1970년 11월 10일, 1982년 9월 22일, 1984년 9월 28일, 1984년 10월 5일, 1984년 10월 13일, 1986년 12월 31일, 1989년 12월 22일, 1990년 1월 1일, 1991년 1월 1일, 1991년 5월 5일, 1991년 8월 5일, 1991년 9월 19일, 1992년 1월 1일, 1992년 2월 4일.
- 박문정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백병훈, “북한체제유지 능력의 지속과 한계”, 「북한·통일연구논문집(Ⅲ)」. 통일원, 1991. pp. 79-180
- 「북한경제개관」. 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 「북한개요」. 통일원. 1990.
-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 양성철, 박한식(편저). 「북한기행」. 서울 : 한울. 1986.
-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6.
- 「월간북한동향」.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2. 6월 - 10월.
- 이정희. 「북한요론」. 서울 : 문헌사. 1987.
- 이태욱. 「북한의 경제」.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서울 : 형상사. 1991.
- 유영욱. “북한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3호(1992년 가을). pp. 9 - 39.
- 이상우(편). 「북한 40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 을유문화사. 1988.
-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중앙년감」. 1980 - 1991.
- 조진경. 「민족자주화운동론(Ⅱ)」. 서울 : 백산서단. 1988.
- 전인영(편). 「북한의 정치」.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 정규섭. “북한의 내부변화와 통일전략 전망.” 「국방론집」. 제18호(1992년 여름). pp. 77 - 107.
- 최명(편). 「북한개론」.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한체제연구」. 서울 : 고려원. 1987.

2. 英文資料

- Binder, Leonard (ed.). Crisi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The Building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in North Korea. Pyong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7.
- Central Statistical Bureau, State Planning Commission, Statistical Returns of National Economy of the DPRK(1946-1960). Pyong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0.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1990 -

- 1992.
- _____. Country Profile, China, North Korea. 1992–1993.
-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pecial Report, no. M212 (1992).
-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New York : Praeger. 1965.
- IMF. Directions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0–1990.
- Koo, Bon-Hak.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 Miliband, Ralph. "Socialism in Question," Monthly Review. vol XXXII, no. 10 (Marh 1991), pp. 16–26.
-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DPRK, 1945–1960. Pyongyang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0.
- Paige, Glenn D.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66.
- The People's Korea. February 6, 1963. August 2, 1986.
-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Korean Communism, 1945–198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ed. by Talot Parsons. New York: The Fre Press. 1964.

北韓政權의 對南戰略에서 나타나는 民族的 動機와
김일성의 「民族主義」: 分析, 批判, 對應理論

安 正 秀(慶熙大 教授)

목 차

序言

| | |
|--|-----|
| 제 1부 분석과 비판 | 95 |
| I. 북한에서 言表되는 “민족주의”- 結과 속 | 95 |
| II. 김일성의 “민족주의”- 그 正體 | 97 |
| III. 북한정권이 민족적 동기를 강조하는 배경 | 108 |
| IV. 북한정권의 민족적 동기의 강조가 남한에서 얻는 효과 | 110 |
| 제 2부 대응·극복을 위한 이론의 기초 | 112 |
| I. 세계사적 전망 | 112 |
| II. 통일정책의 원리 | 115 |
| III. 敵은 누구인가 | 119 |
| IV. 統獨 정책이 주는 示唆 | 124 |
| 제 3부 민족적 동기와 관련된 의식들 | 133 |
| I. 民族意識의 개념 | 133 |
| II. 「민족의식」과 관련되는 의식 | 137 |
| - 「고향의식」, 「조국애」, 「역사의식」 | |
| III. 「민족의식」의 내용 | 147 |

序 言

90년대에 들어 선 이후 북한정권의 對南戰略에 있어서 민족적 동기가 강조되고 있다. 「민족해방」이라든가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이란 것을 그 規約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조선로동당」과 그 首領으로서는 그 정책목표의 추구라는 차원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정권의 정당성확보를 위한 필요에서도 민족적 동기를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나, 근래의 양상을 보면 유다른 점이 발견된다.

1991년 8월 1일 金日成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을 상대로 한 談話¹⁾에서 “계급, 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이며, “민족이 있고 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고 하여 민족적인 것이 계급적인 것 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稱하였다. “공산주의자”요 “국제주의자”라는 表明에 더하여 “민족주의자”라는 것이 하나 더 첨가된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수령이 자신에 대해 “민족주의자”라는 言表를 가한 것이다.

공산주의 신봉자가 자신을 “국제주의자”로 호칭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그 이데올로기의 본질상 당연한 일에 속하지만, “민족주의자”라는 호칭은 전혀 뜻밖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政治史에 있어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상에서 부정되어 온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5년전(1986년 7월 15일)만해도 그의 후계자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민족 제일주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고 못박았던 것이다.

1)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이 담화의 全文은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자에 실려 있음.

김일성은 과연 자기자신을 “민족주의자”로 변신시킨 것일까. 김일성父子는 참으로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계급적 이익”을 그에 종속시키고 있는가. 조선노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계급로선”을 포기한 것일까. 북한의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민족적 동기의 言表, 그것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제1부 분석과 비판

I. 북한에서 언표되는 “민족주의” - 결과 속

조선노동당 수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작년 8월의 突發事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의 언론매체들에 의해 敷衍과 彫琢이 가해지고 있다. 금년 5월 13일의 <평양방송>은 “위대한 수령께서 밝히신 진정한 민족주의에 관한 사상”을 論說의 주제로 삼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김일성의 “민족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論旨를 폈다. 여기서 “진정한 민족주의”란 표현은 이른바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對向개념으로 상정한 것이다. 신문의 논설도 예외가 아니다. 1992년 6월 26일자 <로동신문>의 論說을 보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누구나 민족의 공통성을 첫자리에 놓고 조국애와 민족사적 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할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민족의 공통성의 우선, 祖國愛, 민족사적 정신과 같은 것은 “민족주의”의 내용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 외교정책적인 면과 관련해서도 민족적 동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사례들도 눈에 뜨인다.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논평기사²⁾를 통해 日本에 대해 “과거청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에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민족주의”라는 것이 언어로서 표현되고 정서적인 분위기로서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의 정권이 階級主義 노선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니, 계급의식은 더욱 고취되고 있고 노동계급적 관점은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 “민족주의자”를 自稱했던 그 달의 하순 그의 권력상속자 김정일은 첫 청년절을 맞은 청년들과 「사로청」 일군들에게 보낸 書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높은 계급의식과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은 혁명가의 기본품성의 하나입니다. 계급

2) 「로동신문」 1992년 10월 22일자

의식이 높지 못하고 로동계급적 관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모든 사회현상을 로동계급적 관점과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착취제도의 반동적 본질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³⁾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로동계급적 관점」의 提高와 「사회주의적 원칙」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의식이 높지 못하고 로동계급적 관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울 수 없는” 것이니, 청년들은 모든 사회현상을 “로동계급적 관점과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보다 일찌기 계급사회에서 초계급적인 사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은 계급의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계급사회에서 계급 밖에 서 있는 사람, 계급을 초월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초계급적인 사상도 있을 수 없”으며, 계급의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으로, 핵으로 된다”고 하였다.⁴⁾ 그것은 “사상의식”에서 “기본”이요 “핵”이라는 것이다.

“기본”이자 “핵”이 포기될 수 있을까. 포기는 커녕 지금 북한에선 그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로동당」의 기관지의 論調는 이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도 사회주의의 원칙과 계급투쟁의 진리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당의 립장”이라고 강조되고 있다.⁵⁾ “계급투쟁의 진리”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급노선을 강화하면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곡절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분명해 지는 사실은 북한정권의 “민족주의”가 우리가 개념하는 바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계급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북한 통치자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동시에 고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

3)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로동신문」 1991년 8월 27일자 참조.

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주체사상총서」2권, p.458.

5) 「로동신문」 1992년 11월 7일자 논설.

의」는 “로동계급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계급적 사상감정”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⁶⁾ 예의 김정일 書翰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빛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당이 빛내며 나가는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우리 인민의 삶의 요람입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것 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조국에 바친 값높은 생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귀중함을 깊이 체득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공산주의자들이 愛國心을 강조할 때 쓰는 용어이다. 이것은 “철저한 계급적 성격을 띤 애국적 감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로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상감정이며 온갖 계급적 원수들을 증오하는 감정이며 자기의 계급적 동맹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상감정”으로 설명되는 것이다.⁷⁾ 자기민족의 일부를 敵對階級으로 전제하고 그를 “원수”로 증오하며, 그보다는 국제적으로 계급적 동맹자들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상감정이다. 본래 애국심은 이와같은 敵對主義를 반대하는 것이요, 民族意識은 階級意識을 극복하는 것이다. 적대주의와 계급의식, 그리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같은 것은 「민족」 내지 「민족 국가」이념과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북한의 통치자가 “민족주의”라는 것을 言語로서 표방하고 있으나 裏面의 현실은 변함없이 「계급주의」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며 혹은 「프로레타리아 애국주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 지배자가 “민족적인 것”을 내세우는 데는 필시 꾀절이 있으리라. 그가 주장하는 「민족주의」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며, 계급적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내세우는 까닭은 무엇일까.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II. 김일성의 “민족주의” — 그 正體

6) 최성욱,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6, pp.28f.

7) 같은 책, p. 31.

김일성의 이른바 「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定義되는 것이다. 계급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포기가 전제되지 아니한 입장에서 이같은 「민족」, 「자주성」등의 언설들은 대체 어떤 개념의 것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두 단계의 절차가 요구된다. 먼저 김일성의 「민족이론」, 곧 「주체의 민족이론」이라는 것을 살피는 일이다. 김일성식 「민족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족」과 그 유관 언어들 의 개념을 분석하는 일이다.

언어는 하나의 記號체계이다.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상, 감정, 의지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 언어의 개념,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이 다르면 기호는 동일해도 指示對象은 정반대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김일성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서 그가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와는 대립되는 것이고 이의 극복을 기도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가 “민족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서 그가 우리가 이해하는 「민족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김일성, 또는 북한정권은 「민족」에 대한 定義를 어떻게 내리고, 그 관련 언어들 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1. 「주체의 민족이론」

김일성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민족」이란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그의 言說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루어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論究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제2권에 들어 있는 「사회적 집단, 계급과 민족」⁸⁾을 일차자료로 삼고 살펴 보기로 한다. 계급과 민족에 대한 김일성의 언설과 그의 의중을 십분 헤아리는 사람에게 의한 체계적 해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이런 것을 “주체의 민족이론”이라 칭하기도 한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이론이라는 뜻이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이 계급과 민족에 대해 밝힌 이론」이라 하면 좀더 분명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것은 “특히 민족해방운동을 승리의 궤도로

8)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pp.57-76.

밀고 나갈 수 있는 과학적인 이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주체의 민족이론」은 북한에서만 아니라 남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널리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민족이론”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들도 적잖다. 통일문제 또는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시대 민족문제 해결의 새 처방”⁹⁾을 기대하며 이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주체의 민족이론」에서 「민족」의 개념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주체사상」은 「계급」과 「민족」을 同列에 놓고 양자를 공히 “사회적 집단”이라는 의미로 파악한다. 「계급」은 현대사회의 사회적 구조에 있어 「기본요소」이고, 「민족」은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라고 한다.¹⁰⁾ 「계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敵對되는 계급으로의 분열은 불가피하다든가, 계급관계가 모든 사회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것 등 맑시즘(Marxism)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으나, 「민족」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조금 偏差가 있다.

맑스·레닌주의 「민족」이론에서 기본요소로서 중시되는 “경제생활의 공통성”은 「주체의 민족이론」에서는 삭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족」은 씨족, 종족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해 오는 역사적 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문화와 영토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定義된다.¹¹⁾ 핏줄과 언어, 문화와 영토의 공통성이 「민족」이라는 사회적 대집단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기본징표라는 것이고, 이중에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이 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라 한다. 맑스·레닌주의에서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중심에 놓고 민족의 개념을 정립한 것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난다. 혈통과 언어의 공통성이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시키는 데 있어 중핵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징표에 비해서 보다 지속성과 항구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체의 민족이론」은 또 하나 “새로운”것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자주성」이라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이란 매개의 민족이 독자적인 생활공동체로 존재하고 발전

9) 신상석, 「민족논쟁의 결산」(서울:일송정, 1989), 자료 편, p. 89.

10)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2(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p. 58.

11) 같은 책, p. 17.

하려는 속성을 말한다.¹²⁾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기의 영토와 혈통, 자기의 民族語와 문화를 가지고 이것을 고수하고 공고히 발전시키려는 데서 표현된다고 한다.

민족의 자주성은 내용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 하나는 독자적인 생활의 공동체로 존재하며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행사하려는 志向性이요, 또 하나는 자주적인 사회집단으로 공고히 발전하며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려는 志向性이다. 전자는 매개 민족이 밖으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간섭, 지배와 예속을 허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자기의 요구를 주동적으로 내세우고 자기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요, 후자는 민족이 온갖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기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 나가며 자기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김일성의 “민족”은 「자주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독자적인 생활공동체이자 자주적인 사회집단이 되는 셈이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김일성에게 있어 「민족」은 생활공동체 라든가 사회적집단과 같은 사회학적 집단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둘째 이 개념은 매개 사회는 국가주권과 기본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고유한 계급구조를 가진다는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에 의해 統御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같은 認識構造속에 “민족”은 곧 “민중”이라는 思想이 배태되어 있고,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이 곧 “민중의 자주성”¹³⁾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은 곧 “각계각층 민중의 민족적 차원에서 단결”¹⁴⁾로 전개되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이 되는 것이다. “민족은 본성에 있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주적 집단”¹⁵⁾과 같은 누구도 시비할 바가 아닌듯한 -바로 우리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한- 명제들이 어떠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2. 중심용어의 개념분석

북한통치자가 민족적 동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12) 같은 책, p. 75.

13) 신상석, 앞의 책, p. 101.

14) 같은 책, p. 101

15) 같은 책, p. 83.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들은 모두 위에서 살펴진 「주체의 민족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분석에 따른 평가적 이해를 위해서 對應理論의 개념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詳論은 章을 바꾸어서 (제3부에서)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관련 用語만 대비시켜 본다.

<민 족>

| | 주체이론 | 對應이론 |
|-------|---|--------------------------------|
| 개 념 | 사회의 공동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언어와 문화, 령토와 피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자주성을 가진 공고한 사회적 집단 | 「민족」(일차적으로 이념적 존재, 이차적으로 “지단”) |
| 특 성 | 자주성:민족이 자주적인 사회집단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려는 속성 | 「민족의식」(개념내용은 제3부에서 상론) |
| 구 성 원 | 인민대중(“대중”:자본주의사회의 경우 “피지배계급연합”과 일치) | 국민 |

<민 족 의 식>

| | 주체이론 | 對應이론 |
|---------|---|-------------------------|
| 개 념 |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민족이론」에서는 “민족의식”이지만 「민족해방운동론」으로 넘어오면 그 실질적 의미는 “민중의식”이 됨) | 「민족의식」(개념 및 의식내용은 제VI장) |
| 의 식 내 용 | 민족자주의식(민족의 자주성을 반영한 의식:누구에게도 얽매임이 없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요구를 반영한 투철한 사상 의식) | 자아의식, 連帶意識, 정신적 친화성 |

<조 국 애>

| | 주체이론 | 對應이론 |
|-----|--|---|
| 개 념 |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아오는, 자기 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 (진정한 조국은 단순히 나서 자란 나라 나 고향일뿐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 는 곳, '위대한 수령이 마련해준 인민의 나라') | 민족집단 성원들이 그들의 전체 定住空間을 고향으로 느끼고 사려하는 마음 |
| 본 질 |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1)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조국과 향토, 사회 주의 제도, 자기인민에 대한 사랑과 충실 성, (2)사회주의 조국의 번영과 공산주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투 지와 희생성, (3)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서 이룩된 모든 혁명적전취물과 그것을 창조한 인민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사랑 의 감정」 ¹⁶⁾ | |

이렇게 보면 우선 우리가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여기는 낱말들이 그 개념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常識과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다. 우리들의 언어공동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意味들은 전도되어 버린다. 김일성 그룹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권분립과 代議 원리를 지닌 헌정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판권 등 모든 국가권력을 “인민”이 장악하고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국가권력을 “인민”이 보유하고

16)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인민적 사상감정’, ‘계급적 사상감정’, ‘당적 사상감정’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최성욱, 앞의 책, pp.28ff.

행사하는 통치형식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듣던 중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민”이란 추상적인 개념은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 사고방식인지 알기란 쉽지 않다.

김일성의 정치사상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민이 “자기의 손에 주권을 틀어 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권”은 “인민”이 아니라 “인민의 前衛”인 당(조선로동당)의 손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다시 “당”이란 名詞가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령인 개인의 손이 “틀어 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된다는 것 (언제까지 “끊임없이” 높여 나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개인만 “완전한 해방”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 [현실을 살아가는 인민(백성)들, 그들로 구성된 집단(계급, 계층 등)들, 이들 모두로 구성되는 「민족」이 “해방”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관들을 파악하기란 용이치 않음이 사실이다.

북한정권은 「언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특히 우리들이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어휘」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수법들이 구사되는데, 그중에는 사회학적 정치학적 語彙들의 의미내용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자주 쓰인다. 그것을 「再定義」수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민족”은 “인민대중”(자본주의사회에서 “피지배계급연합”)을 성원으로 하는 “집단”이요, 따라서 “민족”의 “대단결”(「민족대단결」)은 “피지배계급연합의 대단결”이 그 실질적 의미가 된다. 북한정권이 남한에 대해서 “민족의식”을 주장하면 그 실질적 의미는 “민중의식”이 되고, “민족자주의식”을 외치면 곧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이 된다. 이것은 그들에 의해 상정된 지배구조에 대한 抵抗概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김일성과 남북한의 그 同調者들에게 있어 “민족”은 언필칭 “본성에 있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주적 집단”이다. 그리고 “민족문제”(“통일”은 분단국에 있어서의 “민족문제”이다)의 핵심은 “자주성의 문제”라고 한다. “자주성”이란 개념은 “민족해방”이란 개념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민족해방”이라 하면 外勢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한편 “민중해방”이라 하면 우선 지배계급으로부터의 “해방”이 연상된다. 그러나 “민족”이란 것이 “민중”과 등치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으로 개념될 경우 양자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¹⁷⁾ “민족해방”이 곧 “민중해방”에 다름 아니고, 그 逆도 마찬가지다. 흔히 북한정권의 남조선혁명이념이라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를 해석하여 북한정권과 남한의 그 동조자들은 먼저 “美帝를 축출하고 그 다음 파쇼세력을 타도”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은 일종의 형식논리에 머문 것이 된다.

민족적 열정의 소유자들을 誤導할 우려도 있다. 이를테면 “미제”(혹은 다른 외세)를 축출하는 線까지는 同調내지 協力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의 분석에서 분명해 진다. “미제”(이른바 외세)를 축출하고 나서 “파쇼”(이른바 지배계급)를 타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이 이루어진 연후에 “민중해방”을 위한 실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은 좌파혁명이 “민족해방”만 성취하면 그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또는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김일성의 “민족”개념은 “민족해방”만 되면 “민중해방”은 연기(또는 유보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동시에—그리고 “함께” [이 副詞는 실상 불필요한 말이나 설명의 구체성을 위해 추가함]—성취되는 것이거나 불성취(실패)되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의 다른 표현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민족해방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는 각계각층 민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은 김일성그룹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이 문장에서 “민족해방”을 빼고 “민중해방”을 그 자리에 넣어도 의미의 차이는 하등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비교적 긴 명제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민족해방운동은 본질에 있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인 만큼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결을 전제로 하고 전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대항할 것을 요구한다.¹⁸⁾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 이 세 가지 抽象名詞가 “통일의 3원칙”을 나타내는 言語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어를 북한정권(그

17) 이같은 연관은 민족의 이익은 곧 민중의 이익이라는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본군중이며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력량이다. 민족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의 이익을 떠난 민족의 이익이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p. 207.

18) 신상석, 「민족논쟁의 결산」, p. 99.

리고 남한의 그 동조세력)이 사용할 경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이상에서 분석해 본 바, 「주체의 민족」개념과 그 실천이론(“민족해방운동이론”)에서 統御되고 있는 언어들이다.

3. 김일성의 “민족주의”

북한정권이 요즈음처럼 “조국애”를 高唱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말하는 “조국”은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나라”, 곧 “위대한 수령이 마련해준 인민의 나라”를 뜻한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조국”이다. “조국애”란 이 “사회주의 조국”, “위대한 수령이 마련해준 인민의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뜻한다. 공산국가에서 인민들을 상대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鑄造한 개념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북한에서는 결국 김일성이 인민에게 마련해 준 나라, 요컨대 김일성의 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 이외의 다름이 아닌 것이다. 김일성도 사람인데 老年에 들어서서 “고향”의식, “조국애”가 왜 없겠는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은 진실로부터 눈을 어둡게 한다. 우리들 인간이면 누구나 가치있게 여기는 언어와 표상들이 권력투쟁과 권력유지를 위해 동원될 수 있고, 이런 일에 능한 것이 좌파전체주의자들이다.

일찌기 1950년대 초반에 김일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를 사랑함과 아울러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 고향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 부모, 안해, 자식들에 대한 애정에도 표현되는¹⁹⁾

사상감정이라고 말이다. “조국”, “강토”, “력사”, “문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애국심이요, 이것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즉 “고향사람”, “부모”, “안해”, “자식들”에 대한 애정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애국심”이란 것을 이처럼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가슴에 와 닿는 바 마져 없지 않다. 그런데 이런 좋은 어휘들을 구사하던 그 무렵 그는 어떤 행동을 했던가. 자기 조국의 강토와 그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 고향사람들과 그 부모, 안해, 자식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이 “조국”의 남부 (강토와 사람, 그리고 그 문화)까지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무력

19) 김일성, 「선집」, 제3권, 1954년 판, p.240.

남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동포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와중과 휴전 직후 그는 무수한 고향사람들, 동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처형하고 죽음의 수용소로 보냈던 것이다. 이런 행위가 모두 “조국해방”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언어 아래서 이루어졌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애국심의 맑스·레닌주의식 표현이다. 이 어휘로써 가장 많은 고향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사람이 스탈린(Stalin)이다. 그러나 작은 면적[舊소련의 100분지 1]의 강토에서 가장 오래 고향사람(동포)들의 목숨을 빼앗아 온 사람은 김일성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되었다. 김일성이 말하는 애국심, 곧 김일성식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대체 어떤 것인가. 그 특성을 들어 보자.

첫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인민적 사상 감정이다.”²⁰⁾

사회주의적 애국심의 인민적 성격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민적 사상감정을 계승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주인이 된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전 인민이 갖는 사상감정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인민적 성격은 1)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인민들 자신이며, 2) 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인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 인민들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같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계급적 사상 감정이다.”²¹⁾

이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철저히 계급적 성격을 띤 애국적 감정이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애국주의”와 같은 것이다. 그 자체의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계급적 동맹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 감정과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당적 사상 감정이다.”²²⁾

당적 사상감정이란 당(「조선로동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당을 열렬히 사랑하는 감정이며, 당의 의도와 배치되는 온갖 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감정, 당의 정책 관철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는 감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적 사상감정은 인민적 사상감정과 계급적 사상감정의 최고 표현이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성

20) 최성욱, 앞의 책, p. 29.

21) 같은 책, p. 31.

22) 같은 책, p. 33.

의 핵”을 이룬다고 한다.

이상의 특성 서술에서 우리는 먼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속에 포함된 虛僞를 찾아 낼 수 있다. 그 인민적 성격의 기초가 된다는 근거의 허위성이다. 즉,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고창되는 나라에 있어 사실은 1)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은 “인민”이 아니며, 2) 그 제도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3) 인민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는 같지 않다.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은 인민도 아니요, 노동계급도 아니며, 당도 아니다. 그것은 당의 수령, 곧 김일성(과 김정일)이란 개인이다. 그 나라 제도는 인민, 노동계급, 당의 복리증진은 이차적인 목적으로 삼아 왔고, 김일성 父子의 복리증진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인민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는 각기 차이가 나지만 「인민주권」의 소유자(김일성)가 이를 같게 만들어 왔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이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배치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민족 속에 敵對階級을 상정하여 이의 타도를 기도하고 他민족 속에 同盟階級을 상정하여 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상감정은 정상적인 개념의 「민족」 내지 「민족국가」이념에 배치되고 그것의 생성과 발전을 沮害하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감정”은 정상적인 개념의 「민족 의식」과 정면대립적인 의식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지닌 자연스런 故鄉意識, 祖國愛, 民族意識과 같은 공동체의식과는 무관하며, 도리어 전체주의 체제에 있어서 이 체제의 유지에 맞지 않는 이런 감정과 의식의 육성을 沮止하고 사회 성원들의 생동하는 감정을 파괴하고 集團主義심리를 조성하기 위해 鑄造된 개념이다. 40여년 전에 김일성은 “당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는 것은 인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사상 감정으로 된다”고 했다. 곧,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된다는 말이다. 이 명제의 述部를 그가 요즈음 하고 있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당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는 것은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사상 감정’으로 된다.” 곧, ‘민족주의’가 된다는 말이다.

김일성은 1989년-이 해는 “인민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경쟁을 벌

이기 시작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요, 역사로부터 이 경쟁의 패배자로 판정을 받는 해이기도 하다—을 넘기고 나서 자신이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요 국제주의자라고 공언하였다. 우리는 혹시 그가 진짜 “민족주의”를 추구하기로 맘을 고쳐 먹고 있는 것인가,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접근해 보았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그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존중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 졌다. 이제 그는 “민족주의”라는 언어 까지 각색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Ⅲ. 북한정권이 민족적 동기를 강조하는 배경

김일성이 90년대 들어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50년대 초반 이래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임이 위에서 살펴 졌다. 혹시 그가 과거부터 「주체」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해서 “민족주체성”과 같은 것이 연상 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과거를 근거로 해서 말한다면, 김일성이란 사람은 「민족」이념도 「민족주의」도 말할 자격이 없는 歷程을 지닌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는 日帝 치하의 만주에서 수많은 韓人 민족주의자들을 살해하였고, 1945년 일제가 물러 간 북한에서 조만식을 위시한 민족주의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였다. 무엇보다 그가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함으로써 기도한 “남조선해방전쟁”은 글자 그대로 대규모적이고 전면적인 민족殺傷이었다. 1955년말 그는 패전후의 북한에서 다시 다소라도 민족주의적 열정을 지닌 인물이면 좌우파를 막론하고 제거 시켜 나갔다. 그 숙청사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주체」라는 낱말이었다. 1955년 12월 28일의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라는 것이 그것이다.²³⁾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34년 김일성은 「中共 동만당」에 가입하여 韓人 동족을 숙청하는 이른바 「민생단」잡이에 혈안이 되었었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소련의 앞잡이로서 北韓에 들어왔던 것이다.²⁴⁾ 中共중앙의 「반일민족통일전선」산하였

23)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년 12월 28일.

24) 김일성은 중공 遊擊隊의 殘黨이 소련의 연해주로 도망가서 조직한 동북항일연군 教導旅에 한 동안 가담해 있다가, 해방이 되자 교도려 대장이자 소련군 대좌였던 후보중의 지시에 따라 북

지만 중공과는 독자적으로 1942년 7월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여 싸웠던 김두봉, 최창익, 한빈, 무정, 박효삼, 박일우 등과 이들의 선배격이라 할 김창만, 그리고 조선 땅 안에서 간난신고의 혁명투쟁을 벌였던 박헌영 등 “주체”[당시 ‘남로당’의 간부였던 박갑동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북한에서 남로당원들은 “조선혁명의 주체는 국내인민”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함]들이 모두 그의 손에 숙청을 당하게 되었다. “주체”란 다름이 아니었다. 김일성의 충성분자가 되어 反김일성 분자들을 숙청하는 것이 “주체”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숙청작업의 전개가 “조선혁명”이라 불리워졌다.

그후 「주체」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1963년 10월 5일 김일성 군사대학 제7기졸업식에서의 연설), “국방에서 자위”(1965)라는 슬로건으로 발전되었고, 1965년 2월 23일 고등교육성 당 총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에서 마침내 독자적인 「사상」으로서의 등단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대는 이미 그를 우상화하는 작업이 궤도에 올랐고, 그의 家系 중심의 역사날조 작업도 시작되었을 무렵이었다.

「주체」는 이처럼 政敵 또는 반대자 숙청을 위한 언어적 도구로 출발했던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중국, 소련 등의 외교적 압력을 피해 나가는 데도 유용하였다. 그러나 독자적인 사상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그것은 그사이 권력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적 언어가 되어 온 것이다.

「민족」동기의 강조도 이런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55년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처음으로 「주체」란 어휘를 사용하면서 “민족해방투쟁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그 이후 북한에서는 과거의 민족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부각된 <조선전사> 등 많은 책이 출간되었다. 「주체사상」 자체를 위시하여, 「조국광복회」, 민족단결 전통 등이 捏造되어 김일성 통치의 역사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이바지해 왔다. 그 사이 “민족제일주의”와 같은 주조된 어휘가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유럽 사태, 소련의 붕괴로 인해 조성된 90년대의 상황은 대남전략면에서나 대내정책차원에서 민족적 동기의 새로운 강조를

한에 들어왔고, 소련 民政의 후원으로 조선공산당의 최고책임자로 등장하였다. 허동찬, 「김일성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서울:원일정보, 1989). p. 45 참조.

요구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장한 것이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크게 두 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남전략적 차원에서는 남한의 反民族性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남한내 저항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한 言語療法의 단위를 높이기 위함이고, 대내정책적 차원에 있어서는 자유의 微風이 유입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체제(즉별독점체제)에 대해 느끼기 시작하는 불만과 反感을 완화시키는 心理療法의 단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주체의 민족주의”론을 펴게 된 직접적인 의도는 19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민족의 자주성”, “민족의 단결된 투쟁”을 선동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⁵⁾

IV. 북한정권의 민족적 동기의 강조가 남한에서 얻는 효과

1. 언어전술적 효과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²⁶⁾”이라는 김일성의 언어를 그대로 복창하고, 이 언어들의 개념과 그로 구성되는 논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중운동가”들은 물론이요 “진보적인”지식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족은 곧 민중”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의 “민족”개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틀리지 않는 語法이다. 이것이 모두 김일성의 사상(“주체사상”)을 학습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사고와 논리가 김일성 그룹의 그것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정치교육적 효과

우리 사회 안에 “주체의 민족”논리를 추종하는 세력이 양성되고 있다. 이들을 북한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 세력”이라

25) 内外通信 週刊版 제807호(1992.8.6)의 焦点해설 “북한식 민족주의노선의 反統一성과 汎民族大會”에서 이런 분석이 가해지고 있다.

26)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5), P.211.

칭하고, “제3세대 학자군”으로 묶고 있다. (<로동신문> 1992년 5월 13일자 논설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남조선 지식인들의 투쟁”은 하나의 참고가 됨)

3. 직접적인 정치적 효과

김일성의 추종자가 늘고 있다. 통일전선조직의 폭이 상당히 넓혀졌다. 「汎민족연합」은 상층조직일 뿐이다. 김일성의 「似而非」 “민족주의적” 표어들은 남한정권이 反統一勢力으로 보이게 하고 그에 대한 공격에 대한 공격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이런 迷惑을 염려하여 깨우치려는 노력들은 줄어들고 있다.

제2부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이론의 기초

I. 세계사적 전망

우리가 지금까지의 역사가 낳은 현실적 귀결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정치철학 또는 정치이념사적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지구 全域에 있어서 民族들이 정치적 自我意識을 지닌 「민족」 [이의 개념을 나타내는 우리말 相當語가 발견되지 않아서 앞의 民族, 곧 인종학적 문화인류학적 개념(이를테면: "같은 지역에 살며 언어, 혈연, 풍습, 문화, 역사, 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집단")의 것과 구별하여 「민족」으로 표기한다. 「민족」이란 스스로를 역사의 주체로서 의식하면서 「자유」나 「독립」과 같은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고 하나의 主權國家를 이루어 自己價値를 실현해 나가려는 정치적 自我意識을 지닌 사람들의 集合體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는데,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요소의 산물이 라는 점이다. 곧 일정한 실제적인 역사, 일정한 공간, 일정한 民族 및 이 民族의 이들 역사와 공간에 대한 意識이 종합된 것이 비로소 「민족」(네이션)의 전체적인 현실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곧 '네이션'으로서의 「민족」은 일차적으로 理念이요, 이차적으로(그 다음) 실제적인 공동체이지 그 逆이 아니라는 것이다. 편의상 독일어를 빌려 본다면 인종학적 문화인류학적 개념의 民族은 '폴크'(Volk)요, 정치철학적 정치교육학적 개념으로서의 '정치적 자아의식'을 지닌 「민족」은 '나치온'(Nation)이다. 이 두 서로 구별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마땅한 것이 없어서 아예 外來語로서 '나치온'이란 낱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²⁷⁾]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발전은 서양의 선진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세기에 시작되었던 것이고, 제3세계의 경우는 한 세기를 넘겨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終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989년 가을의 「대변혁」과 더불어 마침내 동유럽이 역시 이러한 발전의 隊列에 다시 合流하게 됨으로 해서 全地球的

27)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신용하(편), 「민족이론」(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참조.

지평에서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20세기의 成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물어 가는 20세기, 그 성과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계급없는 사회”가 되기를 希求해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이기를 희망해 왔다. 이와같은 회구나 희망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이 분명해 지고 있다. 정확하게 기술한다면, 그것은 年輪이 오래된 「민족」(또는 「민족국가」)들과 새로운 「민족」(또는 「민족국가」)들의 多様性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民族들이 「민족」(‘나치온’: 차후 영어식 표현으로 ‘네이션’으로 함)으로 상승하면서 각기 自己價値 실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도 이제 제대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연합된 「민족국가」들”(United Nations)이외에 다름아닌 것이다. 「네이션」들이 형성되고 이들이 기초가 되어 비로소 결성될 수 있었던 「네이션」들의 조직인 것이다. 점차 부각되는 문제는 이 다양성이 여하히 서로 조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경지로 나아가느냐가 되겠는데, 이것이 다음 세기의 성과로서 확인될 수 있기를 우리는 희망해 마지 않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20세기 말엽의 이 세계적 경험이다. 「해방 이데올로기」의 그것과 분별만 한다면, 20세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 세계적 경험을 우리는 脫植民地化와 脫衛星國化운동이라고 命名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전에는 植民主義나 霸權主義 안에서 정치는 강대국들의 손에서 料理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정치적 主體들의 다양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自我意識, 곧 하나의 「민족」(네이션)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하고자 하는 의식이 이제 세계의 도처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정치적 존재”라는 사실은 오래 전에 希臘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선생이 가르쳐 준 바 있다. 인간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共同體 내에서만 實存한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됨으로써만 인간은 정치적으로 正體性(identity)을 지닐 수 있다. 인간은 구체적인 정치적 질서들 속에서만 실존하며, 이것은 인간을 「人類」로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세계의 도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질서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네이션」들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네이션」들 속에서 실존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 일치되는 의미는 아님에도 외래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우리말로써 표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민족국가」에서 실존하고 있고 혹은 그렇게 실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개중에는 그 정치적 자아의식이 불확실하거나 혼란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세계정치적 평면에서 보면, 인간의 정치적 실존은 곧 「민족국가」적 실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 多少간의 차이가 나는 - 自己意識的인 “우리” 속에서의 실존인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걸어 온 역사의 길이 얻게 된 발전이다. 「네이션」 또는 「민족국가」 理念은 自由 이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必然性的의 실질과 가치를 얻고 있다. 그것은 역사의 길이요 또한 意味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의 의미로서의 「네이션」 또는 「민족국가」란 무엇을 뜻함일까. 그것은 多樣性을 뜻함이고, 그리고 동등한 自己決定權을 뜻함이다. 그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한 규제나 다른 무엇에의 의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저승이면 몰라도 現世의 현실에 있어서 어떤 다른 理念이 「네이션」이념 보다 上位에 놓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념이 「네이션」이념 보다 상위에 두어지는 경우 그것은 언제나 支配 또는 征服의 주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刻印하는 것이거나 美化시키는 것이었다.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Nazi : 민족사회주의당원)들과 레닌-스탈린(Lenin-Stalin)의 소치(Sozi : 사회민주주의당원)들은 늘 「人類」, 「세계평화」, 「국제주의」 등의 이념을 앞세워 주변의 「민족」들을 파괴하였다. 年前에 붕괴된 蘇聯은 「人類」 이념과 「사회주의」이념을 내세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衛星國으로 만들어 억압하고 변질시켰던가. 韓半島民族의 일부도 포함해서 말이다. 소련제국이 무너진 터에 독립을 되찾은 옛 위성국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분규는 그 後遺症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 멀리 갈 것이 없다. 이웃 日本의 帝國主義는 어떠했던가. 그가 우리 朝鮮民族을 위시하여 동아시아 여러 民族을 手中에 넣고 蹂躪, 破壞한 것은 「大東亞 共榮」이라는 이념 아래서였던 것이다.

지난 해 蘇聯의 몰락은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이념의 승리였다. 집단으로서의 民族을 파괴하거나 이념으로서의 「민족」을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전망을 얻지 못한다. 「민족」을 삼킨 제국주의는 그 어느 형태를 막론하고 결국은 恐龍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歷史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역사란 것은 同等權을 지닌 「네이션」들의 다양성으로 향하여 인간적 실존이 발전해 나아 가는 과정이다.

이제 지구상에 있어서 세계정치의 주체들은 「네이션」들이 되고 있다. 「네이션」, 「민족국가」(national state)가 세계정책적 代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地上에 있어서의 이 정치적 單位들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그것은 自然的 권리로서 주어졌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일 것이다. 그 발전은 불가피하게 각기 權力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인류는 權力과 對抗權力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네이션」의 普遍性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역사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관계는 무의미한 流血殺戮으로부터 “정의를 위한 투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王朝, 국가, 民族(‘폴크’), 「민족」(‘네이션’)들간의 평화적이고 非폭력적인 이해관계의 調停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증가하는 인구의 압박이라든가 공간의 한계성 등을 감안할 때 용이한 것 또한 아니다. 「민족국가」이념은 ‘정치적인 것의 원리’(칼 슈미트)를 포함하고,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언제나 「敵」과 「同志」의 구별이다. 즉, 누구가 「적」이요 누구가 「동지」인가에 대한 결정이 ‘정치적인 것’의 要諦인 것이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은 모든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전제가 된다.

‘정치적인 것’이 인간과 인류의 現存形式이고, 자아의식적 정치라는 의미의 「네이션」이 ‘정치적인 것’의 현대적 語法이라면, 20세기의 정치적 현실은 지구상에 있어 萬人을 위해 「네이션」적 실존을 형성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韓半島 民族의 통일문제는 이와 같은 세계사적 연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남부와 북부의 7천만 民族성원들을 위해 「네이션」적 실존, 「민족국가」적 실존을 형성해 주는 일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II . 통일정책의 原理

植民主義와 宗主國主義가 終焉을 고하고 있는 금일의 세계에 있어서 모든 정치적 행위의 근본이 되는 規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이미 탁월한 정치사

회학자 베버(Max Weber)가 내어 놓은 바 있다²⁸⁾. 그가 정치에 있어 “至上的 價値 尺度”로서 규정한 “민족국가이성(Nationalstaatsrason)의 원리”가 그것이다. 즉, 정치적 행위는 「民族國家理性」의 척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고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국가이성」이란 祖國과 자기 「민족」 전체의 保全, 그 질서와 내적 평화와 福祉, 그리고 세계사회 속에서의 그 價値의 실현에 대한 責任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理致를 말한다. 이것이 정치적 행위의 最高의 指導原理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국가이성」은 民族과 祖國의 분단을 허용치 않는다.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 민족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우리의 「민족국가이성」이 命하기 때문이다. 南과 北의 民族(거레)이 하나의 「민족」(네이션)으로 통합을 이루고 내적 평화와 복지를 이룩하고 세계사회에서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할 책임을 다 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47년 前 우리가 日帝로부터 벗어 났을 때, 우리는 이 課業을 해 났어야 했다.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苦難의 獨立運動은 무엇때문이었는가. 「민족국가」이념때문이 아니었는가. 결국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태여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우리 2천만 동포들 가운데 「민족국가이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더욱이 지식인과 지도층에 사회주의적 國際主義를 選好하는 이가 많았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우리는 이 점을 是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

실상 정치에 있어 「민족국가이성」의 원리 보다 上位에 놓일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하는가. 「평화」의 원리나 「인류」의 원리가 그런가. 그럴 수가 없다. 「민족」이란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들 원리는 특정 국가가 그의 정치적 敵을 공격할 때 자주 濫用된다. 특히 「인류」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적 세력확장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이며 그것이 윤리적 인도주의적 형태를 지님으로 해서 經濟的 帝國主義의 아주 전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28) 우리 말로 된 참고문헌으로서는 Anothony Giddens, 김성건 옮김, 「막스베버의 정치사회학」(서울: 대영사, 1985), p. 35에 약간 언급이 되어있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論議도 나온다. “인류를 들먹이는 사람은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라는 푸르동의 인상적인 말이 타당하다. ‘인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인류를 증거로 이용하는 것, 이 용어의 독점, 이 모든 것은...인간으로서의 성질을 박탈하고 적을 비합리성·비인간으로 선언하고 그리하여 전쟁을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인 것으로까지 촉진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주장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²⁹⁾ 「國際友誼」나 「善隣」의 원리는 어떤가.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족」의 尊嚴과 그 自決權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며, 각기 「민족」이념을 위해 봉사하는 것일 따름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리는 어떤가. 1989년을 起點으로 이것은 「민족국가이성」의 원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어떤 원리가 일정한 「민족국가」의 理性(Rason) 위에 설정되는 경우를 보면 어디서나 그 實狀은 他者支配였다. 더 강한 나라가 자기의 理由에 입각해서 더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경우, 그 고상한 원리는 사실상의 권력관계를 은폐하는 呪文이 되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地域的 내지 地球的 hegemon을 주장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민족국가이성」이 정치에 있어 유일한 이성적인 原理原則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 主體의 호칭이나 主權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自由와 品位, 그리고 인간다움에 있어 損傷을 입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민족국가이성」의 원리를 말하면 혹시 우리 韓國 사람이 전통적으로 존중해 온 「弘益人間」이념, 곧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國祖 檀君의 건국이념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과연 어떠할까. 「민족국가이성」이 「홍익인간」이념 과 배치되는 원리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민족국가이성」은 共同善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共同善의 前提條件을 기초지우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共同善의 전제조건은 무엇이겠는가. 獨立國, 곧 獨立權을 가진 국가이다. 獨立權이란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内外의 政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으로 정치가 이루어 지는 나라가 독립국이다. 정치적 주체의 이런 성질 없이 共同善을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의 국가이론에 있어 共同善은 보통 四重으로 규정된다. 첫째 外敵의 防禦, 둘

29) 칼 슈미트, 정용화 옮김, 「파르티잔 이론」(서울: 인간사랑, 1990), p. 141.

제 內的平和의 유지, 세계 公安의 틀 내에서 국민들이 개인적 福利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 세계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국민들이 自由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다. 이렇게 규정되는 共同善이 추구되는 정도를 비교적으로 보면 南韓에 비해 北韓이 단연 떨어져 있고, 그것의 주된 원인이 體制의 상대적인 劣惡性에 있음은 이론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증명이 되고 있다. 특히 內的平和, 개인적 福利의 도모, 그리고 自由의 향유는 北韓의 경우 체제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四重으로 규정되는 共同善이 大韓民國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北韓에서도 추구되는 것이 전체 韓民族의 「민족국가이성」의 원리에 副應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전체 韓民族의 「민족국가이성」의 命命이 나온다. 共同善의 추구가 최대한으로 성취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統一性의 회복이 그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의 근본원리, 그것을 우리는 「민족국가이성」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원리로부터 綱領的으로는 어떤 것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남북의 7천만 韓人을 「민족화」(nationalization)하는 일이다. 「민족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 7천만 겨레가 모두 정치적 自我意識(‘우리’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네이션」으로 上昇하자라는 것이다. 「네이션」은 정치적 자아의식, 곧 민족의식의 산물이다. 정치적 자아의식이나 意志形成은 어느 시점에서 完結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네이션」은 언제나 하나의 過程이요, 열려진 형식이다. 그것이 국민국가적 질서를 취하게 되었을 경우를 「민족국가」(nationstate)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식의 형성이다. 韓民族(한겨레)을 이루는 우리 成員들은 정치적 자아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겨레」부터 「네이션」으로 상승하고, 정치적 행위의 주체가 된다. 添言되어야 할 점은 「네이션」개념을 성립시키는 국가형태의 문제다. 身分國家나 絶對國家, 또는 階級國家는 「민족」 또는 「민족국가」 개념과 조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국가는 정치권력이 私有化되는 것이어서 언제나 사회의 일부분의 소유일 뿐 국가 所屬性이 일반화되지 않는다. 현대적인 국가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속한다. 이 전체가 말하자면 民族이요 겨레인 것이다. 국가가 사회 전체의 소유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력의 脫私有化·脫人格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적 권력이 탈사유화·탈인격화

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 앞에서 平等을 누릴 수 있는 法の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국가를 非人格的인 法治國家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의 모든 成員들이 국가의 所屬員이요, 그들에게는 법에 의해서 자유가 확보된다. 이와같은 非人格的인 법치국가, 그 앞에서의 사회 성원들의 평등, 그 안에서 보장될 수 있는 자유 — 이것들이 없이 「민족」 또는 「민족국가」의 성립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³⁰⁾

Ⅲ. 「敵」은 누구인가

「냉전」의 終熄이 선언되면서 우리들의 정치적 語彙로부터 「敵」이란 것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우리는 이미 蘇聯이 무너지기 전에 그를 ‘友’國이라 호칭해 준 바 있고, 북한 정권을 同伴者라고 불렀다.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敵對感情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적당치도 않으려니와 統一에 지장을 주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금년에는 中國과의 修交도 이루어 졌다. 공식적으로 우리와 敵對關係를 이루는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셈이다. 환영해 마지 않을 현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왜 「적」의 테마가 擧論되는가. 우리들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적」이 존재하고 있고, 「적」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든가 말하고 있는 동안 「적」은 우리에게 더욱 「적」이 되고 있는 것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다. 우리가 和解다 協力이다 同伴者다와 같은 言說들을 되뇌고 있는 바로 그 동안 북한 정권은 과연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던가. 북조선 노동당의 對南部署들은 그 사업목표들을 수정하였던가. “남조선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 하는 김일성의 방침은 철회되었던가. 변한 것은 어디도 없다. 오히려 左派全體主義는 그 세력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의 政治圈까지 두루 滲透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內訌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을 料理하려는 강대국의 작용들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우리는 안팎으로 「적」들에 둘러 쌓여 있고, 보이지

30) 안정수, “민족(네이션)개념의 정립을 위한 小考”, 안정수 外, 「전환시대의 民族과 民衆理念」(서울: 삼진출판사, 1989, 제3판), pp. 302ff

않는 전쟁, 정치적·심리적·이데올로기적·의미론적(semantic) 전쟁의 와중에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안은 집안사정이라 치고 밖을 보자. 과거 우리를 점령·유린하고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滿身瘡痍가 되도록 했던 강대국들 중 그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赦罪를 구했던 나라는 하나도 없다. 잘못이 있다면 세계대세에 늦게 눈떠 「민족국가」형성이 늦었다는 것 말고 달리 世界史에 흠을 낸 적이 없는 民族:겨레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不具가 되게 만들어 놓은 加害者들은 스스로 그 행위를 뉘우치고 謝罪할 때, 그리하여 被害者가 그것의 眞正性을 느끼고 怨恨과 怨心이 해소되고 그의 民族國家理性이 그것을 용서할 때, 비로소 진실한 ‘친구’관계의 端初가 가능해 진다. 이 모든 것이 일버무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친구」요 「동지」라고 볼 것인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라고 하나, 작금의 추세를 보면 우리 朝鮮半島는 列強의 自國利益 논리의 角逐 열기가 점차 뜨거워 지는 하나의 前線이 되고 있다.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政治의 결정적인 判斷基準을 「적」과 「동지」의 구별에서 보고 있다.³¹⁾ 道德의 영역에서 궁극적인 구별이 善과 惡이고, 미적인 것의 영역에서 궁극적인 구별이 美와 醜이며, 경제의 영역에서 그것이 利得과 損害이듯이,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서 궁극적 구별은 敵과 同志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적」과 「동지」의 대립은 정치생활을 영위하는 각 民族에게 있어서 存在可能性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³²⁾

여기서 「적」이란 怨讐之間에 있는 개인이나 경쟁자 또는 반대자를 말함이 아니라 政治上의 敵을 말한다. 증오심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상대, 곧 「私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公敵」을 뜻한다. 이 경우 「적」은 만일 필요한 경우 자신의 존재를 위해 투쟁하는 顯在的 또는 潛在的 대립관계에 있는 인간의 總體라고 할 수 있다. 民族이나 국가의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어서 公的 性質을 띠게 된다. 국가는 조직된 정치적 單位로서 스스로 「적」과 「동지」를 구별한다. 「적」이란 개념에는 투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戰爭은 조직화된 정치적 단위체 간의 무력

31) 칼 슈미트, 정용화 옮김, 「파르티잔 이론」(서울: 인간사랑, 1990), 부록 “정치적인 것의 개념”참조

32) 같은책, p. 117.

투쟁이요, 內亂은 조직화된 정치적 단위체 내부의 무력투쟁이다. 전쟁은 적대관계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극도로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나 특정 民族이 영원히 다른 특정 민족의 「적」 또는 「동지」일 필연성은 없다. 적대관계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된다. 양 민족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적대관계에 있었으나, 제2차 대전 이후 오늘은 서로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고 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중립」이라는 것 말이다. 그러나 「중립」은 결국 「적」과 「동지」의 구별의 현실적인 가능성 속에 불안정하게 머무는 것일 뿐이다. 만약 세상에서 「중립」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전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립」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세상에서 전쟁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을까. 有史 이래 인간은 그것을 희망해 왔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政治는 소멸할 것이고 戰爭을 피하기 위한 정치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쟁의 가능성이 모두 제거되어 버린 세계, 敵對關係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완전히 平和化된 세계, 그런 세계가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는 세계이다. 따라서 政治라는 것도 없는 세계이다.³³⁾

「적대관계」가 상존하는 한 「적」은 존재하고, 「적」이 존재하는 한 「전쟁」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적대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그런 인식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들 도 없잖아 있다. 그렇게 하다가는 冷戰的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좌파전체주의자의 言語戰術的 성공을 증명해 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이른바 ‘냉전시대’에 흐루시초프는 자유진영 人士들의 논리에 대해 “냉전적 사고”라는 표현으로 즐겨 대응하였고, 그것이 널리 파급되었던 것이다. 개중에는 人類愛的 열정이 남달라 그런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 훌륭한 人道主義的 열정도 「적」과 「동지」의 구별에 기초되는 政治의 辨證法을 어쩔 수가 없다. 적어도 이 지구 상에서 하나의 世界國家 같은 것이 수립되면 또 모를까.

「적」을 두고 「적」으로 보지 못하는 夢寐性은 으레히 그 「적」을 다루지 못하는 無能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런 思考缺陷이 ‘리버럴리스트’(liberalist) 혹은 자유주

33) 같은책, p. 122.

의자 然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적」을 ‘경쟁자’라든가 ‘토론상대자’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이성적인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 논증의 공통적인 수준, 쌍방에 구속력을 지니는 규칙의 인정 등 — 도 주어져 있지 않은 위기적 상황인데도 여전히 무의미를 낳는 협상이나 대화에 매달리게 誤導하는 수가 있다. 이런 사고결함은 人間理解의 결여와도 연관된다. 우리 자신의 生活圈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경험을 근거로 해서 「적」도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기 쉽다. 이런 가정들이 모두 先入見에 속하는 것인데, 위험을 초래하기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적」을 惡魔처럼 보고 그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전도된 사고결함 보다 그 위험이 훨씬 클 수도 있다. 역사적인 예를 들면, 19세기 프랑스의 귀족들은 자코뱅주의자들이 어떤 인간인지 상상치 못했고, 1930년대 소련의 수많은 博愛主義的인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찬탈하는 스탈린(Stalin)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했으며, 해방후 북한에 있어 사회주의 理想에 불타던 많은 혁명가들이 김일성이 어떤 인간인가를 미처 알지 못했다.³⁴⁾ 챔벌린(Neville Chamberlain)이 끝까지 나치(NAZI)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안팎으로 戰線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적」이 있음을 믿으려 들지 않는 국가의 前途가 유망할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적」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기는 「적」으로 여기기 보다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믿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적」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적」으로 간주하고 취급하는 방식은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이 포기가 상대방도 나를 「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는 보장은 아니다. 내가 宥和의 선언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그의 敵으로 생각하면 나는

34) “김두봉, 최창익 등은 김일성의 사람됨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그의 전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김두봉이나 최창익은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대중의 힘으로 용이하게 시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 王朝의 내막을 알고 있는 한 인사의 증언이다. 林隱, 「金日成王朝成立秘史」(東京:自由社, 1982), 허동찬, 「김일성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서울:원일정보, 1989), p. 87에서 재인용: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람됨을 아는 일의 중요성은 최근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1992년 10월 3일자 서울신문의 사설은 「김일성 부자 연구,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 제목이다. “사람됨을 알아보는 일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을 논하고 있다.

그의 「적」이 된다.³⁵⁾

경쟁하는 국가들과 이데올로기들과 경제체제들로 이루어진 세계로부터 「적대관계」라는 事實과 原理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정치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세계국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결국 정치적인 平和는 「적」들이 서로 測定하고 制限하고 承認하는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다.

“自己防禦 능력이 없는 民族이 「동지」를 가지리라고 믿는 것은 愚鈍일 것이요, 無抵抗을 통해 「적」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무력한 打算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어떤 民族이 자신을 지키려는 意志와 능력을 가지지 않음으로 해서 정치가 세계로부터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는 것은 오로지 허약한 民族(겨레)일 뿐이다.”(칼 슈미트)

“도대체 모든 문화생활로부터 ‘투쟁’이 제거될 수는 없다. 그 수단, 그 대상, 그 기본방향, 그리고 그 담당자가 바뀔 수 있을 뿐, ‘투쟁’ 그 자체가 제거될 수는 없다.”(막스 베버)

여기서 註釋적으로 덧붙여 진다. ‘투쟁’이 언제 어디서나 ‘전쟁’과 같은 의미의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쟁’은 금세기의 역사가 증명하듯 빨찌산전쟁으로부터 경제전쟁과 선전전쟁, 非國家的인 徒黨의 테러주의적 小戰爭, 제국주의적 초강대국의 냉전, 혁명적 전쟁, 정치적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론적 전쟁, 그리고 정보전쟁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적」은 누구이겠는가? 특수한 地政學的 입장에서 순탄치 않은 역

35) 민족 내부의 예로 이런 것을 들 수도 있다. “통선대”(‘통일선봉대’의 준말: 필자) 환영식이 시작되었을 때 통선대 전원이 긴급출동을 한다. 범청학련 결성식 때의 침입을 대비하여 사수대로 싸우기 위한 것이다. 퇴로를 보아두고 파이프를 권 손에 힘을 주고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섰다. 무장한 적들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는 꽃병과 파이프와 일당백이라는 마음가짐이다. 두어시간을 지키며 가진, ‘받은 것만큼은 기어이 돌려주리라’는 타오르는 적개심을 그 누가 닦하라! 적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감히 치고 들어 올 엄두도 못낸다.” [「민주화의 길」 제36호 (1990. 11.), p. 125] 이것은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협’)의 한 여성회원이 기록한 「'92 범민족대회」행사참여 일기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적’이란 국가공권력의 현장 단위에 속하는 戰警을 가리킨 것이다. 청년남녀들에 의한 그 ‘통일선봉대’행사가 주도되고 있는 시간에 북한정권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 “혁명의 원수들”을 상대로 “견결히 싸워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었다. 안팎에서 ‘적’ 또는 ‘원수’와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사를 살아 온 우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 우리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이를 妨害하는 자는 「적」이다. 우리의 自己保存과 自我實現을 방해하는 자는 「적」이다. 「적」이라고 言明한다 해서 이것이 곧 宣傳布告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적」이라는 규정은 하나의 정치적인 규정이다. 현실의 정치에 있어서는 「적」과 만나고 交涉하고 談判도 하는 것이 상례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협력자가 되고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다.

나라 안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조직이 정치적 권력의 쟁취를 노리고 있다면 그것은 「적」이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 보다 다른 어떤 정치적 관심을 중시하는 자는 우리에게 있어 「적」이다. 「민족」과 「자유」의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땅에서의 自己回復 「통일」을 방해하는 자, 알게 모르게 외부세력에게 봉사하는 자는 「적」이다. 우리의 民族國家理性을 무시하거나 民族意識을 비방하는 자, 그 개념을 顛倒시키는 자는 「적」이다. 자유로운 憲政國家의 방어외지를 약화시키려는 자는 우리의 「적」이다. 내부의 「적」에 대한 이와같은 규정도 엄격히 정치적인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덕적 誹謗이 아니요 內戰戰線의 개막도 아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적」과 만나고 交涉를 하며,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民族政策的 개념은 이제 보다 鮮明해져야 한다. 작금과 같이 混濁한 것이어서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IV . 統獨政策이 주는 示唆

유럽 중앙의 독일 땅에서 “통일의 회복”의 성취가 선언된 것이 1990년 10월 3일이었으니, 동과 서로 갈라져 살던 독일사람들이 하나의 국가사회를 이루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다. 주지하다시피 히틀러(Hitler)의 帝國이 주변의 민족국가들을 점령함으로써 유발시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美·英·佛 서방강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점령됨으로 인하여 결국 서부의 독일연방공화국(BRD, 1949년 5월 24일)과 동부의 독일민주공화국(DDR, 1949년 10월 7일)이 각각 창설되면서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터인데, 전쟁발발의 중심지였던 그 곳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同一性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비해 전후 비슷한 시기에 남과 북

으로 갈라졌던 조선반도의 허리는 여전히 철조망으로 잘려져 있다.

분단의 역사라고 했지만, 돌이켜 보건대 독일의 경우 그것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의 결실을 예비하고 진행되어 온 思慮와 力動의 역정이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前史였던 것이라 봄직하다.

독일인에게 있어 “통일”은 그 국가(독일연방공화국) 건설자의 염두에는 未久에 성취될 현실로서 신념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니, 그것은 이른 바 “기본법”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이 새 공화국의 기본질서를 위해 “헌법”이라는 개념이 선택되지 않고 “기본법”이라는 개념이 선택된 것이 이를 알려 준다. 自業自得으로 인한 민족의 물리적 분단은 감수하지만 過誤를 극복하고 새로이 참된 民主憲政國家를 발전시켜 나가면 언젠가는 그 체제로부터 소외된 5개州—「독일민주공화국」—도 스스로 들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상이 바탕에 깔려있다. 그 기본법은 40여년 후 통일의 헌법적 토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진실임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통일”이란 헌법적으로 말하면 곧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有效領域 속으로 들어 감인 것이다. 기본법의 잠정적 성격은 우선 그 전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은 “또한 참여가 거부되어 있는 독일인(동독 거주인을 말함: 필자)을 대신하여 행동하였다”라든가, “전체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사명을 진다”와 같은 구절이 이 점을 표시하고 있다.

暫定性은 기본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 23조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즉, “이 기본법은 우선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의 諸州 영역에서 적용된다. 독일의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가입 후에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일의 그 밖의 지역”이란 동독지역(5개 주)를 뜻한다. 90년 10월 3일의 “통일”과 더불어 이 조항이 기본법에서 삭제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하나만 더 들자. 그 “유효기간”을 규정한 제 146조(“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역시 이 법의 잠정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制定者들은 “통일”의 先取者였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헌법적 정신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민주적 憲政國家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사람들은 이른 바 “독일정책”이라는 용어으로써 통일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독일정책의 표상들 가운데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유선거”였던 것도 이 헌법정신이 그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실은 이 나라의 초대 聯邦首相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의 思慮이다. 그는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이미 「통일문제」-독일사람들은 “독일문제”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 에 관한 深思遠慮를 했었던 바, 이것은 그의 주도로 창설된 기민당(CDU)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을 뿐아니라 이 나라의 외교 및 통일정책의 基調가 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아데나우어는 재통일(Wiedervereinigung)이란 것이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과업이라 보지 않고 원칙을 세웠으니, 그것은 재통일이 서방세계의 자유를 희생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독일을 서방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議會民主主義 이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어서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견해는 이 신생공화국 초기에 집권 기민당은 물론이요 야당인 독일사회민주당(SPD)과 대다수 국민에 의해서도 共有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체제의 공고화, 서방과의 유대강화, 대서양 민주국가의 편에 신생공화국의 위치를 외교정책적으로 확립시켜 놓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빌리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추진은 이러한 정지작업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며, 이 나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계기의 하나를 획하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약칭 “동서독 기본조약”, 1972년 12월 21일 서독측 에곤 바르(Egon Bahr)와 동독측 미하엘 콜(Michael Kohl)이 각각 서명함」은 여기서 거두어진 성과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데나우어 자신 1955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재개시킴으로써 이른 바 東方政策의 端初는 이미 열려 있었던 터이다.

독일의 통일정책이 새로이 역동성을 얻게 된 것은 역시 헬무트 콜(Helmut Kohl)정부가 들어 선 1982년 이후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헬무트 콜은 그동안 확보된 국방노력을 토대로 하고 西方同盟政策의 신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동독 여행, 동베를린 통과무역 등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고,

동독인의 서독방문도 크게 증가하여 1987년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결의안>³⁶⁾ 이 바탕이 되어 처음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聯邦軍과 독일민주공화국의 人民軍의 군사참관자들이 양국의 機動演習에 참가하였다. 같은 해 성사된 동독 國家評議會 의장 호네커(Erich Honecker)의 서독방문은 독일민주공화국을 독립적이고 同等權을 지닌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시사가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독일연방공화국은 콜과 디트리히 겐셔(Dietrich Genscher)³⁷⁾ 정부의 지휘 아래 서유럽통합과정을 역동화시키면서 동시에 동방과의 긴장완화정책에 있어 先導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臨界溫度는 예상보다 빨리 沸騰하였다. 이른바 「동유럽 대변혁」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수차례 「脫스탈린化」³⁸⁾ 몸부림의 실패로 좌절의 늪에 빠져 있던 中東部유럽에서 1989년 여름을 지나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그 宗主國 소련의 「재구성」(Perestroika)작업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 목표가 ‘소비에트 체제의 재구성’이었던 것이 그 위성국 일대에서는 혁명적인 변화의 소용돌이를 야기시켰다. 소련의 군대도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마치 도미노 게임의 말(馬)처럼 공산주의정권들은 저항하는 대중의 함성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에서. 고르바초프의 독일민주공화국(DDR) 방문은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서의 사태전개를 위한 탁월한 역할의 연출이었던 셈이다.³⁹⁾ “소련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승리를 배우는 것”, 이것은 50년대의 스탈린주의의 중심슬로건이었다. 80년대말의 동독지도부는 이 슬로건을 잊어 버렸던 것인지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찌’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잘 배우려 들지 않았다.

36)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알바니아를 제외한 유럽 33개국과 미국 및 캐나다 대표가 서명함.

37) 「자민당」(FDP)을 이끌고 있는 겐셔(Genscher)는 「기민당」(CDU)과의 聯政 수립 후 外相을 맡아 聯邦首相 콜(Kohl)과 함께 외교 및 통일정책 추진의 주역으로서 마침내 (再統一: Wiedervereinigung)의 과업을 성사시켜 낸 공로자의 한 사람이 됨. 그는 지난 5월 외상직으로 스스로 사임함.

38) 1956년의 「헝가리 사태」(동년 10월 23일 공산주의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데모로 시작된 인민봉기), 1968년의 「프라하의 봄」(체코슬로바키아에 있어서의 ‘자유화’운동), 1980년의 「연대」운동[폴란드에 있는 자유노조 ‘연대’(Solidarnosc)가 창설되어 주도한 개혁운동] 등.

39) 일찌기 (1953년 6월 17일)이 나라의 인민들도 공산주의정권에 대항하여 쫓겨하였으나 소련군 裝甲部隊의 투입으로 좌절되고 말았음.

1989년 10월 「독일민주공화국」의 健在를 과시하려던 건국 40주년 記念式은 끝내 악몽으로 변하고 만다. 당초 한 개 작은 눈덩이처럼 보였던 항의데모가 차츰 커지더니 어느새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눈사태로 돌변하였다.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 정권은 무너졌고, 그의 후임자 크렌츠(Krenz)는 사건의 압력에 어쩔 수가 없어 11월 9일 장벽을 개방하고 말았던 것이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시위를 벌였을 때,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일공산당)의 독재는 붕괴하였다. 그다음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라는 구호가 외쳐졌다. 통일에의 의지가 자발적 압도적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1961년 8월의 障壁構築 이후 28년 91일 만에, 그리고 1949년의 두 국가로의 分斷 이후 40년 만에, 자발적이고 노도와 같이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물결이 일었던 것이다.

연방수상 콜은 국내외의 이같은 정서적 분출과 정치적 당혹 국면에 처하여 1989년 11월 29일 이니셔티브를 취했으나, 그것은 정부의 독일 및 유럽정책을 “10개 항”으로 요약함으로써 였다. 독일민주공화국과의 조약공동체가 콘페데레이션(confederation : 국가연합)에서 페데레이션(federation : 연방)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일국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 그 腹案이었다. 이에 서독의 전 정당들은 “독일문제”에 관한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綠色黨 : Die Grünen)의 입장도 처음에는 분열을 보였으나 역시 ‘통일’에의 욕구가 대세를 차지했다. 과거 20년간 그 독일정책 전반을 “독일 내 두 국가”라는 전망으로 목표삼아 왔던 사회민주당(SPD)도 하룻밤 사이 새로운 사태에의 적응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자알란트(Saarland)州 총리 라퐁페느(Lafontaine)가 통일에 대해 여러 번 비판적인 언급을 가했던 반면에 브란트와 슈미트(Schmidt)는 국가적 통일의 지지자가 되었다. 이 전부터 재통일이라는 옵션하의 자결권을 강조해 왔던 「자민당」(FDP)과 「기민·기사당」(CDU/CSU)의 경우 압도적 다수가 콜의 “10개 항” 통일방안을 지지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동독에서는 어떠했을까. “10개 항” 방안이 몰고 온 영향은 아연케 하는 바 있었다. 모든 新舊의 정치집단들이 불과 이삼주 내에 독일통일에의 신조를 자신들의 政治綱領의 단호한 기초로 고백했던 것이다. 전독일의 中립화를 운위하다 며칠 후 이를 다시 철회한(1990년 2월 3일) 동독 각료평의회 의장 한스 모드로프

(Hans Modrow : 1989년 11월 13일 동독인민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됨)의 몸부림은 당혹과 허약 그것이었다. 지도부의 면모를 일신하고서도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이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人造小人의 생존을 더 이상 부지하기에는 시간이 지나버렸다. 격론 끝에 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8월 23일 특별회의에서 그 기본법 제 23조에 의거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효력범위 안으로의 독일민주공화국의 “가입”(Beitritt)을 스스로 의결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보면, 아데나우어로부터 콜에 이르기까지의 정책기조 중 이른바 「西方政策」은 동방정책 및 통일정책을 위한 일종의 도구적 성격도 지닌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서독 및 서방진영의 정치적 경제적 우세와 자유민주주의의 매력이 1949년 엘베(Elbe)강 동편에 수립된 전체주의적 強制政體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언젠가는 그 곳의 지배체제가 붕괴되거나 소련이 상황의 압력에 못이겨 그 점령지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이었던가를 증명해 주었다.

그러면 “통일의 회복” 이후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적 통일의 성취 이후의 발전에 있어서도 基本法과 이를 토대로 하여 兩獨간에 체결된 합의(“통화 경제 사회 통합의 형성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가 표준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40여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도 차이가 나는 구조들이 통합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동독지역의 산업구조개편문제, 실업문제, 구체제와 그 유지기관「특히 비밀경찰 슈타지(Stasi)」의 청산문제, 행정과 사법체제 재정비문제, 재산권 조정문제, 교육구조 개혁문제 등등 열거하자면 무수하다. 현재 특히 難題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대립되는 체제에서 사회화(Socialization)되어 온 까닭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크게 잃은 것도, 별반 달라진 것도 없는 서부독일 사람들로서는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동부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모르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르고 익혀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생활태도, 세계관, 가치관의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서 비롯하는 양쪽 국민들간의 갈등이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

그래서 “통일”이 성취되었음에도 여전히 “통일”이란 낱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

는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이 적잖게 남아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혹자는 이를 “독일통일의 제 2막”이라는 표현으로 기술하기도 한다.⁴⁰⁾ 지난 90년 10월 3일 내외에 선포된 통일은 “국가적 통일”이요, 그 날이 오기까지의 과정은 곧 통일의 제 1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막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인간적 통일”이다. 정치, 경제, 행정, 지리 등의 모든 부문에 있어 통합이 이루어져 있거나 이루어지고 있지만, 심적 사회적 인간적 통합은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닐 뿐 아니라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독일민주공화국」을 祖國으로 알고 여기에서 馴致되어 온 국민을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체제 속에 통합하는 일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며 시간도 적잖게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의 정도나 소요기간이 예상을 훨씬 넘고 있다는 데 독일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의전 타의전 간에 포기하거나 상실하고 아주 새로운 환경으로 줄지에 들어옴으로 해서 동독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喪失症候群, 適應不能, 正體性危機 등의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失職, 서독 사촌들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심적고통—굴욕감,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 사기 헐박 혹은 홀대 등으로 인한 배신감 등—이 덧붙여지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상실, 허탈감, 자포자기(통일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살은 이의 극단적인 표현형식이다), 사회적 일탈행동, 범죄, 그리고 상서롭지 못한 이데올로기운동(그 중 “네오 나치운동”이 두드러 지고 있다)에의 몰입 등은 이러한 연관에서 파악될 수 있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⁴¹⁾ 이와 같은 현상들이 통일된 나라 “큰 독일민주공화국(Groß-BRD)”에 있어서 인간적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또

40) 「Die ZEIT」紙와의 대답에서 라이프지히(Leipzig)를 그 首都로 하는 작센(Sachsen)州 총리 비이덴코프(Kurt Biedenkopf)는 ‘90년 10월 3일’을 통일과업 완성의 날로 간주하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하나의 誤謬였다. 그것으로 성취된 것은 國家的 統一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가능성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內的 統一을 성취시키는 일이다. 이런 한에서 ‘10월 3일’은 하나의 발전의 終着點이자 제2의 발전의 始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독일통일의 ‘제2막’의 시작이라고, 이 ‘제2막’을 구성하고 완성하는 것, 이것은 전체독일의 과업이다.” 「Die ZEIT」, 1991년 2월 22일자.

41) 이와 관련해서는 마츠(Hans-Joachim Mazz)의 「感情滯症」(Der Gefühlsstau-Ein Psychogramm der DDR, Argon, 1990)등 정신분석학 내지 정신의학적 관찰이 참고가 된다.

한 막대한 액수의 재정적 지출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성질상 그것은 돈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데 고충이 따르기도 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철조망 저 너머에는 2년 전에 소멸된 구 독일민주공화국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개방된 자유세계의 문물과 단절되어 정신적 물질적 빈궁에 찌들려 있고, 이른 바 “결핍증후군”의 증세를 보이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앓고 있는 증세를 증세로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테지만. 언젠가 그곳에도 자유의 세계가 찾아오는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핍증후군”에다 마침내 “상실증후군”까지 겹쳐 지게 되는 날 북한동포들이 겪게 될 어려움 역시 금일의 저 동독사람들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사람들이 통일후의 통일과정, 곧 통일의 제 2막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여하히 해결해 나가는가는 그들이 국가적 통일을 성취하기 까지의 과정(통일의 제 1막)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독일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 특히 아데나우어(Adenauer)가 설정했던 方針은 이 민족 통일 성취의 主役인 콜(Kohl)에 이르기 까지 不動의 것으로 지켜져 왔던 것인 바, 여기 참고로 몇 가지 들어 두기로 한다.

첫째, 국내정치와의 연계는 이것이 독립적인 외교정책적 행위능력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한다.

둘째, 讓步나 認容을 상대방의 상응한 조치에 응해서만 즉각 허용한다.

셋째, 恣意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투어나 구속력없는 의도표명에는 관심치 아니한다.

넷째, 서방자유민주체제가 대립되는 질서체제와의 대결에서 살아 남으려면 그의 正體性, 그 포기할 수 없는 원칙과 입장들을 분명히 발음해야 한다. 그런 한, 동방정책(Ostpolitik)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정어린 善意를 상호확인한다든가 심각한 갈

42) 이와 관련해서는 筆者가 「自由公論」(1992년 3월호)에 寄稿한 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統獨 제2막”이란 제목의 것이었으나 “독일,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로 掲載됨.

등을 덮어 두거나 煙幕치는 것 따위가 아니라 동서간의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규제
해 나가는 것이다.

제 3 부 민족적 동기와 관련된 의식들

앞(제1부 제3장)에서 우리는 북한의 좌파전체주의 집단에 의해서 민족적 동기를 나타내는 언어들에 여하히 再定義되어 그 개념내용의 변질이 초래되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다. 우리는 이들 언어들에 지닌 바 그 본연의 事象을 밝혀야 할 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I. 「民族意識」의 개념

민족의식이란 그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본질을 확연하게 드러내기가 간단치 않다. 우선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 봄으로써 접근해 보기로 한다.

민족의식을 “큰 사회집단을 통합하는 힘”으로 파악하는 오이겐 램베르크(Eugen Lemberg)의 견해는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에 의하면 민족의식이란 “국가주권의 담지자로서 고려되는 대집단을 통합시키고 그 한계를 경계지우고 그것을 네이션 또는 네이션에 유사한 형성체로 형성시켜 주는 힘”이라고 한다.⁴³⁾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의 집단에의 헌신, 歸依 또는 양가주망 등의 용어로 불리우는 어떠한 結束力인데, 이것은 간단히 愛國愛族心이라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램베르크에게 있어서 민족의식은 민족주의와 같은 터미놀러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오토 바우어(Otto Bauer)는 민족의식을 “자기 민족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자 동시에 타민족의 상이성에 대한 인식”⁴⁴⁾으로 이해한다. 그는 또한 이런 의식이 상례적으로 수반되어 있는 독특한 감정을 ‘민족감정’이라고 부른다. 낯선 민족의 특성이 사전준비도 없이 갑자기 마주칠 때 그것은 거의 언제나 불쾌감 혹은 혐오감에 의해서 수반되는 바 이는 惰性的의 법칙이 내면에서 일깨우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타민족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불쾌의 감정에 의해 동반되고 이런 사정으로 자기

43) Eugen Lemberg, *Nationalismus I-Psychologie und Geschichte*, Reinbek bei Hamburg, pp. 20ff.

44) Otto Bauer, *Die Nationalitätenfrage und die Sozialfrage* (Wien: Verlag der Wiener Volksbuchhandlung, 1924), p. 141.

민족 특색에 대한 표상은 快의 감정과 짝을 이룬다. 그 때문에 낯선 민족들에 대한 지식이 때로는 자기민족에 대한 애정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로의 애정이라는 이 본능적 힘은 사람들마다 또 계급에 따라 차이가 나서 이를테면 새 것을 수용하는 데 덜 익숙해 있는 농민들이 시민계층이나 산업노동자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

헤티히(Hattich)에 의하면 민족이란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로서 등장한 사회적 단위로서, “정치적 자아의식에 도달한 민족(폴크)”⁴⁵⁾으로 규정되는데, 이것은 민족의식에 대한 물음에 하나의 독특한 국면을 열어준다. 이 命題가 정당하다면, 민족의식이란 것은 우리의 눈 앞에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주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 가지게 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민족의식은 「민족」이란 것을 비로소 존재로 불러들이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민족」(네이션)이란 우리가 그에 관해 의식을 가질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한 대상이 아닌 것이다. 「민족」(네이션)의 성립 그 자체가 하나의 ‘의식됨’의 현상인 것이다. 「민족」의 본래적인 현실은 정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헤티히는 ‘민족됨’에로의 결정적인 동인은 의지(Wille)인 것이지 혈통, 언어, 지리 등 관찰가능한 대상들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의 인간집단은 일차적으로 그 집단이 「네이션」으로 존재하고자 함(Will)으로써 비로소 「네이션」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지리적 위치, 언어, 생물학적 공통성, 경제, 공동운명 등은 모두 민족의 형성에 함께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적인 것이다. 모든 요소들은 함께 작용할 수는 있으나 한편 個個 要因들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 또 어느 한 요소는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다른 요소들은 그 作用效力이 덜할 수도 있다. 이들 객관적 요소들은 「민족됨」의 과정이 이미 시작된 연후에, 즉 정치적 의지가 이미 현존한 연후에 비로소 중요하게 된다. 이들 요소들은 그들의 단순한 현존으로서는 「민족」을 生起시키지 않는다. 하나의 意志作用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들 요소들에게 意圖의 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요소들은 의지작용의 재료들이고, 네이션의 생성을 위한 일차적인 요인은 意志作用 자체라고 볼 수 있다.

45) Manfred Hattich, *Nationalbewusstsein und Staatsbewusstsein*(Mainz : V. Hase & Koehler, 3.Aufl., 1968), p. 16.

빌름스(Willms)는 개인이 자기민족에 대해 취하는 행동은 그의 의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세 가지로 확인하고 있다. 즉, 가장 평이한 것으로 개인이 자기자신의 삶이 민족에 의해 여하히 규정되고 있는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받아들일 뿐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의식의 前哨形態로서의 ‘民族感情’을 거쳐서 “민족적 자기주장 의지의 계기로서의 自我意識 또는 생동하는 의식”의 단계에 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⁴⁶⁾ 다시 말하면 ‘일반존재’(민족)에 대한 ‘개별존재’(개인)의 관계는 첫째, 반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는 ‘무의식적 관계상태’, 둘째, 이보다 한걸음 발달된 종류로서 ‘감성적 체험에 입각해서 확정되는 관계상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식적 연관’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서 눈여겨 볼 점의 하나는 그가 民族意識과 民族感情을 구별하고 있고 민족감정은 아직 의식의 층에 이르지 못한 意識以前의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감정’이 의식 以前의 차원이라 해서 무의식이나 무관심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조국에 대한 특별한 공감이나 애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感傷的일 수도 있고 偏愛일 수도 있는 것이다. 때로는 타국 또는 타민족에 대한 증오로 빛나갈 수도 있는 수준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족의식」은 反省的 思考와 意志인 것이며, 그러므로 감상이라든가 非合理主義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를테면 이 단계에서의 애국이나 애족은 반드시 敵國에 대한 憎惡心이나 타민족에 대한 拒否感을 포함하지 않으며 自民族의 고유성이나 가치를 주장하되 他民族의 특유한 가치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줄 아는 개방적인 의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감상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협력하려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며, “일반적인 현실과 개인적인 의식의 통일로서의 저 이념에의 志向”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빌름스는 이같은 민족의식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모이만(Ernst Meumann)의 이론을 들어 보자. 그에 의하면 민족대중의 생활 속에는 원초적인 확실성을 지닌 自然力과 같이 수백만의 개인들에게서 동일한 情操와 심적 동기와 행위들을 야기시키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힘들 중의 하나가 곧 民族意識이라고 한다.⁴⁷⁾ 이에 따르면 민족의식이란 인간들의 전체정신의 산물

46) Bernard Willms, *Die Deutsche Nation* (Köln-Lovenich : Hohenheim, 1982), pp. 59f.

47) Ernst Meumann, *Zeitfragen deutscher Nationalerziehung*(Leipzig : Quelle & Meyer, 1917), 12.

인 정신적 힘들에 속하는 것이며 개별로 존재하는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다. 인간들의 전체정신의 산물들을 서로 차이가 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그룹은 언어, 풍습, 유행, 교회나 제식과 같이 객관적 실존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한 그룹은 이와 대조적으로 객관적 실존을 갖지 않고 단지 作用現實만 가진 것, 말하자면 “순수히 정신적인 集合力”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에 민족의식, 시대적 취미, 민중의 일반적 생활정조, 여론 등이 속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이란 바로 이 순수히 정신적인 집합적 힘인 것이며 그것은 객관적 실존을 지니지 않고 다만 작용 현실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인 집합력으로서의 민족의식이 지니고 있는 작용 현실은 理念圈(Ideenkreis)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이념권은 다수의 대중에게 동일한 감정세계를 불러 일으키고 이 동일한 감정작용에 의하여 대중의 의지와 결의를 동일하게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각별한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이념권이라는 것이다. 이념권이란 “한 민족대중을 지배하고 그 개인들에게도 효력을 발생케 하는 하나의 표상 및 사상의 세계”⁴⁸⁾를 일컫는다.

모이만은 이 민족의식이 민중의 정신 가운데서 효력을 나타내는 형식을 두 가지로 확인하여 그것을 각각 ‘소박하고 본능적인 민족감정’과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민족의식’이라 표현한다. 전자는 주로 감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좁은 의미로 民族感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후자는 이에 비해서 반성적 형식으로서 하나의 이념권 혹은 思想領域이며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民族意識이라는 것이다. ‘민족감정’은 문화수준이 낮은 민족(Volk)들에게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본능적인 민족감정으로부터 본래적인 보다 높은 의미의 ‘민족의식’은 엄밀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인 바, 문화수준이 높은 민족(Volk)들의 민족감정은 “의식된 의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이만에게서 우리는 민족의식이 의지와 이념(Idee)에 기초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민족의식은 하나의 의식된 의지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能動性이 거기에 속한다. 능동성은 민족의식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식을 지닌 사람이 조국에의 向心이라든가 同胞愛, 또는 민족적인 것에 대한 이론적 관심 등

48) Ernst Meumann, *Zeitfragen deutscher Nationalerziehung* (Leipzig:Quelle & Meyer, 1917), p. 19.

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그에게 있어 민족의식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의지작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민족의식의 본질규정을 위하여 대표적인 다섯 학자의 이론들을 살펴본 셈이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民族意識이란 역사상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로서 등장한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민족의 성원들이 그 통합된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니게 되는 心的 理念的 關係狀態로서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것의 現前樣式에 있어서는 개인존재(민족의 구성원)의 일반존재(민족)에의 의존성이 거의 의식되지 않고 수용될 뿐인 상태, 감성적 체험에 입각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성과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는 보다 반성적인 의식상태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層構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째로는 반성된 의식상태에 이를수록 거기에는 일정한 理念圈이 중시되어 이것은 소박한 감성적 차원에 머문 의식상태와 구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족의식이라는 용어로 이해해 온 것은 거의 상당부분은 이중 감성적 체험에 입각해서 확정되는 의식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터미놀러지의 정확성을 기하려 한다면 이러한 소박한 형태의 민족의식은 '민족감정'으로 기술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한편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민족의식이란 이와 같은 본능적이고 소박한 형태의 민족감정 뿐만 아니라 反省的이고 비판적인 민족의식을 함께 포함하는 總括概念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의식'이란 카테고리로서 파악되는 한 민족의식은 '민족'을 중심적 가치로 여기는 정치적 思惟體系 내지 行動原理로서 이해되는 '민족주의'와는 구별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해 지는 것이다.

II. 「민족의식」과 연관되는 의식

민족의식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식이라 하여 학자들에 의해 자주 주목되어 온 것으로는 「고향의식」, 「조국애」,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다. 라트브루후(Gustav Radbruch)는 “고향감정과 민족의식 사이에는 특히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긴

장관계가 개재한다”고 보면서 전자를 후자에 조화시켜 넣는 일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⁴⁹⁾ 최근에는 이와 같은 주장이 후프카(Herbert Hupka)의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족의식에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속한다. 오늘날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고향도 포함해서, 고국은 고향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오직 고향 안에서만 그것은 생각될 수 있다.”⁵⁰⁾ 고향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민족의식에 속하고, 조국은 고향들로 구성되며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 후프카는 歷史意識도 “민족의식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다. 민족(네이션)이라는 공동체가 역사의 擔持者이고 동시에 여러 사회집단들 가운데 가장 역사의식에 크게 의존하는 집단임을 인정한다면, 역사의식이 민족의식과 관련이 깊은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만프레드 헤티히에게 있어서는 역사의식이 민족의식과 내용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¹⁾ 대체 ‘고향의식’이며, ‘조국애’며, ‘역사의식’이며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들은 각기 ‘민족의식’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

1. 故鄉意識

언뜻 보기에 ‘고향’이라는 것이 민족의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스럽고, 굳이 상관을 지어 본다 해도 양자 사이에는 오히려 相沖性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애향심과 같은 것은 어딘가 地域主義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의 진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 봄으로써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태어나고 성장기를 보낸 장소라고 여긴다. 한 마을이나 소도시, 또는 도시의 어느 區域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환경으로서, 거기서 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

49) Gustav Radbruch, “Die Aufgaben des Staatsbürgerkundlichen Unterricht” F. Lampe und G. H. Franke, *Staatsbürgerliche Erziehung* (Breslau : Ferdinand Hirt, 1924), p. 146.

50) Herbert Hupka, “Die Einheit der Nation. Der Auftrag des Grundgesetzes und die politisch-rechtliche Situation in der Gegenwart,” Klaus Weigelt(ed.), *Heimat und Nation* (V. Hase & Koehler, 1984), p. 264.

51) Hettich. 앞의 책, p. 21ff. 헤티히는 또 민족국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하나의 無歷史的 삶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Hettich, 앞의 논문, Klaus Weigelt, 같은 책, p. 209.

은 곳을 고향으로 알고 있다.⁵²⁾ 그런데 내가 거기서 출생하고 부모와 기타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도 언제나 고향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출생지이거나 居住地 일 뿐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어느 곳에 출생을 하고 비교적 장기간 거주를 했더라도 그곳이 故郷性을 얻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장소가 '고향'일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시간적으로 보다 앞선 세대와의 歷史的 聯關이 어떤 형태로든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자연적 문화적 환경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受容하여 그가 거기서 감싸여 지고 고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그곳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人格的 合一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 중요한 조건은 세제의 인격적 합일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이나 직장 또는 단체 등에서 구성원들 상호간에 意思疏通이 이루어지고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인격적 합일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는 말할 나위도 없이 가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지에 있다가 귀향하면 “내 가정에 돌아온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이런 인격적 합일이 가능한 구조를 고향의 眞髓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른 두 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나 또는 둘다 불충분한 상태이더라도 인격적 합일이 가능한 경우 그것은 고향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는 될 수 있고, 따라서 비록 태생도 아니고 先代와의 연고가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의 새로운 고향을 형성하기 위한 단초는 가능하다. 그래서 '선택고향'이라든가 '2차적 고향'과 같은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 가지 조건이 고루 충족된 고향에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그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충족되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마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지구적 현실이 되고 있다. 韓半島나 독일에서 처럼 민족의 분

52) 사회적인 언어로서 '고향'은 꽤나히가 적절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본다. “고향이란 거기서 인간의 社會化가 이루어 지고 鳥瞰가능성이 있는 범위의 장소적으로 묶여지는 사회적 구조이며, 이것은 스스로 보다 큰 - 따라서 조감가능성이 덜한 - 사회체제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Rene König, “Heimat, Familie und Gemeinde in den Industriegesellschaften,” *Schicksals-fragen der Gegenwart*, Bd. V., hrsg. von Bundesministerium für Verteidigung, B. R. D., Tübingen, 1960, p. 149.;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향토'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과 공통적인 문화 및 사회심리를 포함한 주민들의 역동적이고 전체적인 사회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 배명중고등학교, “향토학교건설의 연구”, 문교부, 「향토학교사례집」(1961), p. 1.

단으로 인한 故鄉喪失은 전후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되겠으나, 핵무기라든가 생태학적 위기는 전체 지구적 차원에서 고향박탈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난다하더라도 산업사회의 특징적인 징후라든가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갈등도 고향상실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고향에 살고 있다해도 대개 그것이 ‘缺損故鄉’인 경우가 많다.

인간은 고향을 왜 필요로 하는가. 어떠한 심리학적 내지는 인간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인간은 ‘고향의 아늑한 수용’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한 불노프의 견해는 이미 언급된 바 있다. 하노버(Hannover) 대학의 ‘자연환경보호연구소’ 소장이었던 부후발트는 사람이 고향을 원하는 심리적 근거를 밝힌 바 있다.⁵³⁾ 그에 의하면 사람은 正體性을 필요로 하고 안전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자극과 고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향을 원한다고 한다. 정체성과 고무적 자극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자 그레베루스(Greverus)여사는 인간이 고향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故鄉現像의 배후에는 ‘자기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자 하는 소원’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성향이 개재되어 있다고 한다.⁵⁴⁾ 부후발트가 말하는 自己同一性을 찾고 안전감을 구하며 세계탐구를 위한 자극과 고무를 얻으려는 욕구는 그것이 지리적 성질의 것이든, 사회적 성질의 것이든 오직 자기자신에게만 속하는 하나의 處所(Territorium)를 통해서 가장 잘 만족되는 바, 그와 같은 자기 공간을 가지고자 하는 行動속에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추구의 가장 심층적인 원인을 보게 된다.

인간의 경우 그의 고향공간은 대개 가정의 핵심적인 중앙이 되고 그 위에는 보다 큰 공간이 구축되어 쾨니히(Rene König)의 고향定義가 말해주듯이 애초에는 한 고장이나 한 도시의 ‘한 눈에 굽어 볼 수 있는 - 眺望可能性이 있는 - 범위’에 국한되던 것이 생활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同心圓的 테두리를 그리듯 넓혀질 수 있다. 그리하여 뵘(Bohm)이 그의 명저 <자립적인 민족>에서 말하고 있듯이⁵⁵⁾ 고향은

53) Konrad Buchwald, “Heimat heute : Wege aus der Entfremdung.” *Der Bürger im Staat*, 33. Jg. Heft 4, Nov. 1983, pp. 222-223.

54) Ina-Marie Greverus, *Der territoriale Mensch* (Frankfurt a. M. : Athena 1972), p. 382-397.

55) Max Hildebert Boehm, *Das eigenständige Volk*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32), pp. 100f.

민족의 삶의 처소로 높여져서 조국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 이 경지에서 이론적으로 그의 동향인은 민족성원 전체가 되며 그가 맺는 同鄉關係는 조국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향현상에 있어서 정신적 심적 내용이 순수히 지리적 공간적인 내용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곧 고향의식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원래 고향의식의 단초는 보통 유년기로 소급된다. 우리가 유년기로부터 청년 초기 사이에 기초적인 사회적 경험을 쌓은 장소에서 그런 사회적 경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고장 또는 도시의 구조나 형상들이 우리의 내부에 정서적 충전을 초래함으로써 생기기 시작한다.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얻는 체험가치, 감정가치, 혹은 합리적 경험소재들은 그 공간에 대한 우리의 기억 속에 닳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서적 充電과 기억에의 繫留과정은 그곳의 자연적 인공적 환경이 특징적일 수록 더 강렬한 것이 된다. 특징적이고 교환불가능한 환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일수록 그것은 인간의 의식 속에 깊이 인상을 남기고 일생을 통해서 은은한 정서적 울림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의식속에 자리잡은 記憶映像들은 후일 성숙한 인격에 있어서 그의 祖國意識을 형성하는데 기초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조국을 ‘의미하는’ 상징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왈리스(Graham Wallas)는 조국을 위해 죽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 죽는가, 군인은 戰場에서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의 답변은 이러했다. “아마도 그가 태어난 집 뒤뜰에 있는 느릅나무들을 생각할 것이고, 아마도 자기 나라의 어떤 화신을 생각할 것이다... 만일 그가 이탈리아 사람이면 그것은 그 이름, 곧 ‘이탈리아’라는 말의 그 음악적인 음절일지 모른다. 그가 프랑스 사람이면, 고향도시의 광장에서 본 부러진 칼을 차고 있는 대리석 입상을 생각하든가 혹은 ‘마르세이에즈’ (프랑스 국가 : 연구자註)의 그 매력적인 박자를 생각할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화환으로 장식된 權標杖 위의 청동 독수리 휘장을 위해서 죽었고 잉글랜드 사람들은 국기를 위해서 죽었으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號籍의 울림소리를 위해서 죽었다.”⁵⁶⁾

56) Graham Wallas, *Human Nature in Politics*, Boston and New York, 1909, Chapter II., F. I. Leipnik (Autorisierte Rearbeitung), *Politik und Menschliche Natur*(Jena : Verlag bei Eugen Diederichs, 1911), p. 36-37.

‘고향’하는 말이 우리들에게서 발생시키는 것이 정서적 계기들이듯이 고향은 우선은 하나의 감정과 정서의 사건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故郷感情의 중심은 역시 家庭이다. 부모와 살던 집, 幼年期에 부모와 자녀들을 엮어 감싸주는 그 그리운 基盤 또는 그에 대한 기억이 우리들을 채워주는 그 감정의 깊이며 온기의 무의식적인 기저를 제공한다. 그것은 특히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고난의 시대에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유년기의 보다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일 경우도 있고 사랑하던 특정 인물이나 아름답고 깊은 체험들에 대한 명료한 개별적 기억일 경우도 있다. 물론 이에겐 가족 외에 다른 친척, 동료, 이웃과의 밀접한 人格的 관계가 덧붙여지고 故郷共同體의 일정한 인격체들과 특히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인격적으로 계류된 고향감정이 강력한 고향과의 결속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향의 본질은 단지 이와 같이 인격적 관계에서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유년시절에 어느 한 곳의 땅뵈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행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사 가정의 인격적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고향과 결부되는 그 심정적 가치라는 보배가 그만큼 면제된다. 그런데 실상은 부모를 비롯하여 친밀한 사람에 대한 기억들은 그 가운데 벌써 비인격적 종류의 요소들이 개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생활공간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상과 생업과 의식과 놀이 등이 聯想 속에 포섭되고 그 모두가 고향감정의 따스함 속에 용해된다. 그래서 그 전체가 고향의식의 擔持者가 되는 것이다.

고향의식은 또한 시기적으로 보다 전의 세대들에게 연장되고 그곳에 이전에 살던 거주자들과의 역사적 연관의 감정으로 연장된다. 설화나 전설속에 계속 살아있고 그들의 활동의 가시적 증거들도 잔존시켜 놓은 先代들과의 만남으로 그 깊이가 심화된다. 직접적으로 체험에 의해서 생성된 ‘자연적인’ 고향감정이 여기서 보다 능동적인 인식과 주체적인 이해에 의해서 심화되고 개인적인 자아를 넘어서 생활공동체와의 보다 포괄적인 연관이 성립되고 그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응답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속에 ‘책임의식’이 형성될 때, 우리는 온전히 ‘고향의식’의 성립을 보게 되는 것이다.

2. 祖國愛

고향이 우선 공간적으로 한 눈에 굽어볼 수 있는 범위의 장소라면 조국은 그러한 조망이 불가능할만큼 그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故鄕的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고향”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한다. 한편 고향이란 일차적으로 사회학적 형성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 비해 조국이라 할 때는 보다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현실의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⁵⁷⁾ 한 사람이 “이것은 나의 조국이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하나의 국토와 정치적 질서와 국민의 존재가 전제되고 있고 그 국토와 국민의 역사 속에 자신의 존재가 소속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조국 속에는 그 사람의 사회학적 지리적 고향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작은 고향들로 이루어진 조국은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 그 사람의 의식수준이나 입장 여하에 따라서는 하나의 큰 고향일 수 있다. 이럴 경우를 일컬어 “政治的 故鄕”이라는 말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고향과 조국이란 두 개념은 상호 보완 관계를 지니는 것임이 확실해 진다.

우리가 이른 바 地理的 故鄕을 사랑하고 염려한다고 할 때 그 대상관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한 눈에 들어오는 자연과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공간과 문화재들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큰 정치적 고향으로서의 조국을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관계는 直接性과 구체성이 줄어든다. 보다 추상적이고 이념적이 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 국토와 국민과 정치적 질서를 긍정하는데서 출발하고 그것의 성장과 번영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의 운명에 대한 공동책임 — 경우에 따라 이것은 共同罪責感을 포함한다 — 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치적 질서는 하나의 전체질서를 나타내는 바, 이것은 그 사회 속의 개인과 집단들에 대해서 전체의 복리를 고려하고 전체를 위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때로는 그것이 요구하는 활동이 개인적 관심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조국에 대한 사랑은 포기와 희생의 성질도 띠게 된다.

조국은 민족집단의 定住空間이요 그 성원들 전체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인정된다면 조국에란 다름이 아니라 민족집단의 성원들이 그들의 전체

57) 그것이 정치적 어휘가 되기 이전에는 희랍어 “patris”와 라틴어 “patria”와 같이 ‘부친의 나라’, 풍습과 법과 종교를 가진 조상의 나라를 의미했고, 漢字語의 뜻도 또한 마찬가지다.

적 정주공간을 고향으로 느끼고 관심을 가지며 思慮하는 마음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려하는 마음 가운데 그 역사를 긍정하고 그 운명에 책임을 느끼는 의식이 수반될 것임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여기서 ‘전체적’이라는 수식어는 민족과 국가의 同一性이 상실되어 있는 집단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한 바 있다. 그것은 같은 정치질서 속에 있는 정주공간의 전부를 의미함은 물론이려니와 그것이 같은 민족, 같은 조상의 것인 한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달리한다고 해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리라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大韓民國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애라는 것이 한반도 남부지역 98,824km²에 국한될 수 있겠는가. 북쪽의 땅이 어떤 변모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상이 어떠한가, 언어며 문화며 정신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스럽다든가, 백두산의 일부가 증공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우리 것’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낀다든가 한다면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心懷일 것인가. 하나의 큰 역사적이고 유기적인 집단이 그들의 조상전래의 생활공간을 하나의 고향으로 느끼고 여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두어지며 애정이 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집단의 성원들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일러 우리는 ‘祖國愛’라고 표현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하나의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個人意識의 차원에서 시종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을 초월하고 개인의 생활사를 넘어가는 어떠한 집단적 정신이 소재하고 구체적인 개인들에게 있어서 생성 표출되는 그러한 의식은 이와 같은 超個人的인 집단적 정신의 힘에 관련이 되며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곧 민족의식의 존재영역이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권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의식이 민족의식과 맺게 되는 연관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하자.

3. 歷史意識

역사의식이 민족의식과 관계가 깊으리라는 것은 한 집단이 역사적 自覺에 이를 때 비로소 민족으로서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우선 짐작이 갈 수 있다. 分斷狀況에 처해 있는 민족집단이 그 민족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連續性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식되고 있다. 東北亞의 조선이나 통합이전

의 유럽중앙의 독일에서 역사의식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고 역사의식의 함양이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역사의식에는 말할 나위도 없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속할 것이고 그 역사와의 반성적 대결도 속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만으로 역사의식이 형성되는 것인지, 역사의식은 어떻게 해서 민족의식과 연결되는 것인지 아직 그리 분명치 않은 듯 하다. 더우기 역사의식은 최초로 고향의 역사, 말하자면 郷土史에 대한 이해에서 트이는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過去史로서 의식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다. 의식되는 한에 있어서만 역사가 된다. 그리고 과거사를 의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역사의식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한다. 과거사는 그것이 ‘나’의 과거로서 의식속에 머물고 있든가 의식속에 되찾아질 때 나의 역사가 된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에 매몰되어 살 수 있듯이 과거도 소홀히 해버릴 수 있다.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없이 지낼 수 있듯이 과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없이 살 수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역사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는 의식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連續性’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 연속성은 그 과거와 현재를 체험하는 그 주체의 正體性(identity)의 형성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이 말은 과거를 나의 역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내가 이 정체성을 실현하지 않을 때, 즉 과거실존이던 나와 지금 실존하는 내가 전연 다르고 연속성이 없을 때, 나는 스스로 나를 포기한 것이 되고 그때그때 순간의 산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이 곧 自我意識의 상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식의 본질적인 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역사의식은 자아의식의 요소가 됨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나의 자아의식에는 말하자면 나의 과거와 현재가 나라는 주체 안에서 통일됨을 이룸에 대한 의식이 속하는 것이다. 이 자아의식은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를

58)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조선일보의 연재 「한민족의 동질성회복캠페인」을 들 수 있는데, 이 기획물은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그 주요소재를 구하고 있다.

통일성으로 경험하는 주체가 스스로를 초지일관 관찰하려 하지 않을 때 분열될 위험에 처한다. 그렇게 될 경우 사람은 다만 순간 순간의 상황에 반응할 뿐인 존재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식을 말할 때 그것은 개인의 生活史를 두고 말하기 보다는 우리들의 사회적 실존을 두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람은 그 사회적 본질에 근거해서 하나의 단수적 主體意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주체의식도 소유하는 존재다. 사람은 주체로서의 그의 입장을 “나”라는 말로써만 아니라 “우리”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역사의식에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주체의 정체성이 속하고 동시에 이 역사의식은 이 主體의 자아의식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테제는 사회적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는 과거사를 “우리들의”역사로서 의식함으로써만 역사의식을 지닌다. 이 경우에 하나의 초개인적인 歷史擔持者 — 예컨대 한 집안이나 단체, 학교, 지역공동체, 국가, 민족 등 — 에의 소속성을 통해서 그 과거에 내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로서 함축된다. 공동체의 과거사에 나도 연관되며 그것은 내게도 의미가 있으며 그리하여 그 과거사가 나의 과거사로서도 받아들여질 때 그런 ‘나’의 집합으로서의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역사”를 갖는다. 단순히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의식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의 역사는 나 또는 우리를 위해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얻는 지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역사적인 지식일 뿐이지 역사의식은 아니다. 나 또는 우리가 거기에 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타집단의 과거는 인식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나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도 아니요 따라서 우리의 역사의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만을 생각하고 살 수 있듯이 과거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사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의식속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연속성을 얻게 되는 바, 이 연속성은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正體性 形成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과거를 우리의 역사로 만드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다. 만일 과거 실존했던 우리와 현재 실존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 연관이 결여되고 그럼으로써 연속성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集團的 正體性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민족이라는 공동체는 가정이나 학교나 노동집단 등 여러 사회적 형성체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요 역사의식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종류의 집단이다. 한 민족의 정체성, 그의 자아의식은 그 공동의 운명에 의지하는 것인데, 이 共同運命이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공동의 역사를 이룸이다. 역사말고 달리 하나의 민족의 자기이해 속에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역사의식이 속하게 되는 것이 틀림없다. 민족을 일컬어 “자기자신을 역사의 주체로서 이해하면서 - 그리고 대개는 긍정하면서 - 어떻게 해서든 하나의 주권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갬베(Gabbe)는 민족의식을 “하나의 통합된 집단이 자기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갖는 인식”⁵⁹⁾이라고 했다. 민족대중이 자기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갖는 인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이란 역사적 변동을 경험하는 주체 - 개인이든 집단이든 - 가 자기자신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갖는 부단한 意識(인식, 관심, 의지)이라 할 것이요, 여기에는 그 주체가 자기의 모든 과거를 그의 현재를 위해서 의미있게 만들려는 의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지사라도 그것이 의식이 되어야 역사가 된다고 했다. 한 민족의 과거사는 망각에 귀속되어 버리지 않는 것일 때 역사가 되고 이 不忘却(기억)을 수행하는 의식이 말하자면 역사의식인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자기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한다면 이 역사의식은 생명처럼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Ⅲ. 「민족의식」의 內容

우리는 이제 「민족의식」 그 자체의 내용을 살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고향의식과 조국애와 역사의식을 먼저 살핀 것은 이들이 민족의식의 내용가운데 포함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그럴만한 근거가 있으리라고 인정했기 때문인데, 앞의 고찰에서 그 점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들 세 의식은 내용적으로 연관이 깊은 것임이 확인되었지만 각기 고향의식 또는 역사의식으로서의 獨自性으로 해서 민족의식과 동일시 될 수는 없으며 그 확인된 바 내용으로서의 성격도 2차적인 차

59) Jorg Gabbe, *Parteien und Nation*, Universitat Bonn Dissertation(1974), p. 46.

원에 머문다. 하나의 독특한 대집단으로서의 민족을 성립시키는 의식은 이들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독자적인 내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의식이나 역사의식은 개인의식에서 發芽하여 거기서 성숙하고 거기서 머물며, 따라서 그 개인의 의식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소멸과 더불어 존재의 영역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들은 고향이며 역사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나게 되고 그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규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비해서 민족의식의 경우에는 우선 그것의 담지자가 대집단임으로 해서 그 존재방식이 이들과는 유별난 면이 있다.⁶⁰⁾

민족과 같이 큰 집단은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적인 이념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헤티히와 같은 정치학자는 “민족은 1차적으로 이념이요, 2차적으로(그 다음에) 비로소 실제적인 공동체인 것이지, 그 역이 아니다”⁶¹⁾ 라고 언명하였고, 빌름스도 마찬가지로 “이념으로서의 민족”의 성격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민족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실체이고, 이것은 그의 실존을 위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이념을 필요로 하며, 존재론적으로 사실적인 現存(공동체)보다 이념이 앞선다는 것은 민족의 존재를 성립시키고 그 발전을 규제하는 것이 물질적인 조건보다는 정신적인 힘이고 이 힘의 所在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개인의 의식이나 생활사를 포섭하고 초월하는 어떠한 집합적이고 전체적인 정신적 힘에 의해서 生起하고 지탱되는 것임을 짐작케 하는 바, 민족의식의 본질적인 차원은 바로 이같은 힘에 놓여있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는 민족이란 것을 눈 앞에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나 인식을 가질 수 없다. ‘고향’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胎生故郷이든 選擇故郷이든 일정한 대상적 공간이 눈에 들어오고 이에 대해 어떠한 느낌이나 상념을 지닐 수 있다. 그러

60) 논자에 따라서는 개인이 집단 또는 공동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의식(감정, 인식 등)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 예를들어 오토 바우어는 그것을 “자기민족의 특성 - 동시에 타민족의 상이성 - 에 대해 갖는 인식”으로 규정했고 이런 의식이 수반된 독특한 감정을 ‘민족감정’이라 불렀다(Otto Bauer, 앞의 책, p. 141.).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정신적 이념적 차원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존재의 층이 드러나지 않는다.

61) Manfred Hattich, “Einheit der Nation und Nationalbewusstsein im geteilten Deutschland,” K. Weigelt, op. cit., p. 207.

나 민족에 관해서 어떤 상념이나 느낌을 지닌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 속에 이념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에 관한 것이다. 나의 민족은 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의식 가운데서 이념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나’가 한 집단에 있어서 복수적으로 생길 때 이 뜻 ‘나’의 집단은 비로소 민족이란 공동체로서의 존재근거를 가지게 된다.

민족의식은 민족이라 불리우는 어떤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의식 이기보다 일정한 집단의 성원들의 복수적인 의식속에 이념적으로 존재해서 그 집단을 비로소 ‘민족(nation)’이라는 존재에로 불리들이는 어떠한 정신적 힘이며 표상세계이다. 그것은 일정한 대집단의 전체정신으로서 존재하고 그 집단의 구체적인 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뜻에서 에른스트 모이만은 그것을 ‘순수히 정신적인 集合力’이라 표현했던 것임은 이미 논급되었다. ‘순수히’란 부사적 규정은 그것이 객관적 실존을 갖지 않고 ‘작용현실’만 지닌 것임을 뜻한다. 민족집단의 다수 성원들에게 동일한 감정세계가 일 수 있고 대중의 의지나 결의가 동일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이 정신적 집합력의 작용현실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민족의식을 “정신적 힘”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理念圈’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 모이만의 학설을 주목한 바 있다. 그가 세 가지 이념권을 추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민족의식의 본질적(이념적) 내용을 탐색하는 데 유익한 안내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민족의식은 ‘민족의 자아의식’, ‘동포의 연대의식’, 그리고 ‘민족성원의 정신적 도덕적 친척관계의식’이라는 세 가지 주요 理念圈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⁶²⁾ 민족의식의 구성요소가 세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정신적 도덕적 친척관계의식이란 개념은 다소 術學的인 분석이란 느낌을 주나, 다른 두 요소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정치적·도덕적 친척관계의식’은 소박하게 파악하면 결국 정신적 親和性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1. 自我意識

하나의 대집단이 민족으로 존재할 때 그 집단을 지배하는 독특한 정신적인 힘은 먼저 ‘自意識’ 또는 ‘자아의식’이다. 개인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할 때 자기의식을

62) Ernst Meumann, 앞의 책, p. 19.

지니게 되는 것에 대비할 수 있다. 의식능력을 가진 유기체가 자기자신을 보존하고자 하고 자신의 특성이나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주장하고자 하는 의식을 말함이다. 이 의식은 물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어떠한 사실적 관계에서 유래한다. 개인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이라든가 지능과 체력과 같은 일반적인 능력, 自我概念, 성격, 포부 등이 그가 지니는 자기의식의 사실적 기초가 되듯이 하나의 민족집단의 자아의식을 위해서도 그런 사실적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모이만은 그 민족의 기본적인 自己保存意識, 固有性 및 固有價值 意識, 그리고 自立意識으로 가름해 내고 있다.⁶³⁾ 그리고 이와 같은 자아의식은 결국 하나의 自己同一性 의식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그것은 개인의 경우 ‘나’로 표현되고 집단의 경우에는 ‘우리’로 표현된다. 말하자면 개인의 자아의식은 ‘나 - 의식’이라 할 수 있으니, 개인은 “나는 나다”라는 직접적인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의 경우는 자기자신을 ‘나’로서 알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직접적인 ‘나 - 의식’은 있을 수 없고, 그 대신 ‘우리 - 의식’이 등장한다. 민족의 자아의식이란 바꾸어 말하자면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는 집단의 ‘우리 - 의식’이 되는 셈이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민족집단의 ‘우리 - 의식’은 세 가지 사실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 자기보존의식

민족의 자기보존의식이란 하나의 민족이 자기자신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욕구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언어나 문화 또는 역사의 공통성 등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는 有機的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민족은 스스로를 보존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실현을 하려는 동기를 지니게 마련이요, 이 동기가 그 共同體의 자아의식을 형성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가 된다. 민족이 지니는 바 이 근원적인 동기는 간혹 부정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부정하고 없애려는 욕구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개인의 자기보존 본능 가운데 타인을 없애려는 충동이 반드시 개재하지 않듯이 민족의 자기보존이라는 욕구에 타민족을 부정하려는 염원이 반드시 개재하는

63) Ernst Meumann, 앞의 책, p. 20.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도 자기와 함께 번영하고 나란히 꽃을 피움을 보고자 하는 소원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 삶의 조건에 있어서 다른 개인이나 다른 민족의 존재와 그들의 안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그 전체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보존하려는 자기보존욕구”라는 이 긍정적인 사상은 현실이란 지반에 발을 딛고 서있는 사람이면 하등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이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나 독일땅에서 오늘날 민족을 그 전체성에 있어서 보존하려는 노력들이 부단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거니와 만일 민족의 자기보존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은 근본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개별 인격에 있어서 자기보존의 욕구는 아주 확고히 뿌리박혀 있는 것이어서 그 개인이 병리학적으로 異常狀態에 있거나 어떤 압도적인 타격을 받아 자기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만 동요하게 된다. 민족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떤 민족집단이 스스로의 보전이나 자기주장에 疑懼하는 것은 하나의 側錯이요 자연에 반합이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최근의 人間主義 심리학에 의하면 정신병자나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아의 유지 또는 自我上昇에 필요한 知覺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국내외서 실증적인 검증이 끝난 사실로서 민족집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類推가 가능하다.⁶⁴⁾ 하나의 민족이 자기보존의지를 소실하거나 자기주장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때 그것은 하나의 병적인 징후인 것이요, 정상적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민족집단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민족이 자기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으뜸가는 강력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각 민족은 그 자신을 훨씬 초월하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들, 즉 전체 인류를 위해서 귀중하고 오직 그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고 다

64) 이점과 관련해서는 Arthur W. Combs and Donald Snygg,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New York, Evanston, and London: Harper & Row, revised ed., 1959)중에서 Chapter 12 “The Inadequate Personality: The Dynamics of Failure”, pp. 265-303.; 최정훈, 「지각심리학: 인간행동의 이해」(서울: 을유문화사, 1973)중에서 제6장 “적응과 인간관계”가 특히 참고된다. 최정훈 교수는 정신병자나 범죄자 등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의 지각적 특성으로서 첫째,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수용태세의 결핍’, 셋째 ‘타인과 널리 공동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여기서 ‘수용태세의 결핍’이란 개인이 자아의 유지 및 상승에 필요한 중요한 지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지각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책, pp. 144-149 참조.

른 어떤 민족도 이를 대신할 수 없는 정신적·도덕적 가치들을 산출하기 때문이요, 따라서 한 민족이 자기자신을 포기한다면 이러한 가치들은 전 인류에게서 상실되고 만다.

그런데 혹자는 약간 다른 뜻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민족의식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적대적 대립으로, 不寬容으로 充進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물론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민족적 사고방식도 이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 자기주장을 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웃의 다른 민족들을 발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모폴리탄들이나 國際主義者들이 모든 민족감정은 반드시 다른 민족들에 대한 불관용과 결부되게 마련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민족의식의 변질된 형태를 민족의식의 본질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혼동이 하나의 오류임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변질된 것을 구실로 삼아서 정당한 추구 자체를 비난해서는 부당한 것이다.

민족의식은 흔히 두 가지 변질형태와 혼동되고 있음을 본다. 그 하나는 민족적 에고이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족의식과 구별되는 것은 마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런 자아의식이 에고이즘과 서로 구별되는 것과 같다. 개인의 에고이즘이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듯이 민족적 에고이즘도 부정적인 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민족의식의 반성되지 않은 變異形態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변이형태라 할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비하면 한결 나은 것이라 하겠다. 민족주의란 보통 민족(nation)과 국가의 同一性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데올로기화 될 때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히틀러(Hitler) 시대의 독일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민족의식이 국가적 규정에 정향되지 않고 하나의 종교처럼 이해되었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생물학적으로 왜곡된 民族概念(Volksbegriff)과 결연되어 마침내는 종족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영국, 스칸디나비아, 발틱, 북프랑스, 네델란드, 북이탈리아, 그리고 동유럽의 독일민족집단을 포함하여 게르만 種族圈과 文化圈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도착된 민족의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며,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질된 것을 거부한다.

민족의식의 不寬容性 시비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한 민족의 자기주장의 본질 속에는 다른 민족들의 자기주장의 승인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자기자신을 지키고 주장한다는 원초적인 의무는 민족의 본질에 속하며 그 삶의 조건의 하나이다. 정상적인 민족의식은 정상적인 개인의 자아의식이 그러하듯이 모든 다른 민족들에 대해 자기주장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민족감정이 너그럽지 못하게 흐르기도 함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한 민족의 구성원들이 자기민족을 넘어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非正常行態일 뿐이다. 금세기 초엽 평균적인 영국인에게서 그런 면이 인정되고 있거니와 만일 오늘날 일본인이 어디로 가든 오직 자기민족의 利益範圍만 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같은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⁶⁵⁾ 여하간 불관용성이란 정상적인 민족의식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그 본성과는 무관한 것임은 분명해 져야 할 것이다.

나. 固有性 및 固有價値 의식

민족들은 저마다 그의 민족성격을 형성하는 정신적 고유성 또는 독특성을 나타내려는 확연한 의식을 지닌다. 이것은 그 소극적 측면을 드러내자면 곧 代理不可能性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민족에 의해서도 그 고유하고 개성적인 것은 대리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똑같은 두 개인이 실존하지 않듯이 똑같은 두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의 하나를 여기서 보게 된다. 고유한 것, 개성적인 것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이를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족의 고유성이나 개성은 그 민족의 정신적 창조물들, 곧 예술, 과학, 풍속 또는 생활양식 등과 경제적·정치적 삶에서 표현이 된다. 모이만은 한 민족의 자아의식은 그 민족이 지닌 고유성과 독창성이 이와 같은 정신적·실천적 창조물들 가운데서 표출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생성된다고 주장하고 그 예를 고대 아테네인과 중국인에게서 들고 있다. 즉 그들의 강한 자아의식은 그들에게 알려져 있던 타민족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예술과 문화가 지닌 유일무이성을 의식한 데 기초된 것이었다는 설명

65) 일본의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도 이 점을 반성하고 있음을 본다. 예를 들면 日經濟財團 이사장 天谷道弘씨는 일본인들의 자기중심주의를 “집단적 피터팬症候群”이란 표현을 붙여 비판하고 있다.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기사, 서울신문, 1986년 2월 19일자에서 재인용.

이다.⁶⁶⁾

그러나 한 민족의 고유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외없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일본민족이 '경제동물'이란 비유를 들을만 하다든가 영국민족이 우월감이 지나치다든가, 프랑스민족이 허영심이 많다든가 러시아민족이 火酒에 몰두한다든가 혹은 - 만약 - 韓民族이 단결심이 부족하다든가 한다면, 이런 것이 다 그 민족의 특성이라고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도덕적·문화적 진보를 위해서는 무가치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들은 고유한 것이면서 가치를 지닌 것에 대한 의식을 지닌다. 말하자면 고유성 의식에는 부분적으로 고유가치의식이 덧붙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민족이 조상에 대한 恭敬心이 강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들로 여기는 의식이 남다르다든가, 일본민족이 殫事봉공성이 크고 그것을 그들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든가 혹은 독일민족이 성실성과 학문정신을 그들의 고유가치로 여기는 의식 등에서 그 예를 본다.

민족이 그들의 고유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이 권리는 누가 異議를 달거나 반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사람이 자기자신의 가치를 자각한다는 것은 개개 인격으로서든 민족으로서든 보아서든 그것은 의무가 된다. 까닭은 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자기자신을 존중하게 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자기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인간의 인격적인 도덕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가장 지고한 보호가 된다는 데 있다. 자기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상과 조화되지 않는 자세나 동기나 행위는 스스로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그런 행위를 강요 받을 경우 자기존중에서 이를 거부한다. 민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는가. 한 민족의 自尊 속에 그 민족을 위해 위대한 정신적·도덕적 성취를 기하고자 하는 大衆動機가 소재하며⁶⁷⁾ 타민족의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물리치고자 하는 동

66) Ernst Meumann, 앞의 책, p. 25.

67) 모이만은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 동안 미합중국에서 학문자료 수집, 도서관, 실험실, 각종 연구소의 건립 등을 위해 누구도 대규모 지출을 시작하지 주목하고 그것이 반드시 학문 자체에 대한 이론적 관심에서 보다는 민족적 자아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관찰했다. 미국이 학문적 업적에서 유럽에 뒤져 있음을 참으려 하지 않은 까닭으로 부유한 상인들, 맥주양조업자, 석유왕, 목재업자, 석탄왕들 등이 수백만불씩 기부했고 각 주들도 이들을 뒤따랐다고 한다. 여기서 한 민족의 자존이 위대한 정신적 성취들을 낳는 생산적인 원천이 된 실례를 본다. Meumann, 앞의 책, p. 29.

기도 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타민족의 침해는 자민족의 自尊의 毀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 민족의 자존은 하나의 실질적인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경제적 힘이요, 민족성원 전체의 내적·외적 진보는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다. 自立意識

한 민족의 자아의식을 구성하는 세번째 요소는 자립의식이다. 이것은 다시 政治的 자립의식과 精神的 자립의식의 둘로 나누어지고, 이중 정치적 자립의식은 內政과 外政에 공히 미치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식의 이 성분을 위한 사실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한 민족집단성원들이 성취한 정치적·정신적 자립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자립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정치적 자립을 위한 토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요, 그 타당성은 심분 인정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 한편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민족들이 정신적으로 疲弊되고 따라서 자립의식의 回生이 성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역사상에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근래의 예로 패망 후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越南人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과거 본국에서의 생활수준이나, 지위, 인종, 지방에 따라 심한 분열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난민들 중 12% 가량이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정신질환은 그들이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적·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일에 실패한 데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심각한 자기분열상태가 그 집단의 정치적 자립의 상실에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민족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상실되어 있고, 그들은 위축되고 변질되어 아무런 主義 節操가 없는 성격상실이 되고 만다.”⁶⁸⁾ 이는 모이만의 지적이지만, 불행히도 일제치하의 한반도 민족의 경험에 의해서도 상당히 뒷받침 되는 것임을 우리의 현대사는 시인하는 바 있지 않은가. 정치적 자립이 한 민족의 정신적·도덕적 삶을 위해서 지니는 의의는 아무리 크게 어렵잡아도 과함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68) Ernst Meumann, 앞의 책, p. 30.

2. 連帶意識

‘連帶’란 낱말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심적·정신적으로 연결이 되고 상호간에 紐帶가 성립되어 서로 - 그리고 함께 - 책임을 진다는 뜻이 있다. 이같은 사전적 語義를 참고한다면, 민족집단의 연대의식이란 민족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심적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고 상호간에 유대가 성립되어 서로 - 그리고 함께 - 책임을 느끼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서로’란 하나의 민족의 성원들이 橫的으로 연결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상하가 縱的으로도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함축된다. 또 신분, 계층, 직업, 교육수준, 출신지역 등 제반 사회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정치적 당파나 종교적 종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집단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능하다는 뜻이 함축된다. 뿐만이 아니다. 모이만에 의하면, 민족의 연대의식은 個別者와 그가 속하는 바 전체(민족) 사이에 일정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신에 그 본질이 놓여 있다. 개인과 어떤 유기적 전체로서의 집단이 서로 심적·정신적으로 연결이 되고 서로 배려가 있고 서로 責任을 느끼는 데서 성립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자아의식에 이어 민족의식의 두번째 측면을 이루는 이 연대의식은 민족공동체의 도덕적 생활내용이 그 안에서 그 고유의 기초를 갖는 것이요, 한 민족의 모든 성원들에게 삼투시키는 힘과 성실성은 민족으로서의 그 道德性의 진정한 척도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 의식은 수동적 측면과 능동적 측면을 지니는 것인데, 수동적 측면은 개별자가 전체에 사실적으로 속한다는 것과 그의 운명이 전체민족의 禍福에 의존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별자의 전체운명, 그의 행·불행, 행위의 성과, 인정, 이해, 그의 창조한 바에 대해 얻는 동의나 갈채 등 요컨대 그의 물질적·도적적 행복이 조국의 운명과 밀접히 混和되어 자기자신에게 있어서 양자는 하나로써 나타난다는 확신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동적 생활내용이다. 민족의 전체 이익과 그 至上善이 문제가 될 때 민족의 安寧을 위하여 조건없이 나서려는 개인의 확고한 의지가 이에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전체도 그러한 희생을 인정하고 개인의 운명을 위해 책임을 지고 그를 옹호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오늘날 한

국의 군인이면 누구나 자기가 조국을 위해 身命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만 조국도 또한 그 權力展開의 큰 비중을 그를 위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조국에게 자기자신을 바치지만 조국도 또한 그를 위해 희생을 치른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성원들의 상호감정이 민족의 삶을 위해서 높은 도덕적 意義를 지니는 까닭을 알 수 있게 된다. 연대의식은 자아존중과 나란히 민족의식이 지니는 바 제2의 도덕적 주요내용이다. 개인운명이 전체운명과 밀접히 연결되고 개인행위가 민족의 전체행위와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의식 가운데서 개인의 행위는 그가 생을 받아 나고 그에게 언제나 도덕적 작용의 場으로 나타나며, 도덕적 관련에 있어서 모든 일반적인 인간관계들을 능가하고 개인의 도덕적 행동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보증이 되어주는 그런 윤리적 생활공동체에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윤리적인 것의 본질이 무엇이나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 윤리적 행위는 개인이 실재하는 윤리적 공동체에 어느 정도 봉사할 하느냐에 따라 성립된다는 점에서는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일반 人類意識에 대해 민족적 연대의식 또는 상호감정이 가지는 탁월한 윤리적 우월성이 놓인다. '나의 민족'은 하나의 실재적인 윤리적 공동체이지만, 윤리적인 공동체로서의 '인류'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나서야 그런 것이 현실화될 지 모르나, 그때까지는 그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抽象이요, 하나의 무한히 먼 규정적인 행동목표일 뿐이다. 나의 민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윤리적인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이나 직업생활, 또는 국가생활에 있어서 매 순간 눈 앞에 다가서는 명백하고 限定的인 도덕적 과제들을 나에게 제기하지만, 인류공동체는 그것이 하등의 현실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과업을 제기할 수 없다. 나의 민족은 가슴과 정신과 의지의 그 온갖 - 출생과 운명을 통해 결연된 - 羈絆에 의해 내가 묶이고 나와 나의 행위에 큰 감응을 보이는 그런 윤리적 공동체이지만, 나의 정신적·도덕적 창조에 대해 이해와 감수성을 가지고 마주 다가오는 하나의 人類共同體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민족은 그를 위해 내가 매순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그런 윤리적인 공동체이다. 그 이유는 내가 숙명적으로 온갖 이해와 관심을 더불어 이 공동체 안에 위치되어 있고 일정한 확고한 자리를 그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이 人類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입장이란 아주 막연한 것이다.

끝으로 동포와의 연대의식에는 민족의식이 지니는 바 최고의 의무부과적 힘이 소재한다. 각 민족성원은 민족의식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의무를 깨닫게 되는데, 전체국가의 삶은 이 의무감에 크게 의존한다. 왜냐하면 만약 시민들이 모두 法과 統制에만 한정된다면 어느 국가도 존립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민족적 義務賦課에 추가되는 것은 그것이 무릇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무의 최고의 등급, 말하자면 자기자신의 생명의 희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민족의 自尊에 미치는 민족의식의 영향에 관해서 발견된 사실을 여기에 추가시켜 본다면, 이제 이러한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은 첫째 부단히 그 성원들에게 감화를 주는 도덕적 힘, 모든 동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힘은 민족의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요, 둘째 이와 같은 「민족의식」을 지니면 지닐 수록, 그 민족집단은 도덕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3. 정신적 親和性

혈족관계와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親姻戚이라고 한다. 그리고 혈족관계와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친인척의식이 성립될 수 있다. 한반도를 생활근거지로 삼아 온 우리 韓民族은 같은 조상을 모시는 單一民族이라고 한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韓民族을 이루는 성원들은 크게 혈통상 하나의 친인척관계에 있는 셈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민족단위로 친인척의식이 성립될 수 있는 사실적인 근거가 자연적으로 하나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민족국가들을 보면 자기 상이한 종족들이 합성되어 있으면서도 민족적 凝集의식이 특별히 강한 나라들이 많다. 이것은 민족적 결속의식은 본질적으로 血統의 同一性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미합중국이나 희랍을 예로 들어 보자. 희랍인들은 전혀 다른 혈통을 가진 다섯 내지 여섯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 희랍의 後裔, 이주해 온 슬라브인, 알바니아인, 마케도니아인, 사라센인, 그리고 터키인의 피도 섞여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랍은 여러 種族集團들로 부터 하나의 강력한 민족의식을 발전시켜 왔다. 미합중국의 예도 마찬가지다. 구라파, 아프리카, 아세아 등 여러 대륙의 상이한 종

족들이 혼합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강한 美國式 민족의식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인종이나 종족이 달라도 정신적으로는 친화성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민족집단에 있어서 통일과 정신적 親和性을 창조하는 힘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나의 민족 소속원들에게 정신적·도덕적 친화성을 생성케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신적 힘임에 틀림없으며, 동포들은 정신적으로 서로 접근시켜 주는 것은 '민족적 정신' 또는 '민족 얼'이다. 하지만 이 민족적 정신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 민족적 정신의 사실적 기초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힘들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요소, 곧 언어의 동일성, 공동 운명과 역사, 그리고 땅의 공동성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言語의 同一性

민족 구성원들을 내적으로 통일시키고 그들 사이에 정신적 친화성을 형성케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언어의 동일성이 갖는 힘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가 있고 한편 논란도 없지 않다. 언어의 힘을 각별하게 중시하는 입장은 누구보다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에게서 발견된다. “언어는 思惟와 의욕에 있어서 그 민족 개개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이고...그 통용환경 내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의 공통적 오성으로 결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⁶⁹⁾고 말함으로써 언어가 민족정신의 주요 매개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힌 이 철학자는 “국어는 국민에 의해 형성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국어에 의해서 형성됨”을 거듭 말한다.⁷⁰⁾ 이것은 언어의 동일성이 한 민족집단 성원들의 내적 통일을 가능케 하는 힘을 시사한 것이 된다. 반면 언어의 동일성이 가지는 의의가 별달리 중요한 요소는 못된다는 견해들도 있다. 이것은 스위스나 과거 帝政 러시아에서와 같이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민족적 내지 국민적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그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같은 이론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상적인 관찰에서 비롯되는 판단이라고 본다. 언어는 사실에 있어서 민족의 內的 통일을 위해서나 그 친화성의 형성

69) Johann Gottlieb Fichte, 김정진(역), 「독일국민에게 고함」(서울: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 문고 1, 1971), p. 111.

70) 위의 책, p. 95 및 103.

을 위해서 최대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여러 언어들
 이 사용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런 현상은 단지 표면적으로 존속할 뿐 모든 민
 족은 언어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混淆나 移民政策으로 여러 언어들
 이 사용되고 있는 곳일지라도 언제나 하나의 언어가 나라언어로서 국가적으로 先導
 된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에서는 슬라브어가 공식적인 관용 및 통신언어이고, 오지리
 에서는 독일어가 군사 및 官廳언어이어서 대도시의 헝가리 혈통 주민들도 독일어
 를 배운다. 미국에서는 영어가 공식적인 通用語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단지 스위스
 가 표면상 예외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가 모두
 동시에 통용언어이고 주민들은 그 중 최소한 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상으로는
 언어의 통일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이탈리아어가 주민의 7%로 그중 덜 쓰인다).

언어의 동일성이 정신적 친화성의 형성에 작용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에 의
 한다.⁷¹⁾ 하나는 직접 언어 그 자체를 통해서이고, 또 하나는 그 언어에 의해서 민족
 구성원들에게 매개되는 모든 정신적 資産을 통해서이다. 언어는 정신적 창조물의 전
 체세계의 媒介者요 이들 정신적 창조물들은 언어 안에서만 창조되고 쓰여지며 그
 사유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존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동일성은 한 민족을 위해 전체
 정신세계의 공통성을 조건지워 주고 거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대신될 수 없는
 일정량의 정신적 친화성을 근거지워 주는 것이다.

나. 공동운명과 歷史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내적으로 서로 접근하게 된다. 전혀 각각의
 인생을 살던 두 사람이 인생의 나머지 부분에 서로 결합하기에는 동일한 큰 불행을
 겪거나 큰 기쁨을 함께 체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하나의 민족에 있어
 서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운명을 가지는 것은 동포들을 마음의 띠로 묶는데 영향을
 미친다. 공동의 운명을 가진다는 것은 공동의 경험을 가짐을 의미하고, 공동의 경험
 은 다시 같은 삶의 내용, 같은 인생의 觀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한 민족집단의 전
 체적 인생관이 어떠한 同類性을 나타내는 것은 그 집단의 성원들이 공동의 운명을

71) Ernst Meumann, 앞의 책, p. 44.

경험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運命共同體를 民族性의 형성을 위해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⁷²⁾ 여러가지 상이한 운명은 언어가 같고 종교가 같으며 혈통이 같은 민족들을 분리시킬 수도 있으나, 동일한 운명은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며 혈통이 다른 여러 민족들을 하나의 민족성으로 결속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여간 여기서부터 정신적 친화성이 성장하고 동일한 녀과 동일한 적응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성원들의 같은 맥박으로서 풍습, 언어, 신화, 종교, 예술 등 한 민족의 모든 생의 표현을 관류하게 되는 것이다.

다. 땅의 共同性

여기서 ‘땅’이라 함은 領土와 그것이 지니는 지리학적 기후학적 상태를 뜻한다. 우리가 사는 땅의 지리적 기후적 환경이 민족의 정신적 동일성과 정신적 친화성을 형성시키는 힘은 현저하고 지속적이다. 영국 민족이나 일본 민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통하고 있는 그 商魂이라든가 멀리 내다보는 준비성 같은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섬나라라는 지리적 환경의 산물이다. 광대한 중국땅은 그 민족의 悠長성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사는 땅의 기후적 상태는 민족의 성격에 더 깊은 영향을 준다. 스칸디나비아 민족들의 시와 음악에서 볼 수 있는 환상, 진지성, 우울성은 북구 스칸디나비아 기후의 산물이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남구 민족들의 분방한 쾌활성은 밝은 태양과 명활한 기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그리그(Edvard Grieg)의 음악이나 입센(Henrik Ibsen)의 「바다의 부인」과 한편 나폴리의 민요나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의 「데카메론」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땅의 동일성이 精神的 心情的 同一性의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민족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이제 민중예술 특히 民謠와 音樂 등에서 항구적인 형태의 刻印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지리적 기후적 환경에서 동일한 문화적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신적 친화성이

72) 특히 오토 바우어는 민족이란 운명공동체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민족을 “운명공동체로부터 성장하는 성격공동체”로서 정의하고 있다. Otto Bauer, *Die Nationalitätenfrage und die Sozialdemokratie*(Wien : Wiener Volksbuchhandlung, 1924), p. 24 및 p. 113 참조.

형성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민족의 정신적 동일성과 친화성은 민족성원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한 민족의 지도적인 인물들의 모든 정신적 창조물들은 자기자신의 민족 안에서처럼 만큼 깊고 일반적인 이해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다.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를 우리는 예술가가 그의 ‘고객들’ - 구체적으로 그의 찬미자와 그에 대한 이해력이 풍부한 청중, 관객 또는 독자 - 과 맺는 관계에서 볼 수 있다. 미미한 예외는 있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기자신의 민족에 속하며, 예술가가 창작을 할 때는 그의 청중이나 관객 또는 독자로서 무의식적으로 그의 동포들을 고려하게 된다. 한국의 시인이 詩作을 하면서 일본사람이나 미국사람을 독자로 눈 앞에 떠올리는 이는 없으며, 그의 전 창작은 그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독자와 한국의 정신적 향토적 양식을 겨냥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그는 또한 완전한 이해를 희망할 수 있다.

예술가 - 학문의 경우에도 국문학이나 윤리학 등의 분야는 사정이 비슷할 것이지만 - 에게 있어서 그의 고향은 그가 가장 충분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장소이다. 외국 예술가들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의 교양인들 뿐이고 대부분의 민족대중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모이만은 말한다. “예술은 세계주의적 원리를 직접 내동댕이 친다. 모든 진정한 예술은 민족예술이다. 그 예술가의 민족적, 심지어 지방적 색채가 강하고 높을수록, 그 예술가가 토착성을 더 지닐수록 우리는 그를 더 높이 평가한다. 지방적 특성과 민족적 특성을 모두 상실한 예술이 있다면, 그것은 無色 無性格의 지루한 예술일 것이고 그런 예술은 정작 국제적 갈채도 받지 못할 것이다.”⁷³⁾

예술가와 고향 사이에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양자에게 실제로 정신적 동일성과 정신적 친화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민족의식」의 세 가지 관련의식과 세 차원의 이념내용을 살펴보았다. 「故郷意識」과 「祖國愛」, 그리고 「歷史意識」이 민족의식에 연관되는 의식으로서 먼저 검토되었고, 민족의 「自我意識」, 「連帶意識」, 그리고 「精神的 親和性」이라

73) Ernst Meumann, 앞의 책, p. 50.

는 세 이념권의 성분들이 또한 탐색되었다. 민족의 「자아의식」은 다시 민족집단의 「자기보존의식」, 「고유성 및 고유가치의식」, 「자립의식」으로 분석되었고, 「연대의식」은 그 道德性에 있어 부각이 되었으며 민족성원의 「정신적 친화성」은 그 사실적 기초로서 언어의 동일성, 공동 운명과 역사, 땅의 공동성이 고찰되었다.

민족의식이 내포하는 바 이와 같은 짜임새를 개관해 볼 때, 그것은 대단히 풍부한 내용을 지닌 理念世界인 동시에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나 諸民族의 삶을 위해서 뜻이 깊은 정신적 힘이요, 도덕적 생명력이 되어주는 것임이 인정된다.

무릇 하나의 민족집단은 「민족의식」 가운데서 비로소 내적으로 화합하고, 그 속에서 비로소 정치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성원들은 그 속에서 自己價値를 보다 확실하게 자각하게 되고, 거기서 삶의 의미의 한 중요한 원천을 찾을 수도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韓半島 周邊 4強의 利害와 政策展望

徐 鎮 英(高麗大 教授)

目 次

| | |
|----------------------------------|-----|
| I. 序言 | 169 |
| II. 冷戰의 終息과 新國際秩序의 등장 | 171 |
| 1. 冷戰秩序는 무엇인가 | 171 |
| 2. 신국제질서의 特徵은 무엇인가 | 174 |
| 3. 신국제질서의 不確定性和 不安要因은 무엇인가 | 179 |
| 4. 탈냉전시대의 “機會와 危險” | 182 |
| III. 탈냉전시대와 4大 強大國의 한반도 정책 | 187 |
| 1. 동북아시아의 포스트 냉전시대 | 187 |
| 2. 냉전 이후 美國의 世界戰略과 한반도 정책 | 195 |
| 3. 不確定時代의 日本 外交政策과 한반도 정책 | 203 |
| 4. 탈냉전시대의 中國의 對外政策과 한반도 정책 | 210 |
| 5. 러시아공화국의 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정책 | 216 |
| IV. 탈냉전시대의 한국의 對應戰略 | 225 |
| 1. 두 가지 목표 : 安保와 統一 | 226 |
| 2. 北方政策과 南方政策의 再檢討 | 229 |
| 3. 아시아 集團安保體制의 構想 | 232 |
| 4. 平和的 統一을 위한 條件 | 233 |

I. 序 言

지난 수년 사이에 우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大變革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小平과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개혁운동은 1989년에 東歐 社會主義의 몰락과 東西獨의 통일을, 그리고 1991년에는 마침내 蘇聯邦의 해체라는 世紀的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란 두개의 超強大國間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군사적 對決構造를 기초로 형성되었던 냉전질서가 붕괴되고, 이른바 新世界秩序를 모색하는 전환기에 들어서게 하였다.

비록 포스트 냉전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이 있지만, 냉전시대에 國家間의 關係를 규정하던 理念的 對立構造와 政治-軍事的인 同盟體制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再調整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 共同體(EC)를 중심으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유럽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韓-蘇關係와 韓-中關係의 正常化로 극명하게 표출된 바와 같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國家間의 關係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이 理念과 體制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國家利益을 바탕으로 새롭게 국가간의 關係가 재정립되고 있는 탈냉전시대는 우리에게 “機會와 危險”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냉전시대에 형성되던 4大 強大國間의 지역적 대결과 南北韓의 대립 상태가 新國際秩序의 등장과 더불어 弛緩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냉전시대는 우리에게 機會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냉전시대에 형성되었던 안정적인 대결구조가 해체되면서 南北韓 關係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4대 강대국들의 정책과 이해관계에 不確定性의 요인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새로운 地域的 갈등과 남북한의 대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냉전시대에 내포된 위험성을 看過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危險을 억제하고 탈냉전시대가 주는 機會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

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1) 세계적인 차원에서 新國際秩序의 성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2) 한반도 문제에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4대 강대국의 世界戰略, 아시아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들의 利害와 政策이 탈냉전시대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3) 統一과 安保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選擇의 범위와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것이 본 論文의 目的이라고 하겠다.

II. 冷戰의 종식과 新國際秩序의 등장

이제 冷戰의 終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아직도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는 냉전질서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포스트 냉전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新國際秩序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신국제질서는 과거의 냉전시대의 세계질서와 어떤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신국제질서가 안고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冷戰秩序의 特徵과 그 崩壞 原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冷戰秩序는 무엇인가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全世界的인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理想的, 體制的 경쟁과 대결이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兩大陣營으로 兩極化되면서 이른바 냉전질서가 형성,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같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兩大陣營論에 입각한 냉전질서는 전통적인 국제질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¹⁾

첫째, 냉전질서의 특징중의 하나는 국가간의 관계가 理念과 體制的 문제에 의하여 裁斷됨으로써, 국제질서가 극도로 硬直化되었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양대진영론적 思考가 지배하던 냉전시대에서 국가간의 대립은 傳統的인 國家利益의 갈등이란 차원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普遍的인 이념과 체제의 대립과 경쟁의 차원에서 인식되었고, 그것은 善과 惡, 正義와 不義의 대결로 인식되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과 사회주의진영은 타도해야 할 “惡의 帝國”이었으며, 소련의 입장에서 보

1) 전후 냉전사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太田勝洪, 袖井林二郎, 山本滿, 編, 『冷戰史 資料選 : 東アジアを中心として』(日本評論社, 1982)을 참조할 것.

있을 때, 미국과 자본주의진영은 歷史의 進步를 가로막고 있는 “反動勢力”이었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이러한 상호 敵對的인 이념과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경직화되었고, 軍事化되었다.

둘째,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지배하는 냉전질서에서 개별국가의 독자성과 국가이익은 陣營內部的 단결과 共同安保라는 차원에서 억제되거나 왜곡되었고, 미국과 소련의 霸權的 지배를 확립시켰다. 사실, 미국과 소련은 각종 동맹체제를 구축하면서 세계를 양분하고, 진영내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동맹국의 內政에 간섭을 하였으며 개별국가들의 국가이익 추구를 억제하였다. 물론, 이러한 兩大 霸權國家들의 위계적 지배질서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中-蘇紛爭이나 미국의 리더쉽에 대한 불란서의 비판, 그리고 非同盟運動과 같이 양극체제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냉전질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은 확고한 패권적 지배를 구사할 수 있었고, 동맹국가들은 이같은 霸權的 秩序에서 順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냉전질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들의 국내정치의 歪曲된 발전을 초래하였다. 냉전적 對決狀況은 미국과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에 있어서도 軍事-安保的인 이해가 우선시됨으로써 국내정치의 다양한 요구가 억압되거나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南北韓과 같이 冷戰의 前哨地에 위치한 국가들에서는 安保國家를 지향하는 權威主義 獨裁體制가 등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냉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理想을 모두 歪曲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냉전시대의 양대진영론적 대결상황에서 미국과 소련과 같은 超強大國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에 干與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局地的 분쟁과 갈등은 항상 국제적인 美蘇間의 대결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동시에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와 타협의 기초위에서 가급적 국지적, 지역적 분쟁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함으로써 비교적 장기간의 消極的 平和時代가 지속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념과 체제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種族的 분쟁이나 지역적인 갈등은 양대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적 지배에 의하여 억제되었고, 또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성립된 이른바 “恐怖의 均衡”(Balance of

Terror)은 역설적으로 장기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²⁾

이처럼 지난 40여년동안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던 냉전질서는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개별국가들의 국가이익을 억압하였고, 미국이나 소련을 포함하여 냉전체제에 陷沒된 거의 모든 나라들의 자연스러운 發展을 歪曲하였다. 특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에서 냉전적 상황은 스탈린주의적 全體主義 體制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理想을 극도로 왜곡하게 되어 마침내 사회주의체제의 自滅을 초래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소련과 東歐의 몰락이 곧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립과 경쟁에서 “社會主義의 大失敗”를 증명한 것이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歷史의 終焉”을 예언하기도 하였다.³⁾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의 실패로 말미암아 더 이상 汎世界的인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문명의 代案이 없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명실공히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체제로 定着됨으로써, 탈냉전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분쟁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社會主義의 大失敗”와 “歷史의 終焉”論에 대한 反論도 없는 것은 아니다. “현존 사회주의”의 실패가 곧 사회주의 이념의 실패라고 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批判과 代案으로서 맑시즘의 生命力은 계속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⁴⁾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운동의 旗手이면서 공산정권이 붕괴된 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에 취임한 하벨(Vaclav Havel)은 冷戰의 終焉은 후쿠야마가 주장하는 것처럼 “歷史의 終焉”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理性和 合理性의 지배가 관철되었던 “近代의 終焉(the End of the Modern Era)”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탈냉전시대는 자본주의와

2) 냉전시대의 평화에 대해서는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3)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Zbigniew Brezezinski, *The Grand Failure :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Macmillan, 1989) :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 Free Press, 1992) 참조

4)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Michael Burawoy, “Marxism as Science : Historical Challenge and Theoretical Grow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 6(December 1990), pp. 775-793을 참조.

사회주의를 넘어서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예고한다고 주장하였다.⁵⁾ 그러나 또 다른 角度로 일부에서는 냉전질서의 종언과 더불어 개막된 탈냉전시대는 단순히 자본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의 패배란 차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근대 이후 지속된 歷史的 變革의 결과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사카모토(Yoshikazu Sakamoto)와 같은 학자들은 냉전질서의 붕괴를 초래한 배경에는 “民族國家의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of the States), “民族主義의 普遍化”(Universalization of Nationalism), “民主主義의 世界化”(Globalization of Democracies)와 같은 역사적 변화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탈냉전시대에는 국제적 협력과 민주적 질서가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⁶⁾

2. 新國際秩序의 特徵은 무엇인가

이와같이 냉전 종식의 원인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脫冷戰時代에 등장하는 新國際秩序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냉전질서와 근본적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탈냉전시대에 국가간의 관계와 국내정치에 있어서 理念과 體制의 문제가 더 이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일부 지역과 일부 사회에서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남아 있지만, 대체로 국제관계와 국내정치는 脫理念의 時代的 潮流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보편적인 이념과 체제문제의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개별국가와 個別地域들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익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理念的 連帶感보다는 국가이익이 중시됨으로써,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는 典型的인 “利益政治”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념과 체제의 對決과 競爭이 終熄되면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는 모두 軍事, 安保 등의 문제가 강조되었던 “權力政治”(High Politics)보다 개인과 집단

5) Vaclav Havel, “The End of the Modern Era,” *The New York Times* (March 1, 1992)

6) Yoshikazu Sakamoto, “Korea and Regional Peace,” a paper presen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nditions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held in March 1992 by the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를 참조.

들의 개별적인 삶의 문제와 직결된 “利益의 政治”(Low Politics)를 重視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냉전시대에 군사-안보협력체제의 틀안에서 간과되었던 개별국가와 개별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같은 實用主義的인 價値와 이익의 추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국내정치 영역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이익, 특히, 경제생활의 개선과 같은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간의 實利的인 바탕에서 經濟協力과 競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다.⁷⁾

둘째, 이와같이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는 이념과 체제의 문제보다 실용적인 국가이익이 강조되면서 미국과 소련이란 超強大國의 霸權的 支配體制에도 構造的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소련방의 붕괴로 말미암아 미국과 소련이란 두 개의 軸으로 형성되었던 兩極體制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체제의 붕괴 이후 탈냉전시대에 전개되는 세력관계의 구조적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 일부에서는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미국만이 유일한 범세계적인 패권국가로 남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정책을 警戒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쇠퇴와 더불어 점차로 탈냉전시대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 유럽공동체 등이 중심이 되는 多極體制에로 전환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사실, 軍事的인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만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唯一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政治的,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직은 월등하게 優勢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나이(Joseph S. Nye, Jr)교수는 미국의 쇠퇴론을 否認하고 있다.⁸⁾

7) High Politics에서 Low Politics에로의 변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에 대해서는 Robert Koehane and Joseph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7) 참조

8)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참조

그러나 經濟的인 차원에서 미국의 獨占的인 지위는 이미 일본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공동체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고 하겠다.⁹⁾ 더구나 미국은 慢性的인 財政赤字와 景氣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下降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공동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최소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 위치는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1989년의 통계에 의하면, 全世界의 GNP 20조 달러 중에서 미국이 5조 달러, 유럽공동체가 5조달러, 일본이 3조 달러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각각 25%, 25%, 15%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이와같은 통계는 미국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럽공동체와 일본의 협력을 받지 않고서는 世界經濟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한계는 걸프전쟁에서도 이미 나타났다고 하겠다. 다시말해 걸프전쟁도 미국이 서방국가와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이란 推論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앞으로 점점 미국의 패권적 지배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냉전에서의 敗者는 소련이 분명하지만, 미국도 승리자는 아니라는 아르바토프(Georgi A. Arbatov)의 평가는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아르바토프에 의하면, 미국과 소련은 강대국간의 전쟁이 누가 승리하든 그것은 곧 집단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로 됨으로써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시대에 군사적인 우세를 획득하기 위한 덧없는 경쟁에 몰두, 그들의 자원을 낭비하고 出血을 계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두가 냉전에서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의 勝者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독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군사비에 대한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위치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다.¹¹⁾ 이와같은 관점에서 미국학자들도 냉전 이후 新世界秩序에서

9)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Jerrrey T. Bergner, *The New Superpower : Germany, Japan, the U. S., and the New World Order*(New York : St.Martin's Press, 1991)을 참조할 것.

10) 한승주, "새로운 국제질서와 남북한 관계," 『중소연구』 15 : 2(1991년 여름), p.90

11) Georgi A. Arbatov, "Russian - American Relations and North - Pacific Region,"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held in October 29 - 30, 1992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일본과 독일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¹²⁾

이와같이 탈냉전시대는 미국과 소련의 兩極體制가 사실상 終幕을 고쳤고, 또한 미국의 패권적 위치도 미국의 경제적 쇠퇴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새로운 경제강국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공동체와 같은 強大國들의 多極體制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다극체제는 과거 유럽의 강대국간의 勢力均衡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서로 비슷한 力量을 가지는 강대국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多極體制라기 보다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아직도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잠재적인 軍事力量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러시아, 그리고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뒤떨어져 있지만, 점차로 經濟大國에서 政治大國으로 발전하려는 일본과 유럽공동체들로 구성된 “非對稱的 多極體制(Skewed Multipolarity)”라고 할 수 있다.¹³⁾

셋째, 미국과 소련의 霸權的 支配를 보장했던 兩極體制의 解體와 더불어 냉전시대에 형성되었던 동맹관계의 質的 變化도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이미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과거의 동맹체제는 사실상 모두 근본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정치적 統合이 진행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나토(NATO)와 같은 동맹체제의 기능은 사실상 終熄되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가 비교적 기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도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국들은 서서히 과거의 동맹체제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동맹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주목되는 현상은 同盟體制의 性格 變化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냉전시대의 동맹체제가 미국이나 소련의 패권적 역할을 담보하였고, 따라서 초강대국과 동맹국의 관계가 일종의 위계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12)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James R. Kurth, “Things to Come : The Shape of the New World Order,” *The National Interest*, No.24(Summer 1991), pp.3-12 참조

13) 비대칭적 다극체제 (Skewed Multipolarity)의 개념에 대해서는 Richard Ellings and Edward A. Olsen, “Asia’s Challenge to American Security,” *Analysis*, 3:2(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 June 1992), 8-10 참조

있었다면,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軍事的, 安保的 문제가 덜 중요시되면서 이러한 位階的인 秩序가 보다 平等한 關係로 변화되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동맹관계의 성격도 再調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탈냉전시대의 특징중의 하나는 냉전시대의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제문제와 같은 개별국가의 實利的 利益이 강조되면서 세계경제의 불럭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탈냉전시대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世界經濟의 國際化가 한편에서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개별국가와 지역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新重商主義的 思考에 기초한 세계경제의 불럭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이미 유럽공동체는 지난 1991년에 체결된 유럽 경제 지역협약에 입각하여 약 3억 8천만의 인구와 19개국을 단일시장권으로 엮어 내는 작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유럽공동체는 세계경제에서 주요한 경제블럭으로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는 약 5억인구의 시장을 포괄하는 北美自由貿易地帶 (NAFTA)가 결성되었다. 아시아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 (APEC)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적 경제협력체가 모색되고 있다. 이외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의 南美共同市場,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지대 설치, 케냐, 탄자니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東아프리카 공동시장, 그리고 세네갈과 가나 등의 西아프리카 공동시장 등 다양한 地域經濟 共同體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탈냉전시대에는 이념과 체제의 連帶感에 기초한 전통적인 동맹체제가 弛緩되고, 그 대신 지역적, 경제적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새로운 經濟的 紐帶關係가 형성됨으로써 國際社會의 多元化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경제의 불럭화와 지역간의 경제적 갈등과 대립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스칼라피노는 탈냉전시대에서 ‘歷史의 終焉’과 함께 다른 어느 때 보다 경제의 중요성이 이렇게 지배적이었던 시기는 없었다고 보았다.

14) 예를 들어 특히 미국의 경우에 라이히는 新重商主義的 思考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경제적 민족주의’(positive economic nationalism)를 제창하며 21세기를 향한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 : Preparing Ourselves for 21st-Century Capitalism* (New York : Alfred A. Knopf, 1991)를 참조.

오늘날 경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다. 과거에도 경제가 중요했지만 현재와 같이 지배적이었던 시대는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던 시기에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의 기본 구조를 재건하는 작업에 주력하던가 아니면 식민통치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 전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보다는 정치가 더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말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 이외의 분야에 정력을 쏟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제2세대 또는 제3세대 지도자들은 경제발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역할을 동시에 병행시키면서 이념적이라기 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¹⁵⁾

끝으로, 탈냉전시대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地域的 분쟁이 강대국간의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地域紛爭의 局地化가 실현되었으며,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적 분쟁도 강대국의 개입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국제연합과 같은 國際機構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紛爭의 解決過程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어느 한 강대국의 霸權的 支配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탈냉전시대의 시대적 분위기,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여 어느 강대국도 壓倒的인 힘의 우위를 과시할 수 없는 多元的 秩序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新國際秩序에서 모든 분쟁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기본적인 질서유지에 강대국간의 合意가 지속되는 한, 국제기구를 통한 紛爭의 平和的 해결이란 방식은 앞으로 더욱 확산 적용될 것이다.

3. 신국제질서의 不確定性과 不安要因은 무엇인가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冷戰의 終熄과 더불어 국제관계에서 이념과 체제의 대립에서 파생되는 군사적, 안보적 緊迫感이 사라지고, 硬直된 군사-안보 동맹체제가 이완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개별 국가의 實利的 利益을 모색하는 다양한 경제관계가 발전됨으로써, 新國際秩序은 과거의 冷戰秩序에 비하여 多元化, 自律化, 그리고 開放化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로버트 스칼라피노, “한국과 미국, 파트너 관계를 향하여,” 『사상』(1991년 봄), p.146.

다시말해서, 국제질서에 참여하는 行爲主體들의 多元化, 그들의 自律性和 獨自性의 증대, 그리고 개방적이고 可變的인 相互關係가 발전함으로써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는 냉전시대보다 더 활기있고, 더 자유롭고, 그리고 더 많은 평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국제질서에 葛藤과 紛爭, 그리고 不安定性的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국제질서는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流動的이며, 不確定性的의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다.¹⁷⁾

냉전시대의 국가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霸權的 支配를 바탕으로 형성된 兩大陣營論에 입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敵과 同志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신국제질서에서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그와 같이 敵과 同志의 구분을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고, 개별국가들이 실리적 이익에 입각하여 다양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자율적 행동의 범주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제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유동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그만큼 不確實性이 높아졌다는 것이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는 마치 포스트 냉전체제가 그 이전의 냉전체제에 비하여 훨씬 더 미래를 확실하게 예견될 수 있다는 실수를 범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에서 작성된 『미국의 國家安保戰略』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경계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포스트 냉전 시대에서, 국제 관계의 전망은 보다 복잡화되고, 보다 변덕스럽고(volatile), 또한 예측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시대의 안보적 도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갑자기 미래는 확실하게 예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점이다. 20세기의 역사는 놀라움과 수많은 불청객으로 점철되어 왔었다.¹⁹⁾

-
- 16) 신국제질서를 안정적인 체제로 예상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Stephen Van Evera, "Primed for Peace :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 3(Winter 1990/91) 참조
- 17) 탈냉전체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도전이 냉전시대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다는 인식 하에 脫冷戰 이라는 개념 대신에 新冷戰이라는 용어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 18)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등장한 신국제질서를 불안정한 체제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John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1, (Summer 1990) 참조
- 1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August 1991), p.2.

구체적으로, 新國際秩序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不確實性和 不安定性的 要因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脫冷戰時代에 들어와 모든 국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安保 中心主義에서 脫皮하여 실리적인 국가이익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안보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同盟關係와 友好關係는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형성되었던 安保中心의 동맹관계와 우호관계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사실상 解體되거나 무의미하게 되었고, 한국, 미국, 일본사이의 동맹관계와 友好關係도 새롭게 제기되는 경제적, 정치적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재조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존의 安保關係의 변화는 남북한과 같이 아직도 냉전적 대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불안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스칼라피노가 지적한 바대로, 냉전시대에서는 안보에 대한 국제적 위협과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주로 강대국들에 있었으나, 탈냉전 시대에서는 점점 더 소규모의 국가들도 연루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논리와 연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둘째, 이미 유고슬라비아 사태에서 극명하게 표출된 것처럼 냉전시대에 억제되었던 種族的, 민족적, 지역적 갈등과 분쟁이 탈냉전시대의 다원화, 자율화, 개방화과정에서 폭발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시대에 등장하는 이같은 集團利己主義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이같은 갈등과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탈냉전시대에 개별국가의 독자성이 증대되고 강대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地域的인 霸權主義를 지향하는 세력들에 의한 분쟁의 촉발 가능성이 증가된 것도 역시 탈냉전시대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탈냉전시대는 한편으로는 국제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自國이기주의와 集團이기주의가 강조되는 모순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증가되고 있는데, 개별국가들의 新重商主義정책과 앞에서 지적한 경제적 블록화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신국제질서의 불

20) 로버트 스칼라피노, “東아시아의 새로운 시대와 美國,” 『중소연구』 15 : 2 (1991년 여름), p.26.

안정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넷째, 탈냉전시대의 다원화, 자율화, 개방화의 경향은 개별국가의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實用主義的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權威主義國家는 기본적으로 불안정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중국과 같이 대담한 經濟改革과 開放化를 추진하면서도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를 견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개방적인 경제와 權威主義的인 政治體制 사이에 파생되는 갈등과 마찰이 정치적 불안정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들이 탈냉전시대의 多元化, 自律化, 開放化의 압력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신국제질서의 地域的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칼라피노는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변혁 속에서 불가피하게 외부 세계의 변화의 진폭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혁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개방된 경제와 閉鎖된 政治體制가 오랫동안 공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경제개발에 필요한 實用主義的 태도는 결국 강경한 권위주의 국가의 낡은 이데올로기적 기반들을 약화시키고 만다. 더욱이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情報 通信革命 때문에 어떤 사회이건 인민들을 외부의 중대한 변화들로부터 오랫동안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自國의 시민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결국 외부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생각들은 점차 스며들 수 밖에 없다. 모든 사회가 결국 점점 더 외부로부터 정보가 스며들기 쉽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²¹⁾

게다가 러시아와 같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탈사회주의과정의 진통에 대한 逆作用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국제질서의 미래는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고 하겠다.

4. 탈냉전시대의 “機會와 위험”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991년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서문에서

21) 로버트 스칼라피노, “한국과 미국, 파트너 관계를 향하여,” pp.147-48.

“신국제질서는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소망이며, 기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부시 대통령에 의하면 “(미국은) 과거의 세대가 향유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가능성, 즉 낡은 고정관념과 패턴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가치와 이상에 따라서 새로운 국제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탈냉전시대는 미국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낡은 질서는 붕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신국제질서의 앞날에는 많은 장애와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위협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²²⁾

‘기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美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미국은 新國際秩序에서 적어도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외부적 위협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舊蘇聯과 같이 거대한 적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분간 이러한 도전 세력이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서 그렇다. 물론 러시아가 가능성은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금의 러시아는 그럴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만약 러시아의 국내사정이 급격히 변화하여 독재국가로 전락하여 패권국가로 나아가더라도 과거 소련이 누렸던 것과 같은 核國家의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신국제질서의 체제의 ‘위험’은 제3세계 국가들의 갈등을 냉전시 보다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냉전체제는 양극체제로서 미국과 소련이 적어도 자기 진영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물론 지역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제체제 수준의 안정성이 확고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이 체제수준까지 飛火될 염려는 없었다.

그러나 脫冷戰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체제의 위협은 줄어들었으나 반대로 舊蘇聯의 통제와 조정에서 벗어난 일부 제3세계의 일탈 행동은 지역 안정성은 물론이고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갈등의 경우는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이것이 核과 연관된 것이라면 문제는 크게 달라진다. 물론 이것은 제3세계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미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니다. 제3세계의 핵 보유가 그 지

2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August 1991), p.v.

역의 세력균형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국이 이것을 통제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더욱이 脫冷戰에서 미국은 냉전시처럼 상대방의 보스(즉, 舊蘇聯)를 통해 압력을 넣을 수도 없게 되었다.

둘째, 냉전 붕괴가 미국의 안보정책에 가져다준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미국의 국제체제 유지비용이 대단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핵전쟁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므로 기존의 전술 및 전략핵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핵무기에 비하면 아무리 고도의 첨단무기라 해도 재래식 무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에서의 핵 확산은 다시 또 다른 핵 군비 증장으로 유도할 것이다.²³⁾

그러나 탈냉전시대는 미국에게만 기회와 위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기회이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질서의 종식은 이념과 체제의 문제에서 파생된 兩大陣營論의 대결과 대립의 시대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군사-안보 중심의 권력정치의 시대에서 개별 국가들의 실리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利益政治의 시대로, 그리고 억압적이고 劃一的인 질서보다는 다원화, 개방화, 자율화가 강조되는 민주적인 질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의 사례는 한반도의 안정에 새로운 의외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더욱 높혀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한국과 함께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는 미국방부의 폴 월포워츠 국제안보담당차관이 1991년 7월 5일 워싱턴의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기자 회견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核開發을 우려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核武裝은 核擴散을 하게 함으로써 세계 안보에 위협을 준다. 둘째,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동 등 여러 나라에 핵무기 또는 제조 기술을 수출할 것이며, 셋째,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 및 일본의 핵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23) 현인택, “新國際秩序에서의 美國의 東아시아 政策과 韓半島,” 『통일문제연구』 4 : 2(1992년 여름), pp.161-62.

만약 북한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核保有를 하게 된다면 동북아에서의 핵확산은 급속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미국은 두려워하고 있다. 우선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는 한국은 미국과 IAEA 의 監視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보유에 全力을 다할 것이 분명하며, 日本 또한 核武裝을 서두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핵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 일본 등의 핵개발을 반대함으로써 核擴散을 禁止하는 것이다.²⁴⁾

이와 동시에 탈냉전시대는 개별국가와 개인들의 지나친 자기중심주의와 이익정치로 말미암아 종족적, 민족적, 지역적 갈등과 분쟁에 다시 함몰될 수 있는 위험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탈냉전시대의 “기회와 위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바로 한반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갈등으로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였고, 지난 40여년동안 냉전의 前哨基地로서 가장 첨예한 이념적, 체제적 대립과 불신을 지속해 왔던 한반도에서 탈냉전시대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실현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분단을 강요했던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 기초한 냉전질서는 이미 붕괴되었고, 세계와 지역적 정세는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탈냉전시대로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들도 과거와 같이 相互 敵對的인 관계를 청산하고, 實利的인 국가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의 和解와 協力, 그리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外的 條件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시말해서 탈냉전시대의 多元化, 自律化, 開放化의 경향은 남북한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탈냉전시대는 남북한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에게 탈냉전시대는 심각한 體制的 威脅이 되고 있으며, 남한에게도 탈냉전시대에 고조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自國利己主義에서 비롯되는 압력은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24) 곽태환, “韓半島 非核化 問題와 展望,” 『통일문제연구』 4 : 1 (1992년 봄), pp.172-73.

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제관계는 二重 현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주요 強國간의 점증되는 테탕트와 함께 완강한(diehard)냉전의 잔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²⁵⁾

25) Kyung Suh Park, "Evolving U.S. Asian-Pacific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U.S. -Korean Relations," *Korea and World Affairs*, 15 : 3(Fall 1991), p.459.

Ⅲ. 脫冷戰時代와 4大 強大國의 한반도 정책

冷戰의 종식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地殼變動을 초래하고 있다. 韓-蘇修交와 韓-中修交를 통하여 극적으로 표출된 것 처럼, 냉전시대에 형성되었던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급격한 변화와 개편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동북아시아 냉전질서의 한 축을 형성했던 소련-중국-북한의 이른바 北方 3角關係의 瓦解는 한반도 주변의 4강의 세력관계와 對한반도에 대한 정책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남북한의 共存과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탈냉전시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機會와 危險”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고, 한반도 주변의 4대 강대국들의 정책변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 동북아시아의 포스트 냉전시대

동북아시아의 냉전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兩大陣營論的 대결과, 중국과 소련의 대립,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한국-미국-일본의 南方 3角關係와 북한-소련-중국의 北方 3角關係의 대립구도라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동북아시아의 냉전질서는 1980년대이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첫째, 소련과 중국의 대담한 개혁.개방정책은 이 지역의 安保環境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이른바 新思考 외교를 전개하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결과 경쟁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1989년에는 중국과의 國交正常化를 실현하였고, 중국도 역시 鄧小平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國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4대 강대국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國家利益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개혁정책은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이나 중국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요인을 상당한 정도로 제거함으로써, 다른 강대국들의 정책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겠다. 비록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소련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서, 그리고 탈냉전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불안요인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냉전시대의 군사-안보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탈냉전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미국과 일본도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再檢討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련과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전환은 韓-蘇修交와 韓-中修交를 실현시킴으로써 냉전시대에 형성되었던 북방 3각관계를 와해시켰고, 이같은 변화는 한국-미국-일본의 남방 3각관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셋째, 탈냉전시대에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변화는 다각적인 경제적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뛰어 넘어 다양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自國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지역내의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각종 형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실현됨으로써, 이 지역의 국제관계도 다원화, 복잡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다.(참고로 東北亞의 국가별 域內무역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사실,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일본과 미국과 같은 가장 선진적인 산업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 급성장 하고 있는 NIE국가들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기 있고,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²⁷⁾

26) 특히 韓中수교는 북방3각 관계(평양-북경-모스크바) 및 남방3각 관계(서울-워싱턴-동경)의 대결 구도를 청산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韓·中 수교 이후 외교정책 과제』(1992. 9) 참조.

27)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Park Yung-chul, "The Little Dragons and Structural Change in Pacific Asia," *The World Economy*, 12:2 (1989), pp. 125-161. 참조

<표-1>

東北亞 국가별 域內무역 현황

단위 : %

| 국가 | 국가별 총수출(수입)에서 역내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 | | | | |
|-----|---------------------------------|----------------|----------------|----------------|----------------|----------------|
|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 일 본 | 12.9 (9.4) | 11.3 (10.4) | 10.6 (12.1) | 10.7 (13.2) | 10.3 (13.0) | 9.2 (11.7) |
| 한 국 | 15.6 (24.5) | 17.1 (34.8) | 18.8 (34.1) | 21.6 (31.8) | 23.3 (29.8) | 21.9 (28.2) |
| 중 국 | 30.8 (33.9) | 25.2 (28.3) | 25.0 (24.4) | 27.4 (23.4) | 28.4 (20.0) | 23.0 (16.0) |
| 소 련 | 3.6 (4.8) | 4.6 (5.2) | 4.6 (4.3) | 5.7 (4.7) | 6.1 (4.8) | 6.6 (4.5) |
| 북 한 | 81.8 (82.7) | 81.0 (83.8) | 77.8 (84.8) | 85.5 (81.4) | 88.3 (82.1) | 83.7 (73.1) |

자료 : 鳥倉民生(編), 東北アジア 經濟圏の胎動 : 東西接近の 新フロンティア (アジア經濟研究所), pp.34-35.참고로 작성

넷째, 앞에서 언급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는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진 4대 강대국과 남북한의 立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소련의 몰락과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냉전시대에 이 지역에서 점유하고 있었던 소련의 霸權的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國家安保戰略』에서는 소련은 더 이상 과거처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적대국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40여년 동안, 미국의 주요 봉쇄 전략은 소련의 팽창주의적 힘, 소련의 공격성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의 시대를 반영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소련이 국내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훨씬 내부 지향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련이 어떤 진로를 택할 지를 알지 못하지만, 지난 40여년 이상 우리가 직면해 왔던 동일한 초강대국의 적대 관계는 있을 것 같지 않다.²⁸⁾

2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p.1.

특히, 이 지역에서 소련의 전통적인 영향력이 대체로 소련의 군사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군사-안보문제가 덜 중요시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그만큼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와 비교하면 대단히 제한적이고 쇠퇴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강대국가들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지역적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탈냉전시대에 경제대국인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하겠다.

다섯째, 탈냉전시대의 또 다른 변화중의 하나는 한국의 浮上和 북한의 쇠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 1970년대이후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활기있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이후 민주화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경제적, 도덕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도 북한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완고한 사회주의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²⁹⁾

마지막으로 탈냉전시대 東北亞의 특징은 앞에서 설명한 긴장완화와 平和共存 그리고 국가간 協力の 경향과 상반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즉 東北亞의 국가들, 특히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軍縮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군비증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관련 4개국의 絶對軍事費의 증가와 군사비가 GNP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다음의 <표-2>와 <표-3>은 동북아 4개국의 군비증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9) William Nester, "Japan and Two Koreas: Neomercantilism, Prosperity, and Dependence,"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2:3 (Autumn 1991), pp.455-56 참조. (필자는 강력한 南韓 주도하에 통합된 한반도는 일본에게 훨씬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표-2>

東北亞 4強과 南北韓 군사력 비교

| 내용 국가 | 병 력 수 (천명) | | | 군 사 비 (백만US\$) | | |
|----------|------------|---------|---------|-------------------|-------------------|-------------------|
| | 1985 | 1989 | 1991 | 1985 | 1989 | 1991 |
| 미 국 | 2,151.6 | 2,124.9 | 2,117.9 | 258,165 (6.5) | 260,024 (5.6) | 227,055 (5.1) |
| 소 련 | 5,300.0 | 4,258.0 | 3,988.0 | 241,500 (16.1) | 127,638 (14.2) | 91,631 (11.1) |
| 중 국 | 3,900.0 | 3,030.0 | 3,030.0 | 10,165 (3.6) | 10,617 (3.1) | 12,025 (3.2) |
| 일 본 | 243.0 | 247.0 | 246.0 | 13,151 (1.0) | 15,843 (1.0) | 16,464 (1.0) |
| 한 국 | 598.0 | 650.0 | 633.0 | 4,399 (5.1) | 6,363 (4.6) | 6,637 (3.8) |
| 북 한 | 838.0 | 1,040.0 | 1,132.0 | 4,156 (9.9) | 4,030 (8.6) | 5,328 (11.5) |

자료 : The Interantional Institute for Strstegic Studies(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1991-1992, 1992-1993을 참고로 작성

* 국방비는 1985년 가격과 환율에 의거한 것임.

* ()안은 국방비가 GDP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미국, 일본, 한국은 GDP에서의 비율이고, 소련, 중국, 북한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특히 <표-2>는 冷戰의 主役이었던 미국과 舊蘇聯은 1989년 이후 軍縮의 노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東北亞의 新國際秩序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행위자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절대적인 차원에서 군비의 증강을 도모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東歐 사회주의체제의 瓦解와 舊蘇聯의 체제변화에 직면하여, 체제유지

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병력의 증강은 물론 군사비의 절대적 증가와 더불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3>은 東北亞 國家群(일본,중국,한국,북한)이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 측면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주요한 군사적 행위자인 NATO와 세계전체의 현황을 토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냉전의 형성과 和解의 출발지였던 NATO의 군사비가 세계전체의 군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9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동북아에서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소련을 포함하면 그 비율이 감소하지만 소련을 제외하면 그 비율이 무려 1.8 %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는 冷戰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85년에 이 지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9 %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증가폭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러한 사실은 군사비 총액 규모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표-3>에서 알 수 있다.

결국 東北아시아 지역은 긴장완화와 국제적 협력이라는 세계적 추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東北亞지역은 소련을 제외한 4 個國의 군비가 국제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東北아시아는 軍備增強이라는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난 수년간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보다 평화와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동안 한국이 주장하였던 남북한간의 交叉承認과 平和共存, 그리고 점진적인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탈냉전시대는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회도 제공해 주지만, 동시에 탈냉전시대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요인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위협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不確實성과 不安要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산출하는 배경으로 유럽과 비교하여 이 지역의 복잡성과 異質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표-3>

NATO와 동아시아 군사력 비교

(단위 : 백만 US \$)

| 내 용 \ 연 도 | 1985 | 1989 | 1991 |
|--|----------|----------|----------|
| 세 계 전 체 | 770,545 | 610,339 | 581,894 |
| NATO / 세계 전체 (%) | 46.46 | 57.25 | 54.53 |
| 동아시아 / 세계전체 (%) (蘇, 中, 日, 韓國, 北韓) | 35.53 | 26.07 | 22.65 |
| 동아시아 / 세계전체 (%) (中, 日, 韓國, 北韓) | 4.19 | 5.16 | 6.90 |
| 세 계 평 균 군 사 비 (130국) | 5,927.27 | 5,757.92 | 5,438.26 |
| NATO 평 균 군 사 비 | 23,864.4 | 23,293.2 | 21,155.1 |
| 동 아 시 아 평 균 군 사 비 (蘇, 中, 日, 韓國, 北韓) | 54,764.2 | 31,821.0 | 26,361.4 |
| 동 아 시 아 평 균 군 사 비 (中, 日, 韓國, 北韓) | 8,080.3 | 7,866.8 | 10,044.0 |

자료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stegic Studies(IIS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1992-1993 을 참고로 작성.

동북아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異質的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지역에는 정치적으로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社會主義體制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自由民主主義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북한과 같이 計劃經濟를 고집하는 국가에서부터 국가주도의 混合經濟體制를 견지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市場經濟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共存하고 있고, 이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도 대단히 심하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1인당 GNP가 350불 정도인 중국이 있

는가 하면, 2만불이 넘는 일본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異質性은 이 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배경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탈냉전시대와 더불어 이 지역의 안보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적 갈등과 분쟁요인이 남아 있다. 즉, 한반도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과 소련간의 “北方領土問題,”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문제등 지역적 협력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잠복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지역적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國際的 協力機構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히 지적하듯이 이 지역에서 국가간의 정치-안보관계는 대체로 쌍무관계에 입각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역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변적인 안보 및 정치협력기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지역내의 주요 국가들, 이를테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의 국내정치적 불안정이 地域的 安定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돌발적 행동이나 對應은 남북한 관계를 다시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넷째, 냉전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신국제질서에서 4대 강대국의 對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기존의 안보-정치관계의 再調整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과연 이같은 변화와 개편의 방향이 무엇인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점이 이 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탈냉전시대에 미국과 일본의 役割 分擔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가는 이 지역의 세력관계를 어떻게 變貌시킬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³¹⁾ 이와같은 세력관계의 재편과정에서 自國利

30) 이러한 사례는 북한이 자체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선택하는 의외의 사태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핵개발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Koji Kakizawa,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4:1 (Summer 1992), pp.57-65.

31) 이노구치 타카시(貌口孝), “불확실성 시대의 일본의 외교정책,” 『사상』 (1992년 여름), pp.175-200 참조. 필자는 미-일 관계가 갈등의 소지가 많지만 미-일의 동맹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펴고 있다.

己主義를 추구하는 4대 강대국간의 경쟁과 마찰이 다시 再燃될 수 있고, 또한 地域的 霸權을 추구하려는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과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탈냉전시대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4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냉전이후 미국의 世界戰略과 한반도 정책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한국정치의 성격과 방향등을 모두 미국의 세계전략의 연장선에서 설명하려고 한다.³²⁾ 물론 이같은 시각은 지역적 個別性和 獨自性を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변수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냉전시대에도 그러 했지만, 탈냉전시대에도 미국의 세계전략은 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 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하여 미국내에서는 孤立主義와 國際主義 路線間의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미국의 국내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한다는 고립주의노선에 대하여 미국과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제주의노선간의 논쟁은 소련의 몰락과 냉전의 종식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하여 再燃되고 있다고 하겠다.³³⁾

즉,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부케난(Pat Buchanan)과 같은 우파인사들은 사회

32) 이와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Bruce Cumings,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참조

33) 미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韓昇洲, “美國의 對 東北亞 戰略과 우리의 安保,” 韓國 戰略問題研究所, 『新 國際秩序와 周邊 列強의 對 韓半島戰略』 (1992), pp. 10-17 참조

주의권의 몰락으로 미국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 지금부터 미국은 국내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데올로기적인 性向은 전혀 다르지만, 일부 좌파 인사들이나 민주당 인사들도 세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 사회에서 고립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이유는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했는데도 미국 경제는 계속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미국사회에서 고립주의적인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정부와 학계의 主流는 아직도 국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미국은 냉전시대에도 그러했지만, 탈냉전시대에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정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며, 그것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相互依存的인 현대에 미국이 고립주의로 回歸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은 “미국이 개입하고자 하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갈등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행위자가 되기에 충분한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³⁴⁾

이같은 견해는 지난 3월초에 New York Times가 공개한 미국 국방성이 작성한 “防衛計劃指針(Defense Planning Guidance)”에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이 문건을 작성한 미국의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신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현재의 군사적 우위를 견지하면서 세계적인 리더쉽을 계속 행사하고, 일본이나 독일등 지역적 강대국들이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미국의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견지라는 낙관적 주장에 대하여 미국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그 후에 나온 修正指針에서는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였다. 즉, 세계구조

34)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America and the World, 1990/91,” p.24.

의 多元化와 미국 능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미국은 一方主義(Unilateralism)에서 多元主義(Multilateralism)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世界의 警察”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미국의 리더쉽은 걸프 전쟁 당시와 같이 세계의 安全과 繁榮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과 위험과 부담을 공유하는 가운데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이와같은 맥락에서 부시행정부의 베이커 국무장관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地政學的 均衡을 유지하고, 정직한 仲裁者로 활동하며, 不確實性에 대한 保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雙務的, 또는 多邊的 협의를 추구할 것이고, 책임과 부담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³⁶⁾

이처럼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 정책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견지하면서도 “利益과 費用”의 政治經濟學의 입장에서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共同責任, 共同負擔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신국제질서의 多元化, 自律化, 開放化와 미국의 쇠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주의와 고립주의간의 논쟁을 절충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의 세계전략의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무엇이고, 그와같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국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經濟的인 방법을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이른바 開放政策(Open door policy)과 機會均等を 요구하면서 아시아-태평양國家로서 미국의 이익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더구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이익을 제약할 수 있는 地域主義를 경계

35) 이와같은 미국의 입장은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ugust 1991) 참조

36)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 168.

하고, 아시아문제에 대한 미국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리더쉽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을 배제하는 지역경제 불력화를 반대하고, 地域的 霸權勢力의 등장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등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지역에서 均衡者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견지해 간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소련이나 중국, 일본등의 군사력 증강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억제하고, 소련의 붕괴로 확보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유럽에서와는 달리,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前進配置兵力의 급격한 철수나 감축에 반대하였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견지하려는 미국행정부의 입장은 미국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전략문제에 대한 보고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³⁷⁾

“2차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 개입은 이 지역이 중요한 세계적 성장의 中樞로 등장하게 한 주요 요인이었다. 지난해에 미국과 이 지역과의 쌍무적 무역은 3,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량보다 거의 1/3이나 더 많은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동유럽 전체에 대한 수출보다 많고, 미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량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보다 더 많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30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대략 160만의 미국내의 일자리가 미국과 이 지역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미국의 기업들은 620억 달러 이상을 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전진배치전략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뒷받침하였고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美軍의 존재는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주요한 地域的 均衡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하며,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미국은 탈냉전의 변화된 전략적 상황과 미국내의 국내적인 이유로

37)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 Report to Congress,” p. 3.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단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미국정부는 1990년도부터 『년-위너 수정안』에 따라서 아시아에 전진배치한 미군의 단계적인 감축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조정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감축계획에 의하여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중에서 제 1단계에는 약 7천명의 병력만을 감축하기로 하였고, 그것을 실천했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등장하면서 제 2 단계의 조정계획 실천을 보류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같은 미국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알 수 있다.³⁸⁾

이와같은 미국의 입장, 즉,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견지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인 재조정을 하려는 입장은 냉전의 종식과 미군의 급격한 철수로 초래될 수 있는 힘의 공백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안보이익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안보적인 역할은 미국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균형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여건이 악화되고, 고립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탈냉전시대에 아시아국가들이 점점 더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속에서 과연 현상유지를 견지하려는 미국정부의 기본정책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필리핀과 같은 지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국가에서 점증하고 있는 民族主義的 경향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점 더 미군의 주둔을 정치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고, 또한 미국내에서도 이른바 고립주의세력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조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國益차원에서 아시아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주의자들의 견해를 빌지 않더라도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과거와는 달리

38) 안병준, “東北亞秩序 再編의 趨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 (1992. 6), pp.169.

미국의 이익에서 불가결의 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의 과제는 한반도와 아시아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既得權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어떻게 이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른바 “責任의 分擔”이란 원칙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관련당사국들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미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安保費用의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방위비문제에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미국은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동맹국에 대한 施惠의 차원에서 동맹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할 의사와 역량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용하고, 이른바 세계경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⁴⁰⁾

이와같이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존의 동맹국들에게 탈냉전시대에 “同伴者的 關係”라는 차원에서 부담과 책임의 공유를 더욱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동맹국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과 부담은 그만큼 증가되지만, 그와 비례하여 자율권의 범위가 증대된다고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같은 自律權의 증대는 이미 한국의 북방정책의 추진이나, 또는 남북한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아시아와 세계문제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국의 아시아정책, 그리고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관련하

39)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Stephen W. Bosworth, “The United States and Asia,” *Foreign Affairs*, 71:1 (1992), pp. 113-129 참조

40) 金德重, “부시 行政府의 東아시아 정책: 美蘇關係의 視角,” 『美蘇研究』 제4집 (1990), pp.115-117 참조.

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⁴¹⁾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對아시아정책은 美-日 관계를 基本軸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기본정책은 冷戰시대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지난 1월 9일 부시 미국대통령과 미와자와 일본 首相이 동경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이후 발표한 『東京宣言』에서 재확인되었다. 『동경선언』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冷戰이후 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특별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아시아문제 뿐만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東京宣言』과 함께 발표된 『行動計劃』에서도 두 나라 지도자들은 서방선진 7개국 (이른바 G-7)의 정치적 역할 강화, 일본과 北大西洋條約機構의 정치적 대화 증진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일본-유럽공동체의 連帶強化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아시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美-日安保體制의 유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불가피하다”고 선언하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 일본은 미-일안보조약및 戰時支援協定에 입각하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비분담을 증액할 것등을 약속함으로써, 기존의 미일안보협력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와같이 미국은 아시아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문제에서도 일본과의 “同伴者的 關係”를 유지하려고 함으로써, 일본의 영향력은 冷戰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와같은 미국의 정책은 일본이 미국의 경쟁자로서 등장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부담을 강조하는 듯가만큼, 일본의 정치적 영

41) 美日關係의 긴밀성은 이노구치 타카시가 “일본에게는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자는 일본이 미국이라는 바구니에 너무 많은 달걀을 담고 있다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이노구치 타카시, op.cit., p.183. 동경과 워싱턴의 대외관계의 인식과 접근 방식에 대한 相異性에 대해서는 Yoichi Funabashi, “Japan and America : Global Partner,” *Foreign Policy*, no.86 (Spring 1992), pp.24-39.

향력 행사를 容認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탈냉전시대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특히,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이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한국의 自律權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탈냉전시대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본적 이해가 무엇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 이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에게 한반도는 냉전의 전초기지이었고,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反共의 堡壘”로서 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封鎖政策에 입각하여 강력한 반공정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미국은 이같은 봉쇄정책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재조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책임과 부담의 共有라는 원칙에 따라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안보-군사적 기여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북방정책이나 對북한 평화공존 정책을 지지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자율권의 범위가 한반도의 통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⁴²⁾

이와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의도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정부보다도 북한에 대하여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시대에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고리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입장을 견제하

42) Larry Nicksch, “Dealing with North Korea on the Nuclear Weapons Threshold,”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4:1 (Summer 1992), pp.67-83. 미국은 1991년 12월 남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했고, 또 1992년 2월로 예정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연기했다. 1992년 1월 미국은 유엔에서 북한과 최고위 외교적 접촉을 시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에 대한 과거의 조심스런 접근 방식 및 한국과 미국의 오랫동안의 예측할 수 있었던 패턴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고 있다.⁴³⁾

이와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對아시아정책이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등장을 과연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4대 강대국들은 모두 남북한의 평화공존에는 합의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세력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불확정시대의 일본 外交政策과 한반도 政策

1950년의 일본경제는 미국 경제 규모의 약 1/20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일본 경제규모는 미국의 총 경제규모의 절반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세계에서 생산되는 총생산품과 서비스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와 16%으로 되었으며, 일본은 동아시아경제의 2/3를 점유하고 있다.⁴⁴⁾ 이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어떤 부문에서는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의 해외원조기금은 미국의 그것을 앞서기 시작하였고,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에서도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호프만 (Stanley Hoffmann)교수의 표현을 빌린다면 “경제적인 巨人, 정치적인 난장이, 그리고 군사적인 미물(an economic giant, a political dwarf, and a military worm)”이라

43) 알렉산더 헤이그 前 美 국무장관은 서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의지를 분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나는 몇해전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대해 그랬듯이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라크 핵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한 이스라엘의 결정은 옳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2. 10. 6)

44) Stephan W. Bosworth, op. cit., pp. 118-119

는 기형적인 지위에 安住하고 있었다고 하겠다.⁴⁵⁾ 따라서 일본은 지금까지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 美-日安保同盟에 의존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본의 정책이 일본 内外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일본의 자율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요구가 점증함에 따라, 일본은 조심스럽게 기존 정책을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탈냉전시대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를 더 이상 견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摸索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1976년 이래 『防衛計劃의 大綱』의 기본 정책에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증강하였고, 이같은 계획을 소련의 위협이 사실상 제거된 탈냉전시대에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1990년도 일본의 防衛白書는 “소련의 최근 정세와 국제환경에 비추어 소련이 극동지역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타국에 대해 침략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탈냉전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힘의 空白”에 대한 위협성 때문에 일정한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90년 12월에 발표한 『1991년도 이후의 防衛計劃에 관한 基本構想』에서 일본은 신세계질서 형성기에 지역분쟁의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기존의 방위력 정비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탈냉전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방위비의 실질 증가율을 과거 5.4%에서 3.0%로 조정하였다. 이와같이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비 증액을 지속함으로써, 1991년도 현재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조응하여 기존의 소극적인 대외정책을 조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일본의 정치적

45) 호프만교수의 이같은 표현은 냉전시대 유럽을 지칭한 것이었지만, 일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Robert O. Koehane, “International Multiple Advocacy in US Foreign Policy,” p.20 참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경제 협력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일본은 천안문사건이후 일시적으로 불편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한국과 소련의 修交에 자극을 받아 電擊적으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회담을 추진하는가 하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원조 약속, 베트남에 대한 원조 再開등을 선언하였다.

이와같은 일본의 “성급한” 외교활동에 대하여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東京宣言』에서 발표한 것처럼, 美-日 安保條約을 기초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신국제질서의 형성을 주도해 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自律領域을 어느정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발언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이 전격적으로 북한과의 수교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이 다시 논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朝-日會談과정에서 제기된 일본의 의도와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이 對북한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와 목표에 대한 논쟁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 일본정부는 지난 1970년이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의 對話와 共存, 그리고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지지하여 왔다고 전제하고, 이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對南 강경노선으로 말미암아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와 냉전논리의 포기등으로 일본과 북한의 수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졌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對북한 수교에 임하는 의도와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

에서 일본과 북한의 수교는 일본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인 동시에 평화 공존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한의 장기적인 民族利益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⁴⁶⁾

둘째로,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두 개의 朝鮮政策”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 정향은 남북한의 대립과 경쟁의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보수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親韓國的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카드”를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한국의 北方政策, 특히, 한국과 소련의 전격적인 국교정상화 실현에 자극을 받아 한반도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탈냉전질서로의 이행과정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⁷⁾

셋째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는 전후 문제 처리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그 이상의 動因이나 목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일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현재와 같은 일본의 정치체제하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이 독자적인 구상이나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능력도, 의도도 없다고 주장한다.⁴⁸⁾

이와같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은 모두 어느 정도의 역사적, 현실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즉, 첫번째 주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 처럼 1970년대

46) 이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보수적 지식인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에선 학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小此木政夫, 『日本と北朝鮮:これからの5年』(PHP 研究所,1991) 참조

47) 이와같은 견해는 특히 한국측의 학자들과 언론들에 의하여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테면 윤정석,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정책,” 『외교』(1991년 12월), pp. 57-65 참조

48) 이와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吉昇欽, “最近의 日-北韓關係:推移와 展望,” 『政策研究』 제 97호 (1989년 4호), pp. 199-236; 黒田勝弘, “한반도는 일본이 좌우한다,” 『일본포럼』 11호 (1991년 겨울), pp. 34-44 참조

이후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일본의 안정과 평화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공존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본정부는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과 교차승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사실, 이같은 정책은 1975년 이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합의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두개의 조선정책이라고 비난하고 경계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공존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大變革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정책변화, 그리고 북한의 입장변화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의 실현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는 일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일본은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의문은 일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나 소련, 그리고 중국과 같은 외세들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이 4대 강대국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과거”에 대한 의혹이 강력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견제, 남북한의 分割을 지속시키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탈냉전시대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비판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49) 한국내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보수적 지식인들은 이같은 반일적 경향을 한국인의 “통속적 민족주의”의 반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田中明, “한국인의 ‘通俗민족주의’에 실망합니다,” 『新東亞』 (1990년 8월호) 참조.

이처럼 일본이 남북한의 대결과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한 反論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일본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식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거나 한국의 對日 민족주의에서 연유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인 구로다(黒田勝弘)는 “현재 일본인의 감각으로는… 한국, 혹은 조선이라는 존재가 일상적으로 일본인의 시야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현재, (통일한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려 해도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직한 이야기”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비로소 한반도에 대하여… 그 명운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 중국, 소련, 한국이라든…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한반도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때에, 일본만이 그런 자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⁵⁰⁾

이와같은 조금 다른 견지에서 일본이 과연 독자적인 한반도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 독자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하여 회의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견해도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사실 일본정치의 성격, 특히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중에는 일본외교의 특징을 “外交政策이 없는 日本外交”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이들은 일본의 복잡한 派閥政治構造, 일본의 역사적, 세계적 위상,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情緒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은 상당기간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외교정책없는 일본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⁵¹⁾ 이와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50) 黒田勝弘, 앞의 글, pp.40-42

51) 현인택, “일본의 파워 : 그 허상과 진실,” 『계간 사상』 (1991년 여름), pp. 184-218
참조; 서구 학자들 중에서도 21세기에 일본은 세계 제 1을 추구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제 2인자의 위치와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다. 이와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Kenneth Pyle, “Japan, the World and the

이 미국이나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한반도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國力이 신장함에 따라,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의 마찰이 확대되면서 일본 내부에서 일본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대외정책에서도 일본의 自主的이고 獨自的인 영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²⁾

이와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국방비 증가, 自衛隊의 해외파병,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일련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표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일본의 對한반도정책 그리고 일본의 對아시아 정책은 지금까지 미국과 소련, 중국등에 의하여 형성된 정치적 정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나 소련, 중국에 비하여 한반도와 아시아의 정치적 문제에 “副次的인 周邊 強大國”으로 취급되었고, 또한 일본 역시 그와같은 “low-risk, low profile” 정책을 통하여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소극적인 대외정책에 대하여 “無賃乘車論”등의 비난이 일어나고, 또한 일본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戰後 정치의 총결산”이란 시대적 인식이 등장하면서 일본내부에서도 “積極 外交論”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이와같은 일본의 적극외교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투명하지만, 첫째로,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둘째로, 미국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셋째로,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자주적인 역할을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할

Twenty-First Century,” Takashi Inoguchi and Daniel Okimot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 2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52)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石原愼太郎, 盛田昭夫, 『No と 言える 日本』 (光文社, 1989) 참조

53) 張達重, “日-北韓關係와 韓半島 安保環境,” 『國防學術論叢』 제1집 (1988년 7월), pp. 151-186 참조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대두하는 이른바 新國際秩序의 형성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수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對한반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다.

4. 탈냉전시대의 中國의 對外政策과 한반도 政策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과 개방, 문화개방을 표방하면서 역사적인 노선전환을 선언한 이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대외정책을 추구하였다. 즉, 중국은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당과 국가의 최고 과제로 설정하고 대담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西歐資本主義國家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1980년대에 “自主獨立外交”를 제창하면서 소련과의 관계개선도 모색하여, 1989년에는 모택동시대에 단절되었던 中蘇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같이 중국이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과 일본, 소련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모두 정상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강대국간의 복잡한 갈등관계에서 비롯되는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대결의 위험성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타협과 공존의 가능성이 제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벌어진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蘇聯邦의 해체로 중국은 이제 대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巨視的인 차원에서 중국은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國際戰略的 판도가 1989년 이후 미소의 反目과 경쟁이 끝나고 새로운 세력중심의 多極化 추세로 돌입했음을 인정하면서⁵⁴⁾ 새로운 형태는 국제분쟁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국가간 동맹관계, 主關心이 군사·정치적에서 경제관계와 경제실리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른 지역적 불력화가 대두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微視的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중국과 강대국간의 상황변화도 상정해

54) 이봉 총리의 全人代 7기 4차회의 폐막연설, 『文匯報』, 1991.4.10, *Beijing Review*, 1991. 4. 22-28 참조

볼 수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형성된 강대국간의 타협과 협력의 분위기는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훼손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특히 천안문사건 후 미국이 중국의 “人權과 民主化”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의 정치적 변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무역문제와 핵문제, 그리고 중국의 무기수출문제등을 거론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또한 고르바초프의 급진적인 개혁과 동구의 몰락, 그리고 소련방의 해체와 엘친정권의 등장 등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결코 환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공화국간에는 이념과 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분쟁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사회주의의 견지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간의 관계가 과거와 같은 이념과 체제의 문제로 다시 경직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편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內政干涉을 비난하고,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霸權主義를 경계하면서도, 중국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미국의 관심사인 중국의 인권문제, 핵확산문제와 무기수출 문제, 그리고 무역마찰 문제 등에 대해서 解明하기도 하고 부분적인 개선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은 걸프전쟁과정에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中立”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對이라크 응징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⁵⁵⁾

소련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고르바초프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엘친정권에 대해서는 더욱 不信하면서도 소련과의 관계를 해칠 수도 있는 감정적인 대응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적인 관계를 견지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최근에 들어와 중국은 탈냉전이후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牽制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도부가 對美蘇관계 인식에서 美蘇의 화해시대가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中蘇협력과 對美 대응이 아닌 美-

55) 걸프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Yitzhak Shichor, “China and the Gulf Crisis: Predicaments,” *Problems of Communism* (November-December 1991), pp. 80-90 참조

蘇와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국제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 3 세계 외교, 특히, 인접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테면, 중국은 1979년 이후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실현하였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ASEAN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가하면, 캄보디아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이란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한 해결책을 지지하였다.

즉, 중국은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기초가 되는 最高國民會議의 설립에 관한 국제연합 결의안에 합의, 협력함으로써, 캄보디아의 4개 정파간의 타협을 유도하였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지지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남한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중국의 입장은 1992년 韓-中修交로 한층 더 극명하게 표출되었다고 하겠다.

1992년의 韓-中수교는 1990년의 韓-蘇修交와 같이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1989년의 동구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 1991년 소련방 해체등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탈냉전의 時代的 潮流를 감안할 때, 韓-中修交의 실현은 시간문제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88년 이후 해마다 격증하는 韓-中交易만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한-중수교가 遲滯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겠다.⁵⁶⁾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한-중수교는 최소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실현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여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중국은 政經分離의 원칙하에서 한국과의 경제교류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

56)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韓中修交 논평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국무부의 공식논평을 통해 韓中 수교를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촉진되길 희망했는데,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韓中수교가 이미 시간문제로 여겨졌을 정도로 양국관계가 전 반에 걸쳐 거의 정상적인 위치에 까지 도달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무부 논평은 경향신문, 1992.8.28 참조

으로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韓中の 物的 및 人的 교류현황은 아래의 표-4, 표-5와 같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한국과의 國交樹立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고립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며, 중국과 血盟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에 대한 信義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韓-中關係의 조기 타결을 모색하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해 왔다.

<표-4>

韓中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 연 도 | 1989 | 1990 | 1991 | '92.1-4(전년 同期대비) |
|-----|------|------|-------|------------------|
| 수 출 | 14.4 | 15.5 | 23.7 | 10.9(80.1% 증가) |
| 수 입 | 17.0 | 22.7 | 34.0 | 12.9(43.8% 증가) |
| 계 | 31.4 | 38.2 | 57.7 | 23.8(58.5% 증가) |
| 收 支 | -2.6 | -7.2 | -10.3 | - 2.0 |

자료 : 『외교문제 해설』 (외무부, 1992.8.26)

* 주요 수출품 : 전자, 섬유, 철강, 화공제품 등

* 주요 수입품 : 섬유, 연료, 곡물, 화공품, 철강재 등

<표-5>

韓中 人的 교류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1988 | 1989 | 1990 | 1991('90對比 증가율) |
|--------|-------|--------|--------|-----------------|
| 한국인 訪中 | 5,750 | 13,620 | 31,934 | 43,177 (35.2%) |
| 중국인 訪韓 | 3,610 | 9,340 | 25,215 | 44,188 (75.2%) |
| 계 | 9,360 | 22,960 | 57,149 | 87,365 (52.9%) |

자료 : 『외교문제 해설』 (외무부, 1992.8.26)

그러면 왜 중국은 이 시점에 韓-中修交에 合意하였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 된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정치적 요인과 대외 정책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國內政治的인 차원에서 볼 때, 한-중수교는 중국의 지도부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보수파와 개혁파의 政策論爭에서 개혁파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對外政策的인 측면에서 한-중수교는 중국이 탈냉전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세력관계에⁵⁷⁾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예를들면 동북아안정을 위해 일본의⁵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국내신문에서도 보도되었지만, 1992년 10월말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4차 당대회를 전후로 하여 체제와 이념의 문제보다 實利와 國益을 앞세우는 개혁파가 得勢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도 한-중수교의 조기 타결을 모색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탈냉전시대에 동북아에서 대두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한-중수교를 유예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실, 중국의 개혁파들에게 한국은 이미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경제적인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⁵⁹⁾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통적인 의리 때문에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유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것이 곧 북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한-중수교 직후, 중국 외무부 대변인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

57) 동북아의 신질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본 논문 3장 1절과 Si Chu, *Beijing Review*, 1991. 3. 4-10, pp.10-12. 참조

58) 일본은 일본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안보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일본의 국방비가 1985년 131억 5100만 달러에서 1989년 158억 4300만 달러, 그리고 1991년에는 164억 6400만 달러로 증가하는데서 알 수 있다. (The Interan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1991-1992, 1992-1993)

59)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한국을 전통적인 적대국에서 1980년 이후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인식하고 관계 개선한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말 교역량이 30억 \$로서 중국무역의 3%에 지나지 않지만 이는 北韓-中 무역의 5배에 달한다는 사실과,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서방보다 싼 값에 선진 기술도입을 할 수 있는 상대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Gerald Segal, “The Challenge to Chinese Foreign Policy”, *Asian Affairs*, Vol. 21, Part 3(Oct. 1990), pp.304-305.)

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支持 입장에서 탈피하여 ⁶⁰⁾ 중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한에 대하여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⁶¹⁾

다시 말하면 중국은 남북한 양측이 모두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남한에게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實利를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게도 설득을 펴 UN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에서 공격적 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경제적 관계도 지속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북한에게 “북한은 우리와 강한 결속을 가지고 있지만 동맹은 아니다”는 ⁶²⁾ 사실을 인식시켜 韓中관계 개선과 修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驅使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해 과거와 다른 상당히 柔軟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특유의 “단계적 외교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외교의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부부터 개혁하고 위를 개혁하는 “단계적 변화”의 ⁶³⁾ 방법을 택한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정책의 실행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점이다.

예를들면 소련은 政治改革을 먼저 실시하고 뒤에 경제개혁을 하며, 방법도 위 먼저, 그리고 아래 나중의 형식을 띠지만, 중국은 반대다. 즉 중국은 경제개혁(특히 농업)을 먼저하고, 정치개혁을 하는데 방법도 아래서부터 위로 한다. 즉 중국의 개혁에서 가장 보수적인 농민이 경제개혁의 추동력이었다. 그러므로 해서 중국은 탈구현상을 최소화하고, 인민의 경제적 고통도 가장 적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中國政治의 특징적 局面이고 그것이 최근의 對한반도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李鵬의 訪北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南北韓의 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남북관계의 고착을 남한에 전가하던 북한의 입장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 (이봉의 북한 방문의 좀더 자세한 내용은 *Beijing Review*, 1991.5.20-26, pp.7-8. 참조)

61) 그와 같은 사실은 중국이 한국-중국-북한의 두만강개발계획과 산동-하남-북한-한국을 잇는 황하유역 협력 구상, 일본해협력 구상, 그리고 남지나해 지역 협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가 있다.(Alfred D. Wilhelm, Jr., “Sino-Korean Relations: The Year Ahead”,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4/1(Summer 1992), p.96.)

62) *FBIS-CHI*, Oct.,15,1991, p.16.

63) Ma Zongshi, “Partners i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Feb. 1992), p.2.

5. 러시아 공화국의 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정책

舊蘇聯의 고르바초프는 『新思考』를 표방하면서 미-소관계의 혁명적인 전환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東歐에 대한 소련의 정책변화를 통하여 유럽에서 냉전질서의 종식을 구현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에서도 기존의 군사-안보적 대결을 해소하고, 아시아지역에서도 긴장완화와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아시아정책을 모색하였다.

즉 고르바초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소련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위협인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지역분쟁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아프카니스탄에서 소련군의 철수, 중-소국경 지대에 배치되었던 소련군의 감축, 그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의 중단등을 실천함으로써, 1989년에 중-소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고, 일본과 ASEAN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같이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는 아시아에서 냉전적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켰던 『소련의 위협』이란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실현하고, 이 지역에서 소련의 정치적, 경제적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쉰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형식의 쉰아시아안보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기도 하였고, 또한 아세안국가들이 제창한 “平和, 自由, 中立地帶案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이나 “동남아시아 非核地帶案”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련은 일방적으로 극동군의 감축을 선언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등이 이같은 소련의 조치에 상응하는 군비축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적극적인 新아시아정책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최근까지도 소련의 의도를 不信하였다. 즉 소련이 군사적인 수단으로 달성하지 못한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증대라는 목표를 정치적인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평화공세』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 지도자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의 군사력은 數量的인 측면에서

만 다소 감소되었고, 質的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전진배치병력이나 일본의 방위력 증강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북방 4개 島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적극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질서를 변경시키는데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⁶⁴⁾

이와같은 상황에서 소련은 1990년에 극적으로 한국과의 국교수립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질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1960년대이후 韓-美防衛條約과 미-일 안보조약, 그리고 1965년의 韓日조약으로 체계화된 한국-미국-일본의 남북 3각관계와 1961년에 북한과 소련, 북한과 중국사이에 체결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으로 구체화된 북한-소련-중국의 북방 3각관계의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소련과 한국의 國交正常化는 北方 3角關係의 瓦解, 또는 變質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북한의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는 한-소수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직후에 간행된 다음과 같은 <로동신문> 사설에서도 엿 볼 수 있다.

“..... 지금의 소련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견지하던 그 전날의 소련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성격의 국가로 변질된 것만큼 그에 상응하게 '새로운 벗'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주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을 둘러싼 미국, 소련, 남조선의 3각결탁관계의 형성을 의미하게 되며 '평화적 이행'전략에 따라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를 와해하기 위한 포위망 형성의 일환으로 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북한의 감정적인 반발과 충격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소련은 북한의 입장을 일관하여 지지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9년말 소련의 외상 세바르드나제가 북한을 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소련과 북한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에 대한

64) 渡邊昭夫,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신질서의 모색,” 『中蘇研究』 15:2 (1991 여름), pp. 67-88 참조

소련의 지속적인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다짐한 지 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한-소 수교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이란 말 이외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소련의 對한반도 정책의 혁명적인 변화는 북한에게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에게도 소련의 정책변화는 기존의 對한반도 정책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韓-蘇修交의 충격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회담에 전격 합의하게 하였고,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중국의 정경분리정책을 재검토하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소련을 더 이상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적대국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최근의 백악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여년 동안 미국의 주요 봉쇄 전략은 소련의 팽창주의적 힘, 소련의 공격성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의 시대를 반영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소련이 국내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훨씬 내부 지향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련이 어떤 진로를 택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난 40여년 이상 우리가 직면해 왔던 동일한 초강대국의 적대 관계는 있을 것 같지 않다”⁶⁵⁾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최근의 舊蘇聯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미국은 冷戰時代에 존재했던 적대국으로서의 蘇聯이 아닌 새로운 세력(비록 아직은 그 實體를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소련은 韓-蘇修交를 통하여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개편하는데 적극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과 북방정책을 추구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韓-蘇修交이후 짧은 시간안에 두 나라의 관계가 급진전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소련의 밀월관계는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1990년 6월에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간의 국교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1990년 9월 30일 UN총회에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과 한국의 최호중 외무장관이 한소수교를 공식 발표한 이후,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하여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6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ugust 1991, p.1.

이른바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고, 1991년 4월에는 고르바초프가 일본을 방문한 뒤 歸路에 제주도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간의 선린협력관계를 논의하였다.

이와같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국과 소련은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에 합의하였고,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 UN 동시가입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소련에 대하여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며, 사할린에서의 천연가스개발 등 주요 경제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약속하였고, 반면에 소련은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 UN 동시가입안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한국과 소련은 1990년 12월에 발표된 『모스크바선언』에서 主權尊重과 相互協力과 같은 일반원칙을 확인한데 뒤이어, 1991년 4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한국과 소련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소련간의 “善隣協力條約”을 체결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같은 소련의 제안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한국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같은 소련의 적극적인 對韓國接近政策은 엘친의 러시아 공화국정부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다. 소련방의 해체이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당분간 국내정치에 몰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엘친정권이 새로운 對아시아정책이나 한반도정책을 모색할 수 없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政策基調에 대하여 엘친의 러시아 공화국정부도 별로 異見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즉 엘친정부의 對한반도 정책도 고르바초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實利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⁶⁶⁾ 이와같은 엘친정권의 對한반도정책은 한편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정치관계의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韓-蘇修交로 이완된 북

66) 이와같은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객관적 조건으로 소련의 풍부한 자원과 중국, 북한의 노동력을 미국, 일본, 한국의 자본과 기술협력을, 그리고 주관적 요인으로 6개국 모두 한반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된 노력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도 알 수 있다.(Rafik Aliyev, “Emerging Economic Pole in the Northeast Asia and Response of the Soviet Union : Economical and Political Aspect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3, No.1 (Spring 1992), pp.4-7.)

한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朝－蘇條約”의 기본 골격을 견지하려는 2중적인 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엘친정권이 등장하면서 러시아정부는 한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러시아정부의 태도는 엘친의 한국방문 결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1992년 11월 18에서 20일까지 엘친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정부는 각종 경제협력방안에 합의하였고, KAL기사건에 대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블랙박스의 讓渡 등을 통하여 韓－蘇友好關係 증진에 대한 러시아의 성의를 표시하면서 한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同伴者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와같은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는 엘친의 訪韓중에 서명 발효된 한국과 러시아의 기본관계에 대한 의정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同의정서 전문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역사상 양국간 불행했던 시기의 잔재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며, 양국간의 미래관계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및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2조에서 양국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간의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는데, 이 조항은 1961년에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朝－蘇條約』 가운데 自動武力介入을 규정한 동 조약 제 1조의 關閉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정부의 미묘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1961년에 체결된 朝－蘇조약 제 1조는 “조약체결 당사국 중 일방이 어떤 국가나 국가연합으로 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체약당사국 상대방은 자신의 재량하의 모든 수단을 동원, 즉각 군사력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朝－蘇條約”이 두말 할 나위도 없이 한국과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한 북한과 구소련의 군사동맹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韓－蘇修交이후 한국정부와 구소련정부 내부에서는 “朝－蘇條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1992년 1월 17-21일간 평양을 방문한 舊蘇聯 외무차관 로가초프는 모스크바로 귀환한 뒤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소련－북한간에 체결된 『우호 협력 및 상

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舊蘇聯에 의하여 체결되었지만 동 조약을 러시아가 승계한다고 공표하면서도 전쟁 발발시 러시아의 자동개입을 규정한 군사조항 (제1조)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엘친 대통령도 지난 6월 30일 이상옥 한국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조-소조약이 유명무실해 졌다고 언급함으로써 동 조약의 개정이나 폐기를 강하게 시사하였다.⁶⁷⁾

따라서 한국정부도 러시아정부에 대하여 『朝-蘇條約』의 폐기나 일부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1992년 7월 28일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측의 『朝-蘇條約』 수정 요구는 부당한 內政干涉이라고 비난하였고, 8월 12일의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1961년에 체결한 조약 제1조4항에 상응하게 러시아가 이 나라의 안전을 담보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위 조항의 폐기에 관한 러시아의 종전 입장을 번복하였다.⁶⁸⁾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러시아정부는 한국과 러시아의 기본관계에 관한 의정서 제 2조에서 실질적으로 朝-蘇條約 제1조를 무효화시키는 조항에 합의하면서도 朝-蘇條約의 개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과 북한과 동시에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二重的 態度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러시아의 2중적 태도는 최근 보수와 급진의 兩視角이 混在되어 있는 러시아 정부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도 있고, 또한 엘친정부가 軍部保守勢力을 의식, 북한과 일정수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反證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최근 러시아의 세력분포는 아래의 표-6, 표-7과 같다)

특히 1992년 1월 가격자유화 조치 이후 불만세력들이 反엘친 連帶를 형성하여 엘친의 가격자유화와 경제개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1992.7.4 보수파는 제29차 소련공산당대회(CPSU) 대표회의를 개최(7개공화국의 12개공산당에서 약 100명 참가)하여 反엘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온건개혁파인 『市民同盟』이 러시아공화국의 특수성과 국가의 조정, 통제기능을 강조하면서, 광대한 영토와 多民族 社會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경제개혁은 안정화 달성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

67) 『월간 북한동향』 1992년 8월호 (통일원), pp. 92-93

68) 『월간북한동향』 1992년 8월호 (통일원), p.71

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엘친의 政策的 自律性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의 二重的 태도의 또 다른 배경으로 러시아가 國內實情이 불안정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南北韓間의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러시아의 實利的 國益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러시아는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朝－蘇條約>의 폐기나 개정을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⁶⁹⁾

<표-6>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내의 諸政派 분포

| 개 혁 파 | 중 도 파 | 보 수 파 | 기 타 |
|-------|-------|-------|------|
| 10 % | 45 % | 25 % | 20 % |

자료 : 朝日新聞, 1992.9.19(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자료를 인용 보도), 북방경제, 제1권 8호, 1992.10, p.13. 재인용

엘친정부의 세력판도로서 <표-7>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1992.9.22에 시작된 제5차 최고회의에서 보수파의 개혁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급진개혁의 지지파 중에서 상당수가 중도파로 전환함으로써 엘친의 입장은 이들에게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사실은 최근 엘친이 포고령(1992.7)을 통해 실질적인 통치권을 보유토록하는 憲法草案, 대통령이 최고회의 동의없이 각료임명권을 갖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금년(1992)末로 끝나는 비상대권 등의 제정과 연기를 주장하는 시기에 (엘친은 비상대권의 연기를 위해 1992.12에 예정된 제2차 인민대표대회 소집을 1993.3로 연기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부결당함) 이들간의 세력분포의 변화는 엘친에게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와 舊蘇聯에 소속했던 독립국가 가맹공화국들은 韓－蘇修交 이후 불편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북한도 또한 탈냉전시대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舊蘇聯 공화국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69)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서 나타나는 2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안태원, 『남북관계의 진전과 러시아－북한관계 : 남북관계의 진전과 안보환경 세미나 결과 보고서』(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2), pp. 42-43 참고

<표-7>

“최고회의” 내 諸政派別 의석비율

| 政派名 | 경향 및 기반 | 대의원수 (석) | 4월 인민대표 대 회 당시의 성향 | 현 재 (석) |
|----------|---------------|-------------|--|--------------|
| 민주러시아 | 개혁파 조직 | 67 | 정부지지 개혁파 (307석) 중도파 (202석) | 개혁파 : 108 |
| 급진 민주주의자 | 시장경제이행지지파 | 41 | | |
| 시민사회 | 반관료주의 급진파 | 50 | | |
| 좌파중앙 | 자유·민주주의지향중간파 | 52 | | |
| 무소속 | 반 ‘구공산당’계 대의원 | 39 | | |
| 자유러시아 | 자유러시아인민당 | 58 | | 중도파 : 401 |
| 신세대 | 젊은 중간파대의원 | 40 | | |
| 주권과평등 | 지방선거 출신 대의원 | 50 | | |
| 노동동맹 | 노 조 | 41 | | |
| 사업동맹 | 국영, 군수산업 | 71 | | |
| 농업동맹 | 집단, 국영농장 | 148 | 보수파 (301석) | 보수파 : 301 |
| 러시아 | 구공산당의 민족주의파 | 46 | | |
| 공산주의자 | 구공산당계 | 55 | | |
| 러시아 조 국 | 군인, 애국파 | 52 | | |

* 대의원數는 他系派의 중복참가자를 포함

자료 : <표-6>과 동일

1992년 중순까지 북한은 독립국가연합 가맹 공화국과 모두 국교를 수립하였고,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에도 각종 경제,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독립국가연합 통합군과의 관계는 아직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가 불편한 지난 1991년도에도 소련과 북한의 군사대표단의 상호교환 방문을 통하여 쌍방간의 전통적인 군사동맹관계를 확인하였고, 소련군이

독립국가연합 統合軍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이같은 군사사절단의 방문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엘친정권이 비록 북한에 대하여 공격적인 첨단무기와 핵기술의 제공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카드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IV. 脫冷戰時代의 韓國의 對應戰略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脫冷戰時代는 우리에게 機會와 危險을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한편으로 社會主義圈의 大變革과 탈냉전시대의 到來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추구해 왔던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4대 강대국에 의한 南北韓 정부의 交叉承認을 통한 남북한의 平和共存을 실현하고 남북한 당사국의 대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미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실현되었고, 한국과 소련,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國交正常化가 현실화되었으며,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도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4대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의 실현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하겠다.

특히, 체제와 이념의 문제보다 經濟的 實利를 중시하는 탈냉전시대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한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문제를 主體的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平和共存과 平和統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고 하겠다.

그러나 冷戰構圖에서 형성되었던 국가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편되고 있는 탈냉전시대는 북한에게만 시련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韓-蘇修交와 韓-中修交 등으로 기존의 北方 3角關係가 와해되는 탈냉전시대의 충격을 받고 있고, 한국도 앞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같은 변화에 대한 적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탈냉전시대에 변화하는 미국과 일본 등 기존 동맹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가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질서의 終熄과 탈냉전시대에서의 移行期에 한국은 北方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韓-蘇관계와 韓-中關係를 정상화하고, 남북한의 대화를 활성화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미국 및 일본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어

떻게 再調律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도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死活的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또한 한반도에서 平和와 安定, 그리고 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은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탈냉전시대의 우리의 과제는 북방정책을 견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세계정세속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同伴者的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對應戰略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基本軸으로 하면서도 소련과 중국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合意와 자신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의 조화를 모색하고, 셋째로 한반도에서 軍事的 긴장을 해소하고 平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끝으로 平和共存에서 平和統一에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적, 국내적 조건을 창출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두가지 目標：安保와 統一

분단국가인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적 목표로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경제발전, 그리고 안보와 통일 등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도 안보와 통일의 조화는 우리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흔히 안보와 통일은 마치 충돌되는 목표인것 처럼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현존 체제의 안전보장을 강조하는 안보정책과 남북한의 異質的인 두 體制의 統合을 지향하는 통일정책은 일견 논리적으로 서로 충돌되는 것 처럼 보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과거에 우리는 지나치게 안보를 강조하면서 통일은 물론이거니와 民主化와 같이 우리체제가 실현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를 무시하거나, 또는 현존체제의 守護와 발전만을 강조하는 『先建設, 後統一論』을 주장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反統一的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안보와 통일을 對稱的으로 인식하거나 安保至上主義를 강조하던

냉전시대의 논리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것은 국내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으로는 탈냉전시대의 多元化, 自律化, 開放化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같은 안보지상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우리 체제의 역량이 증가되었고, 우리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일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도 없고, 안보와 통일을 대립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체제의 안보와 통일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째, 과거 40여년간에 걸쳐 남북한 사이에 전개되었던 체제경쟁에서 韓國의 勝利는 거의 확실하게 立證되었고, 북한체제의 취약성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와 수호에 급급할 수 밖에 없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⁷⁰⁾

둘째,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탈냉전시대가 전개되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했던 강대국간의 적대적인 관계도 청산되었고, 『한반도문제의 韓半島化』가 실현되고 있으며, 또한 남북한의 自律性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協商과 合意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첫째, 지나치게 우리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과 북한체제의 脆弱性에 대한 過大評價에 근거하여, 吸收統一論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북한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우세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南北對話에 의한 남북한의 평화공존체제의 확보와 평화적 통일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70)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가 『最近의 南北關係와 統一韓國의 摸索』이란 題下에 1992년 11월 26-28에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필자의 논문, “탈냉전시대와 북한의 통일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흡수통일론적 思考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체제의 붕괴가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이 東獨에서 처럼 平和革命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은 그 어느 사회보다도 軍事化, 組織化되어 있는 社會라는 점이고, 따라서 북한체제의 붕괴는 조용한 평화혁명을 통하여 실현되기 보다는 오히려 대단히 暴力的이고 爆發的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吸收統一의 方式은 자칫 잘못하면 독일보다도 더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漸進的이고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흡수통일론과 같은 조급한 통일론과 더불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탈냉전과 통일여건의 好轉이란 상황에서 더 이상 안보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樂觀的인 견해이다. 앞에서도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안보환경은 대단히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다른 부문에서는 우리의 우세가 확연히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도 과거보다 훨씬 더 감소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¹⁾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주의권의 大激變과 北方政策의 성공으로 과거와 같이 중국과 소련의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安保環境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탈냉전시대의 전개와 소련의 위협의 소멸로 말미암아 安保費用, 특히 국방비용에 대한 전면적인 再調整이 필요하다는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같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보비용의

71)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균형상태에 도달했거나, 또는 조만간 군사적 균형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와 관련해서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참조

일부를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轉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보역량을 유지하려면, 탈냉전시대에 오히려 안보비용을 더 지불할 수 밖에 없는 逆說的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탈냉전시대와 남한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안보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민들에게 통일의 前段階에서 안보는 결코 경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겠다. 특히, 남북한간의 침예한 군사적 대결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탈냉전시대의 不確實性은 안보문제에 대하여 경시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안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北方政策과 南方政策의 再檢討

북방정책의 功過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방정책의 결과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과의 國交正常化를 실현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활동범위를 명실공히 汎世界的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분단과 냉전이란 조건에서 우리의 활동범위는 반쪽의 세계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것도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과의 관계에 의존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정책이나 안보, 그리고 경제관계도 미국 일변도에 치우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死活的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인 것 만은 아직도 사실이지만,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이제 우리의 活動領域은 全世界에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소련과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북한의 동맹세력과 國交를 正常化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동시 가입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던 4대 강대국의 남북한 交叉承認에 입각한 남북한의 平和共存體制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4대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란 방식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분단의 固着化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중국이나 소련도 이와같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실현되었고, 또한 4대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도 거의 그 실현을 目前에 두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북방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폐쇄적인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하겠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정부의 북방정책이 북한 孤立化 정책이라고 매도하면서 북방정책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을 견지하였다. 사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방정책은 북한의 동맹국들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立地를 위협하고 북한을 고립화하는 효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기존 동맹국들의 『배신』에 대하여 분개하고 항의할 수 있어도 그것을 지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陣營論的 對外觀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북방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남북한간의 협상과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의 북방정책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와같은 성공은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 댓가도 없이 얻어진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社會主義圈의 大變革과 냉전의 종식이란 역사적인 상황이 북방정책의 성공을 담보했다는 점은 두말 할 나위도 없으며, 또한 소

련에 대한 30억불 차관에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經濟力이 북방정책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우리의 활동범위는 全世界로 확대되었고, 우리의 안보환경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남한의 주도하에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北方政策에 대한 성공에 지나치게 만족한 나머지 우리의 南方政策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사실 政治-安보的인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상당기간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依存度는 아직도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소련이나 중국과의 교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것은 우리 경제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들 선진산업국가들과의 경제관계는 우리 경제의 발전에 決定的인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소련이나 중국과의 交易이 아무리 증대된다고 해도, 상당기간 이들 북방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대치해 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미국과 일본 등 남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특히 남북한간의 對話와 協商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排除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核問題와 남북대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미국-일본의 협력만이 확실한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이들 3개국들의 북한에 대한 共同認識과 공동 對應을 할 때에만 남북한 관계의 進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북방정책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일본과의 남방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탈냉전시대에 한국-미국-일본의 협력과 합의는 과거처럼 쉽게 얻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겠다. 국가간의 개별적인 利益의 差別性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탈냉전시대에 아시아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의 공동인식과 공동대응을 모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의 調和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3. 아시아 集團安保體制의 構想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고르바초프가 新아시아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와 같이 집단안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을 때, 미국과 일본 등은 이를 소련의 정치적 공세로 인식하고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사실 고르바초프의 提案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에서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아시아의 안보문제는 대체로 雙務的인 관계에 입각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유럽에서와 같은 集團安保體制의 構想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안보문제에 대한 多者間의 협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에는 미국의 입장도 다자간 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集團的 安保 協議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다자간의 안보협회는 캄보디아문제에서 보여지듯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매개로 하여 間歇的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制限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4대 강대국간의 근본적인 적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군사-안보문제보다는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조심스럽게 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같은 집단안보체제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소련이나 중국이 주도하는

것 보다 남북한과 같이 현실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고, 또한 지역적 勢力均衡의 기초를 위협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對決構造의 變更이 긴요하다는 점은 異論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의 相互不信은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討議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오히려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적 대결과 軍備競爭을 중지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정착이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은 모두 조심스럽게 軍縮問題를 제기하였고, 실질적인 군비경쟁을 止揚하기 위한 相互信賴構築의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집단안보협의체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상황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方案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에 대한 4대 강대국들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사실 이 지역에서 美軍의 역할과 기능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地域的 均衡者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집단안보구상과 미군의 존재는 별로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오히려 미국은 이와같은 집단안보체제를 통하여 그야말로 『地域的 均衡者, 정직한 브러커』의 역할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궁극적으로 탈냉전시대의 安保協議體를 수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남북한과 4대 강대국들이 참여하여,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아시아 集團安保協議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4. 平和的 統一을 위한 條件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平和共存과 平和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국제적 조건은 상당히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대 강대국들은 모두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남북한의 協商과 合意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4대 강대국들은 모두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이해관계의 差別性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강력한 統一韓國의 등장으로 지역적 勢力均衡이 깨어질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4대 강대국들은 모두 남북한의 평화공존에는 찬성하고 있으면서도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북한이 주장한 것 처럼 남북한의 분단 固着化를 초래하지 않고 평화적 統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韓半島 문제의 韓半島化』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主導的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内外에 확인시켜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韓國化』를 주도하면서 4대 강대국에 대한 설득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즉, 통일한국이 이들 4대 강대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종 地域經濟協議體에⁷²⁾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地域安保協議體를 통하여 군사적, 안보적 차원에서도 統一韓國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치 統一獨逸이 유럽의 一員이란 점을 강조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다른 강대국들의 경계심과 거부감을 해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4대 강대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통일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통일은 남북한의 문제란 점에서 북한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交流를 확대하면서 북한으로 하

72) 예를들면 최근에 UNDP가 東北亞 地域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開發計劃 등을 들 수 있다.

여금 平和共存을 통한 漸進的인 평화통일의 길만이 북한체제의 파괴적 붕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北韓統一問題 學術研究論文集

1992年 12月 日 印刷

1992年 12月 日 發行

發行 統一院 情報分析室

印刷 文成印刷株式會社